

GOVP 12007801

630.951
L2930

최 종
연구보고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A Survey on The Woman Farmer

1999. 9.

연구기관
한일경제사업연구원

하 림 부



제 출 문

농림부장관 귀하

우리 연구원은 귀 부와의 1999. 5. 20일자 용역계약에 의거, 본 문건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99. 9.

한얼경제사업연구원
대 표 전 병 제

참 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만 철 응	연구위원
연구원	강 문 성	책임연구원
	신 봉 근	책임연구원
	황 재 수	선임연구원
	노 형 준	연구원
연구지원	박 우 섭	연구위원

본 과업의 수행에는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여성복지추진팀 및 전국300여 회원조합 여성복지담당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의 도움이 컸습니다. 도움을 주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 례

요 약	5
I. 연구과업 개요	25
1. 연구과업의 목적과 배경 / 27	
가. 연구과업의 목적 / 27	
나. 연구과업의 배경 / 28	
2. 연구과업의 범위 / 33	
3. 연구과업의 수행기간 / 33	
4. 연구과업의 기본수행방법 / 33	
5. 연구과업의 내용구조 및 수행체계 / 34	
II. 농업·농촌의 미래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35
1. 농업·농촌의 현실과 미래 / 37	
가. 농업·농촌의 변화와 21세기적 의미 / 37	
나.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의 변화 / 49	
다. 농가소득·농가부채 / 55	
라. 생활환경 / 56	
마. 농촌가족구성원의 지위와 역할 / 59	
바. 농업·농촌의 과제와 대책방향 / 61	
2. 농업·농촌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의의와 위상 / 65	
가. 여성농업인의 정의와 분류 / 65	
나. 전통적 농업·농촌에 있어서의 여성농업인의 위치 / 66	
다. 미래 농업·농촌에 있어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 / 66	
3. 여성농업인 노동가치의 실현 / 67	
가. 여성농업인의 노동형태 / 67	
나.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 68	

- 4. 가족농과 여성농업인 / 69
 - 가. 가족농의 개념 및 의의 / 69
 - 나.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 정책방향”의 검토 / 70
 - 다. 가족농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 72
- 5. 사회·경제·정치 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 73
- 6. 21세기 농업·농촌에 있어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 / 75

III. 전국여성농업인 실태조사 77

- 1. 조사개요 / 79
 - 가. 조사목적 / 79
 - 나. 표본선정 / 79
 - 다. 조사방법 / 80
 - 라. 설문설계 및 설문조사 수행일정 / 80
 - 마. 설문지 분석방법 / 81
 - 바. 분석결과 인용의 한계 / 81
 - 사. (회수설문지) 응답자 일반사항 / 81
- 2. 농촌 생활실태 / 84
 - 가. 농촌거주 이유 / 84
 - 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 86
 - 다. 여성농업인의 정체성 / 90
 - 라. 가사노동 실태 / 94
 - 마. 주거환경 실태 / 96
- 3. 경제생활 실태 / 99
 - 가. 농가의 일반적인 재산상태 / 99
 - 나. 여성농업인의 재산상태 / 101
 - 다. 경제활동에서의 의사결정 / 106
- 4. 농업노동 실태 / 108
 - 가. 농업노동 실태 / 108
 - 나. 농업노동의 애로부문 / 112
 - 다. 이농에 대한 견해 / 114
 - 라. 타부문 취업에 대한 견해 / 116

- 5. 보건·복지·교육부문 실태 및 요구 / 119
 - 가. 여성농업인의 질병과 치료 / 119
 - 나. 보육시설현황 및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 / 124
 - 다. 교육실태 및 요구 / 127
- 6. 지역활동·남녀평등에 대한 의견 / 130
 - 가. 지역사회 활동실태 / 130
 - 나.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 134
 - 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소득·재산의 남녀 분배 문제 / 139
- 7.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판단조사 / 143
 - 가. 농촌의 미래에 대한 전망 / 143
 - 나. 농업·농촌에 대한 장단점 판단 / 145
 - 다. 정책적인 요구분야 / 146
 - 라. 농업인 후계자 제도에 대한 의견 / 150
- 8. 기타 부문 / 155
 - 가. 컴퓨터 활용상태 / 155
 - 나. 금융기관 및 농·축협에 대한 인식 / 158
- 9. 실태조사 결과의 부문별 시사점 분석 / 160
 - 가. 농촌생활 부문 / 160
 - 나. 경제생활 부문 / 161
 - 다. 농업노동의 실태 / 162
 - 라. 보건·복지부문 / 163
 - 마. 교육실태 및 요구 부문 / 164
 - 바. 지역사회 활동 및 남녀평등 의식 부문 / 165
 - 사.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판단 부문 / 166

Ⅳ. 여성농업인 관련 기구 및 정책 169

- 1.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 171
- 2.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 / 172
 - 가. 농업·농촌기본법 / 172
 - 나. 농업관련 행정망 및 여성농업인 관련 조직체계 / 173
 - 다.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제도 / 177

3.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의 검토 / 178

가.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 178

나. 여성농업인을 위한 추진사업 현황 / 179

다. 여성농업인 정책부문의 기존 문제점 / 179

라. 개선 정책방안 / 180

마. 정책방안의 단계별 추진계획 / 182

바.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의 평가 / 183

4. 민간부문 여성농업인 지원체계 / 184

가. 여성농업인단체 / 184

나. 교육기관·전문기관 / 190

5. 농업·농촌 투융자제도 / 197

가. 농업·농촌 투융자제도의 지원방향 / 197

나. 농업·농촌 투융자제도의 개선방안 / 198

다. 농업·농촌 투융자 규모(1999 ~ 2004) 및 지원항목 /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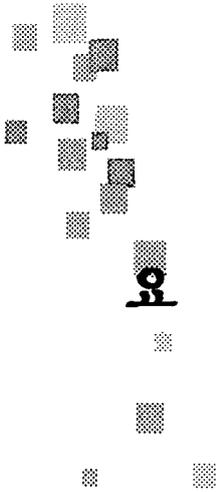
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농촌 투융자제도의 지원방향 / 201

V. 결론 및 건의 203

1. 요약 및 결론 / 205

2. 정책건의 / 209

□ 부록 : 실태조사 설문지 211



의

의

여 백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요약)

SUMMARY : A Survey on The Woman Farmer

II 과업개요

1. 과업목적

- 전국대상 여성농업인의 의식·실태 및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서비스의 기능·역할을 조사·분석하고, 각 조사자료의 상호보완을 통한 정책 DB를 구축함으로써,
 - ▶ 21세기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특히 1998년 8월 수립된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의 실행방안 제공
 - ▶ 여성농업인 자신의 자각 계기 마련과 유관단체 활동지침 설정 및 지원근거 마련
 - ▶ 향후 농업 및 농촌의 발전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주류화(mainstreaming) 유도과 그 역할 및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과업내용

- 전국대상 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실태, 노동실태, 보건·복지·교육 수요, 평등의식,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판단 등의 분야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 및 의견을 수렴
- 여성농업인 유관단체·기관·시스템의 기능·역할 분석
-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수립 시사점 분석 및 정책 건의

3. 과업수행기간

- 본 연구 : 1999. 5. 20 ~ 9. 17. / 수정보완 : 1999. 9. 18. ~ 11. 30.

4. 과업수행방법

- 농림부 및 관계기관의 축적된 자료의 최대 이용과 발전적 적용
- 각종 업무회의·자문회의·보고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연구성과의 확대
- 여성농업인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정보수집 및 여성농업인 실태 간접 조사
- 전국단위 기관조직(농협)을 통한 전국표본 설정 및 여성복지 담당자를 중간 조사원으로 활용한 우편조사 및 조사원 방문을 통한 직접 조사 병행
- 조사자료의 전산처리 및 분석

▣ 농업·농촌의 미래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1. 농업·농촌의 현실과 미래

가. 농업·농촌의 변화와 21세기적 의미

□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위상변화

- 산업구조의 변화
 -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1차산업에서 2차, 3차산업으로 재편되어 있음. 특히 1990년대 들어 금융·보험,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3차산업이 더욱 확대되고 정보 및 지식관련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 ▶ 1998년 국내총생산 비중은 농림어업 4.9%, 광공업 31.0%, 기타및서비스업 64.1%
- 고용구조의 변화
 - ▶ 1970년 농림어업 50.4%, 광공업 14.3%, 기타및서비스업 35.3%
 - ▶ 1998년 농림어업 12.2%, 광공업 19.6%, 기타및서비스업 68.2%
- 농업생산부문의 구조변화
 - ▶ 국내총생산 비중이 1970년 23.3%에서 1998년 4.4%로 급격하게 감소
 - 농업 외적 요인 : 2, 3차 산업의 상대적 팽창, 비교열위에 의한 도태, 농업의 특성에 대한 국민경제의 수용력 부족, 정책적 소외
 - 농업 내적 요인 : 변화 대응능력 부족, 생산성의 상대적 저하, 농업노동력 감소
- 농업생산 품목의 변화 → 다변화와 경제작물 중심으로 작부체계 이동

□ 농업과 타산업의 상호연관성

- 최근의 IMF사태 기간을 제외한다면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경제의 비농업부문은 연평균 8%를 상회하는 고도성장을 기록한 반면 농업부문의 성장률은 2~3%대에 그침
- 농업부문의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근본원인은 토지자원의 부족에 의한 영농규모의 영세성을 꼽을 수 있음. 영세 영농규모는 사실 단위면적당 토지생산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신기술도입과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막는 장애가 됨으로써 농업생산성 및 농업부문 성장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함.
- 농업부문은 노동력·토지·원자재 공급을 통한 타산업 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현재는 타산업의 경쟁력이 농업부문을 지원

□ 농촌사회의 변모

- 산업화에 의한 국가 전체의 발전은 물적 투자·정보확산·교육확대·교류촉진 등을 통해 농촌사회에 자극을 주고 농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며 현실의 낙후를 타파할 수 있는 의식과 수단을 강화시킴.
- 정책적 투자집중에 의해 농촌사회의 사회복지·기반시설의 확충 추세

□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및 지원

-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 개방에 대응하는 경쟁력 육성체제 전환
 - ▶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설치·운영 / 1992 ~ 2001 총 42조원 집행계획
 - ▶ 1994. 6월 문민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확정·발표
 - 164개 세부 실천과제 확정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 UR협상의 조기타결 예상으로 42조원 투자계획 조기집행(2001 → 1998)
 - 42조원 투자계획과는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 향후 10년간 15조원 투입
 -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 ▶ 1998. 12 국민정부의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 ▶ 1999. 1. 1. 「농업·농촌기본법」 제정·공포 → 2000. 1. 1. 시행
- 정책지향점
 - ▶ 지식·기술·정보를 생산요소로 삼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농업의 우위성을 확보하여 선진농업 실현
 - ▶ 인간다운 삶이 영위될 수 있는 복지확충 및 환경보전
 - ▶ 여성농업인의 주류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 농업·농촌의 21세기적 의미

- 21세기 농업·농촌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기간산업으로서,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산업으로서, 그리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산업으로서 다면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음.
- 21세기 농업·농촌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
 - ▶ 농업의 산업화·규모화
 - ▶ 여성농업인의 위상정립 및 육성
 - ▶ 농업인력의 육성 및 농민의 전문경영자화
 - ▶ 농촌의 인간정주의 생활공간화
 - ▶ 농민의 복지증진

나.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의 변화

□ 농가인구의 성별·연령별 변화추이

- 연령별로 보면, 취업 및 결혼, 대학 진학 등으로 20대 농가구성원의 급격한 감소
- 60세 이상의 농가인구의 비중은 급격 증가, 생산연령층도 60세 이상의 고령화 추세

□ 농가 여성인구 변화추이

- 농가 여성인구는 1970년 725만8천명에서 1998년 227만1천명으로 감소하였음. 출산능력을 가진 20~49세의 연령층의 축소와 50대 이상 고연령층의 상대적 증가

□ 농업노동력 변화전망

-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 비율은 점차 완만해 질 것임.
- 여성농업인구가 남성농업인구보다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됨.

다. 농가소득·농가부채

- 농가소득은 1970년 25만6천원에서 1998년 2천49만4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반면에 농가부채도 동기간에 1만6천원에서 1천701만1천원으로 증가하여 농가소득중 농가부채의 비율이 1998년 기준 83.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가의 사기 저하는 물론 부채비중의 증가에 의해 농가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음.

라. 생활환경

-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열악은 청·장년층의 이농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여 농가인구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야기시킴.
- 삶의 질의 향상과 정주유인을 위한 근본적인 농촌복지 향상 대책 필요

마. 농촌가족구성원의 지위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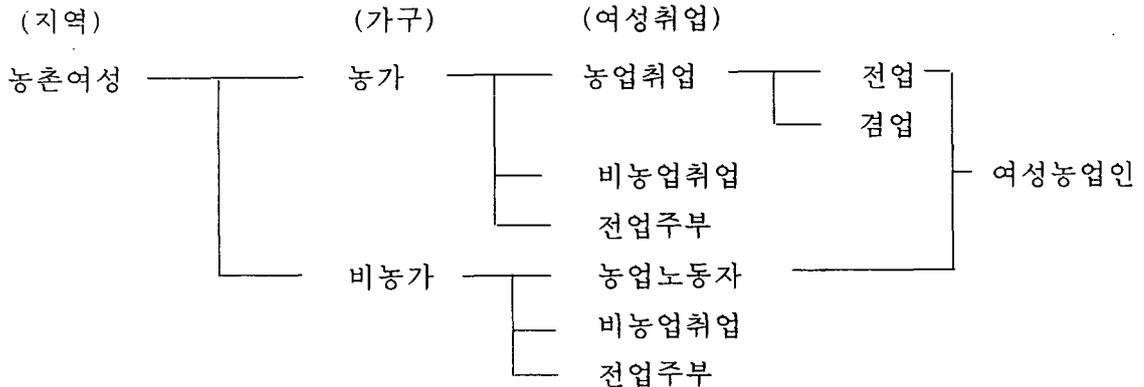
- 농촌 가족구성원의 역할구조의 결정요인은 가족의 개별적 구성원의 속성 즉 지위와 성격 및 특성에 의한 것으로 특히 세대·성·서열 등이 중요한 요인임.
- 가족구성원의 핵가족화 경향이 농촌까지 파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 역할분담의 변화를 초래, 남성의 권위 및 지위가 약화되는 대신 여성은 강화됨

바. 농업·농촌의 과제와 대책방향

- 개방화시대에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의 전반적 향상이 불가결함. 총량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수익성 증대에 중점을 둔 경영효율지향의 전문농업인 육성이 필수
- 농업은 본래 식량생산기능 못지 않게 자연환경의 보호기능을 갖고 있으나, 증산을 위한 집약화 과정에서 농업 본래의 기능인 환경보전기능을 상실해 가는 현안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농업생산방식에서는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보전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 한국의 농정도 농업의 경쟁력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농촌의 소득기회와 소비기회 그리고 환경보전 기능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농촌지역의 주민과 그들의 자녀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함.

2. 농업·농촌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의의와 위상

□ 농업취업을 기준으로 본 여성농업인의 분류



□ 전통적 농업·농촌에 있어서의 여성농업인의 위치

- 의사결정이나 경영에 있어 남성 주도하의 소극성과 참여제한으로 폭 넓은 농업경험을 지닌 생산주체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음.

□ 미래 농업·농촌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 농업·농촌의 명실상부한 주류로서 영농은 물론 가정·사회활동까지도 보다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주체적 위상을 가질 것으로 판단

3. 여성농업인 노동가치의 실현

가. 여성농업인의 노동형태

□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가치에 대한 보상 현실

- 여성농업인은 농가경제 내에서 농가소득을 획득하는 경제주체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로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생산의 당연한 주체임.
-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활동에의 참여는 남성농업인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은 농업생산과 농촌주거의 특성상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구분이 어려워 사회적 생산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야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업생산비중의 올바른 평가와 여성농업인에 대한 공정한 사회보장이 가능함.

□ 여성농업인의 공익노동

- 여성농업인은 사회분화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친목을 숭상하며 지역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농촌의 소외노인을 돌보고 도시가족의 휴식을 포함한 가족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대가없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

나.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실현

-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여성농업인의 노동의 대가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 농업생산활동의 의욕을 증진하고 미래지향적 역할 활성화 기대
 - ▶ 농업노동에 의해 산출되는 농산물의 가격에 농업노동가치를 합당하게 반영
 - ▶ 가사노동 가치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로 기회비용을 산정하며 합당한 위상 부여
 - ▶ 지역공동체에 대한 유·무형의 공익활동가치를 평가하며 합당한 위상 부여

4. 가족농과 여성농업인

- 가족농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평가하고 그 육성과 경영승계를 위한 지원
 - ▶ 건실한 가족농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 확대를 통한 협동화 추진
 -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확충
 - ▶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 사업에의 참여 확대

5. 사회 · 경제 · 정치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 그 동안 여성농업인들은 농업 · 농촌에서 담당해 온 실제 역할에 비하여 사회 · 경제 · 정치주체로서의 합당한 위상을 부여받지 못함
- 농업 · 농촌의 미래가 여성의 주류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이상 이 변화를 농업 · 농촌의 발전에너지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각 부문에 대한 주체적 위상확립이 필요하며, 이는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정책지원이 있어야 가능

6. 21세기 농업 · 농촌에 있어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

- 21세기는 개방의 가속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 정보화 사회의 도래,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물질적 풍요속에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대 등의 변화로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역할과 기능 모색이 필요
- 21세기 여성농업인의 역할
 -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참여 · 역할 증대
 - 지역발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 지역사회 정화를 위한 각종 여성단체 참여
 - ▶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활동에서의 부각
 -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에 있어 주류화(mainstreaming)
 -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비중 증대
 - 여성농업인의 경제작물 생산 및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
 - ▶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및 정책참여에 대한 역할 증대
 - 농업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치적 참여 증대
 - 여성의 의회 참여
 - 각종 위원회 여성농업인 참여
- 21세기 여성농업인은 사회적인 역할증대와 위상정립에 따라 농업의 생산량 증대,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및 농기계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등 우리농업과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육성 · 발전시키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전국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전국 여성농업인의 의식·행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여성농업인 부문의 현황 인식과 21세기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 표본선정

- 전국 대상 층화추출방법에 의한 무작위 선정 → 총 2,500 표본
- 전국 농가(광역시 및 제주 제외)의 여성인구 비율분포에 따라 시·군별 표본 수 배정

□ 조사방법

- 1단계 : 농협중앙회의 읍·면 단위 회원조합 여성복지담당자를 중간조사원으로 활용
- 2단계 : 취약지구에 대한 전문조사요원의 직접 설문조사

□ 조사기간

- 예비조사 : 1999. 7. 15 ~ 7. 18. / 본 조사 : 7. 22 ~ 8. 20 / 보완조사 8. 26~ 8. 28

□ 분석결과 인용의 한계

- 본 조사는 주로 농협계통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응답자중 농가주부모임회원이 많은 관계로 그 분석결과는 표본특성에서 비롯되는 오차·편향이 있을 수 있음.

□ 응답자 일반사항

구 분		사례수(명)	비율(%)	구 분		사례수(명)	비율(%)
도 별 분 포	경기도	192	14.2	연령별 분 포	30세 미만	66	4.9
	강원도	85	6.3		30~39세	325	24.0
	충청북도	105	7.8		40~49세	532	39.4
	충청남도	168	12.4		50~59세	235	17.4
	전라북도	145	10.7		60세 이상	180	13.3
	전라남도	187	13.8		무 응 답	14	1.0
	경상북도	311	23.0	학력별 분 포	국 졸	361	26.7
	경상남도	159	11.8		중 졸	436	32.2
시도별 분 포	시소재지	574	42.5		고 졸	389	28.8
군소재지	778	57.5	전문대졸		16	1.2	
거주지 특성별 분 포	평야지역	374	27.7		대졸이상	17	1.3
	산간지역	404	29.9		기 타	58	4.3
	중산간지역	526	38.9	무 응 답	75	5.5	
	도시지역	48	3.6	합 계	1,352	100.0	

2. 농촌 생활실태

□ 농촌거주 이유

- 남편이 농사를 짓거나(61.9%), 부모님이 농사를 짓기 때문(14.4%)에 농촌에 거주함. 즉,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이 결혼 전·후에 농사를 짓고 있어 농촌에 거주해 옴.
- 소수이기는 하지만 농촌생활이 좋아서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도 발견됨. 연령층이 낮고 학력이 높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농촌에 거주하는 경향을 나타냄

□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수준
 - ▶ 뚜렷한 만족 또는 불만족의 의견 제시가 없고, '비교적 만족'하거나, '약간 불만족', 아니면 '보통'이라는 중립적 입장에서 농촌생활을 영위함.
-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
 - ▶ 불만의 가장 큰 이유는 소득문제임. 힘든 농사여건과 취약한 자녀교육여건도 농촌생활 불만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이 희망하는 자신의 역할

- 전체적으로 농사일을 계속 원하는 비율(전문 농업인이 되거나, 주부겸 보조영농인의 역할)이 61.8%이며, 나머지 38.2%는 현재의 영농인 역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함.

□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실태

- 농번기 평균 13.4시간, 농한기 평균 9.7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가사노동부담은 농번기의 경우 여성농업인 자신이 약 60%, 나머지 40%를 다른 식구들이 분담. 농한기에는 본인이 약 70%정도 가사를 담당함.

구 분	가사노동시간	농업노동시간	합 계
농 번 기	4.90	8.45	13.35
농 한 기	5.07	4.64	9.71

□ 주거환경 실태

- 가옥형태, 식수시설, 목욕시설, 부엌시설 및 취사연료 등 주거조건은 대체로 개선이 된 상황이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하수시설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추가구입을 원하는 물품으로는 에어컨과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음.

3. 경제생활 실태

□ 농가의 소득규모

- 응답자(전체 조사대상자의 79.1%)의 1998년 평균 소득규모는 2천570만원이며, 그중 농업소득이 73.2%인 1천882만원, 농외소득은 26.8%인 688만원으로 나타남.

□ 농업외 소득의 구조

- 농업외 소득의 소득원은 대부분 근로소득임. 근로소득은 농외소득 총액의 68.8%인 473만원임.

□ 농가저축 / 농가부채 / 농가자산

- 재산상황 조사에 응답한 농가(69.6%)를 기준으로, 농가의 평균저축액은 1천572만원이며, 농가의 평균부채액은 4천94만원에 달함. 부채의 80%는 농협 대출금임.
- 농가의 평균 자산규모는 1억4,482만원임.

□ 여성농업인의 재산상황

- 자기명의의 농지가 있는 여성농업인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22.3%, 응답자의 34.9%임. 응답자를 기준으로 볼 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자중 자기명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45.1%로 가장 많으며,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기명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60.2%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남편사망에 따른 상속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자기명의 농지가 있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지소유규모는 평균 2,371평이며, 농지를 소유한 농가의 평균규모인 4,235평의 56%수준임.
- 예금통장은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하나씩은 소유함. 통장 예금규모는 5백만원 이하가 전체의 53.5%를 차지함.

4. 농업노동의 실태

□ 농업노동의 애로요인

- 생산비 이하의 농산물 가격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함. “힘든 농사여건”과 “가사일 병행하기”를 농산물 가격 다음으로 큰 애로요인으로 보고 있음.

□ 여성용 농기계(농기구)에 대한 수요

- 여성농업인의 69%가 여성용 농기계 개발·보급을 원함. 특히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의 여성용 농기계화를 희망하고 있음.

□ 이농에 대한 견해

- 응답자의 88%가 이농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농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보장이 안되기 때문”이며, “취약한 자녀교육여건”과 “농사일이 힘들어서” 이농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

5. 보건·복지·교육부문 실태 및 요구

□ 자주 찾는 진료기관과 희망하는 진료기관

- 두 가지 모두 병원이나 의원이 해당됨. 농촌지역에서 병원이나 의원을 찾기 쉽지 않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진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음. 병원이나 의원을 희망하는 이유는 전문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보육시설에 대한 의견

-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있는 보육시설이 아닌 일년내내 상주하는 보육시설을 원하며, 유아용 보육시설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원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조건으로는 교사의 질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음.

□ 교육프로그램 참여 의사

- 바쁘지만 않으면 참석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름. 이러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바쁜 일상을 반영하며 농한기에 하루종일이 아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시사

□ 컴퓨터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

- 영농교육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분야 모두 컴퓨터 교육을 가장 선호함. 이는 특히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임.
- 컴퓨터 활용교육을 매우 강하게 희망하는 것과 반대로 실제 컴퓨터 활용실태를 보면 영농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함. 이는 농촌지역의 컴퓨터보급과 함께 그 활용교육과 정보화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

□ 작물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

- 영농활동에 필요한 교육은 컴퓨터교육 다음으로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한 전문교육을 원함.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으로는 컴퓨터교육 다음 보건교육임.
- 현재 재배하고 있지 않지만 영농교육을 받기 원하는 관심작목은 미작(쌀)과 과수임.

6. 지역활동 · 남녀평등에 대한 의견

□ 지역사회활동의 애로요인

- 지역활동을 하는 이유로는 “활동하는 것이 좋아서” 라는 경우가 70%에 달하고 있어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역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활동의 가장 큰 애로는 시간이 없다는 점임. 지역사회활동을 하려고 해도 개인이 바빠서, 또 관련단체 회원들이 바빠서 모임을 갖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지역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일상여건임을 나타내고 있음.

□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 전체 응답자의 62%가 남자보다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특히 남자보다 행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대한 소득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차별당하는 것으로 인식함.
- 같은 농업인이면서도 남자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부분으로서 농기계사용이 어렵다는 점과 재산소유가 남자위주로 된다는 점을 가장 강력히 지적하고 있어 여성용 농기계(농기구) 개발에 대한 투자와 재산소유 구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농기계 사용과 관련한 평등성 요구라는 자각은 농촌의 향후 노동력 구조에서 여성이 차지할 비중을 감안할 때 농기계의 개발단계부터 보다 근본적인 정책배려가 요구되는 사안임.

7. 농업 · 농촌정책에 대한 판단

□ 농촌의 미래에 대한 판단

-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비율이 46.5%, 나쁘게 보는 비율이 30.9%로 많은 농민들이 농촌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는 비교적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
- 긍정적 견해의 배경은 농촌의 장점으로 지적하는 사항인 “먹을 것 자급자족”, “쾌적한 생활환경”, “가족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점”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장점들은 앞으로 젊은이들의 농촌정주나 도시인들의 귀향을 위한 유인력이 될 것임.

□ 정책 요구분야

- “복지정책 확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함. 이는 근로측면이나 생활측면 어떤 경우에서도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여성농업인들의 자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농촌사회에 대한 정책 지향점이 무엇이어서 하는가를 시사함.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은 기본적으로는 원활한 농사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복지 확충이 우선 필요함. 즉, 여성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조사결과 상위 1, 2위는 생활환경 개선, 복지정책 확충이 차지함. 이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교육이나 농업경영교육 등에 앞서 가사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이나 농사를 돕는 복지정책의 확충 등 농촌의 기초 생활여건 개선·확충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함.
- 물론 복지정책은 국가가용자원의 배분철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부문에 특별 배려하는 단시일 내의 집중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실행가능한 시책과 중장기적인 구조개선 전략의 조화 및 지속 추진 필요

□ 농업인후계자 제도에 대한 의견

- 농업인후계자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로서는 자금지원을 가장 많이 꼽고 있음.
- 농업인후계자 제도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남자위주로 선발된다는 사실임. 여성농업인에게 가산점 등의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나, 실제로 선발되는 비율이 남자위주라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필요
- 후계자로 선정후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함. 농업인후계자 제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종류별로 보면 지원금액이나 융자조건 등 지원내용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지만, 단일 항목으로는 후계자로 선정한 후에 영농활동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농·축협 조합원 가입에 대한 견해

- 현행 농·축협 조합원 가입은 1가구 2인의 복수 가입이 가능한데도 집안에 여성 조합원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음. 그 이유는 평소에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생각해 보지도 않은 무관심의 이유가 가장 많음.
- 조합원이 아니어서 갖는 불만은 대출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됨. 이외에 조합원의 단체행동시 제외된다거나 영농교육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불만들이 지적되고 있음.

Ⅳ 여성농업인 관련 기구 및 정책

1. 여성농업인 관련정책

- 전체 경제부문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농촌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타부문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속에서 여성농업인들은 농촌주민으로서, 농가여성으로서, 농업취업자로 농업에서 중추적 역할 담당
- 여성농업인에 대한 생산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정책 도입
 - ▶ 1994년 12월, 1가구 1조합원제를 규정하던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1가구 2조합원제를 시행함으로써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에서 그 가능성이 배제되던 여성농업인의 농협참여가 가능케 됨.
 - ▶ 1994년부터 농업인 후계자를 선발하는데 있어 여성에게는 총 700점중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은 예비후계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음. 또한 농업고등학교나 농과대를 졸업한 여성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우대 조치를 도입했음. 이에 따라 1993년 농업인 후계자중 여성후계자가 3.0%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12.9%에 이르고 있음.
 - ▶ 1996년 농림부장관 직속 “농어촌여성정책자문기구”가 설치되었으며, 1999년 1월 여성농업인의 지위규정이 포함된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여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비중이 높아질 것이 기대됨.
-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몇가지 제도적 보완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형편으로 여전히 대다수 여성농업인들의 생산자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임.

2.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

가. 농업·농촌 기본법

- 1999. 1월 제정, 2000. 1월 발효
-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계획에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위한 제도마련·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나. 여성농업인 지원체계

- 현재 여성농업인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담당부서는 농림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임. 또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정책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 장관직속 「농촌여성정책자문회의」 발족 : 1996년 4월
 - ▶ 농림부 「여성정책 담당관실」 설치 : 1998년 3월
 - ▶ 농림부소관 위원회 여성의 참여비율 확대
-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만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 단위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담조직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일관 정책운용에 애로 발생

다.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제도

□ 여성농업인 육성제도

-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복지향상, 생산자로서의 지위확보의 체계적인 육성제도가 제정됨.
 - ▶ 「농업·농촌 기본법」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노동력가치인정,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
 - ▶ 각종 농업관련 위원회에 여성농업인 참여확대를 위한 관계규정을 보완함.

□ 여성농업인 지원제도

- 여성농업인 후계자 육성·지원
 - ▶ 1997년 이후 농업인 후계자 선발시 여성에게 가산점 부여
 -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20% 범위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개선
-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농기계 및 전산교육·훈련
- 여성농업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성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설치 시행
 - ▶ 경상대, 제주대, 경북대에서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여성과정 운영
- 여성농업인 관련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
-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의 개발·생산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농기계 제조업체에 협조 의뢰
- 농림부소관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 확대,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지역협의체에 여성의 참여 확대방안 강구

3. 민간부문 여성농업인 지원체계

가. 여성농업인단체

□ 기본 개요

- 우리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은 농업생산활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생산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차별되는 보조농업인으로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을 위한 단체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환경개선, 복지시설 확충, 전문농업인력의 육성 등 여성농업인의 권익실현과 정책을 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각계에 인식시키고 있음.

□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현황

-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대표적인 여성단체들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생활개선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을 들 수 있음.
- 이들 단체들은 서울에 총본부를 두고 각 도·시·군별 지부를 두고 있는 전달체계를 갖고 별다른 공공지원 없이 자체 자금조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여성농업인을 대변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여성농민연구소는 소비자·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단체의 지원체계

-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가입회원의 회비와 농업생산품의 직거래 등에 의해 얻은 수익금으로 충당함.
- 여성농업인단체들은 열악한 환경하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나. 교육기관 · 전문기관

□ 기본 개요

-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의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진전에 의해 젊고 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의 농가인구가 도시로 이농함에 따라 농촌여성의 영농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농업생산활동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여성농업인들이 향후 농업·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함
- 또한 농산물시장의 개방이라는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 농산물생산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예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 각종 교육기관 및 농업관련 기관에서 기존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독자성 유지 및 협조체계의 미흡으로 농업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체계
 -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설치 및 영농 교육내용의 차별화·전문화
 - ▶ 여성농업인의 기계화를 위한 농기계의 개발 및 교육 실시
 - ▶ 여성전문농업경영자 양성
- 여성농업인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여성농업인의 우수인력양성을 위해 농과대나 농업전문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여성농업인의 선진농업국에 대한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농업기술 및 지식의 습득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회시켜 농산물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함.
- 기존 농업인의 능력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및 지도사업을 제공하는데 있어 각종 공공 및 민간단체의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정예 여성농업인 육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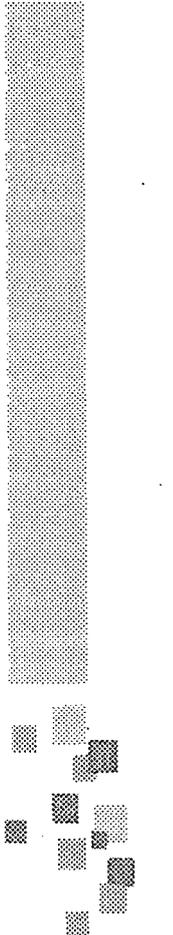
V 결론 및 건의

1. 요약 및 결론

- 산업화 및 도시화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확대에 의해 농촌사회가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옴.
 - ▶ 농촌인구의 감소
 - ▶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여성인구의 증가
 - ▶ 도·농간 불균형성장
 - ▶ 농업부문의 경쟁력 약화에 의한 농촌의 빈곤화
- 변화되는 농업환경하에서 농촌의 절대적 노동력 부족을 여성으로 대체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활동의 참여가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의 주체인력으로 대두되고 사회·경제·정치적 참여가 활발함에 비추어 그 위상과 지위는 매우 낮게 평가됨.
-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위상정립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 있어서도 전문 여성농업인이 육성되어야 우리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21세기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정책 건의

- 농사여건/자녀교육여건에 대한 불만요인 해소를 정책수립의 핵심으로 인식
- 여성용 농기계(농기구)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연구·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사회교육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컴퓨터 교육의 확대 실시
-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변화와 시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 농촌환경의 개선정도에 따라 여성노업인 또는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입촉진이 가능하다고 보아 도시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농촌의 복합적 장점이 유지될 수 있는 생활환경 유지대책을 마련
- 농업인 후계자제도에 대해서는 남녀 선발비율 조정과 사후관리 철저 요망



1. 연구과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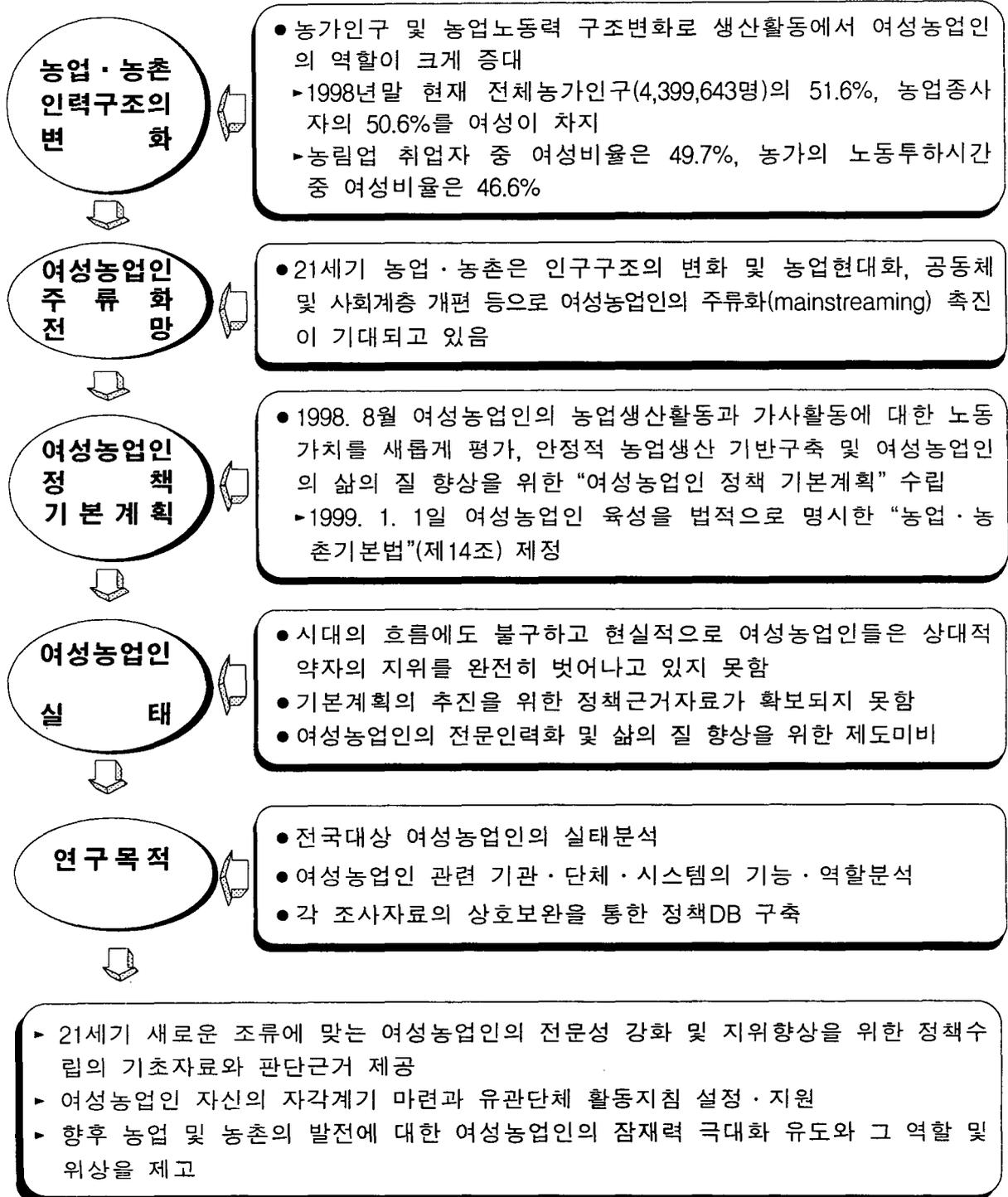
1. 연구과업의 목적과 배경
2. 연구과업의 범위
3. 연구과업의 수행기간
4. 연구과업의 기본수행방법
5. 연구과업의 내용구조 및 수행체계

여 백

1. 연구과업의 개요

1. 연구과업의 목적과 배경

가. 연구과업의 목적



나. 연구과업의 배경

□ 농업·농촌의 현실

- 장구한 우리 역사의 지정·지경학적 특성을 고찰할 때, 우리나라의 공간적·인구적·정서적 뿌리는 농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러나 농촌을 노동력과 원자재의 공급기지로 간주한 불균형적 경제개발방식과 고도산업사회로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농촌 및 농업의 상대적 위상은 끊임없는 위축의 길을 걸어옴.
- 농촌사회는 개화에 의한 변모의 수준을 넘어 전래의 지역공동체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체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냄. 가족노동력이 곧바로 생산수단이 되는 농촌사회에서 대가족체제는 지역공동체의 기반이었으나 성장연대의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젊고 교육받은 세대들이 보다 큰 비용보상의 기회를 찾아 대거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농촌은 피할 수 없는 고령화의 인구구조를 갖게 됨.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이 야기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기계화와 대리경작의 기업농이 출현함. 농촌정서는 공동체의 연대감에서 생산·유통의 원가를 계산하는 상업적인 분위기를 갖게 되고 생산효율과 소득구조에서 보다 과학화된 산업의 한 부문으로 재편을 위한 농민들이 자각적 노력이 경주됨.
- 60년대 경제개발 초기만 해도 종사인구가 생산규모면에서 최대의 산업부문이었던 농업은 이제 21세기 새 천년의 문턱에 다달은 20세기 마지막에 와서 공간면에서는 국토면적의 90%를 점하긴 하나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10.3%에서 7.3%로 감소, 사양산업으로 꼽혀 식량자급도가 50%미만인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점증하는 실정임.

<표 I-1> 농림업 생산액의 비중

구 분	1990	1995	1997	연평균 증감률(%)
A. 국민총생산(10억원)	178,262	254,705	285,589	15.2
B. 농림업부문(10억원)	18,397	26,736	30,271	8.7
B/A(%)	10.3	7.7	7.3	-

자료 :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1998.

-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IMF 경제체제의 여파로 농촌귀환이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기도 하고 실업의 완충지대로서 농업·농촌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하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인구감소와 상대적인 경제규모의 비중 저하는 농업·농촌의 대세를 형성할 전망이다.

□ 농촌인구추이

- 우리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 현상중 하나인 인구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70년대 이후 농가인구는 연평균 4.88%씩 지속적으로 감소 해 오고 있음.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농가인구의 비중도 1980년 28.9%에서 1998년에는 9.5%로 감소함.
- 성별로 보면, 1990년 균형을 이루었던 농가 성별인구는 그 이후 남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현재 남자 48.4%, 여자 51.6%의 분포를 보임

<표 I -2>

성별 농가인구 추이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8	연평균 증감률(%)
A. 총인구(천명)	37,436	40,449	43,411	45,093	46,165	1.17
B. 농가인구(천명)	10,827	8,521	6,661	4,851	4,400	△4.88
C. 남성(천명)	5,415	4,246	3,279	2,373	2,129	△5.05
D. 여성(천명)	5,412	4,275	3,382	2,478	2,271	△4.71
B/A(%)	28.9	21.1	15.3	10.8	9.5	-
C/B(%)	50.0	49.8	49.2	48.9	48.4	-
D/B(%)	50.0	50.2	50.8	51.1	51.6	-

자료 : 1998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농림부, 1999. 3.

- 연령별로 볼 때 농가인구는 1970년의 경우 14세 미만이 43.5%를 차지하였으나 1998년에는 12.9%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1970년 7.9%에서 1998년에는 30.5%로 증가함.
- UN은 65세 이상인구가 전 인구의 7%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 15%이상이면 고령사회, 21%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농촌의 인구구조는 이미 고령사회 내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

□ 농업·농촌에서의 여성의 표면적 위상

- 농경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는 농업노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좌우됨. 특정 농경권에서 노동력의 주공급원이 남성인가 여성인가는 해당지역의 인구구조·풍습·농업종류·사회구조 등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강한 근력이 요구되는 논농사·목축·개간 등은 남자가, 잔손질이 요구되는 밭농사나 수확물의 갈무리는 여자가 분담해 왔음.

- 그러나 오늘날 농촌에서 보듯 절대인구의 감소와 함께 남성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여성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노동력의 절대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여성이 남성의 노동부문을 근력으로도든 기계로도든 대체하게 됨.
- 농촌사회 역시 여성인구의 절대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체의 분위기나 지향점, 사회구조·인간관계 등에 여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여성 농민조직의 전국화·세분화가 진전되고 재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조류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자각과 더불어 모성의 특성이 의식화된 생태보전, 지속가능한 개발,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 등에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음
- 결국 우리 농촌의 여성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인구구조의 역전에 힘입은 농촌의 다수로서 종래의 종속적 지위에서 주체적 지위로, 지류에서 본류로 전차 부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정책적 대응수요도 불가분 점증하고 있는 것임.

□ 여성농업인의 현실적 지위

- 여성농업인은 농촌여성중 전업·겸업 또는 임금노동자 형태로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이라고 정의됨. 따라서 전업주부나 비농업부문 취업자도 있기 때문에 농촌여성 모두가 여성농업인은 아니지만 농촌 인구구조에서 여성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할수록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범위는 확장된다고 할 수 있음.
- 문제는 급속한 산업화의 속도만큼 농촌의 사회 및 인구구조도 변화를 거듭하여 농촌여성들을 수와 역할로서 농업·농촌의 주류로 부상시키고 있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역할비중에 맞는 진정한 지위향상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사실임. 즉, 우리의 농업·농촌은 표면적 변화와 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성차별적 잔재를 아직도 많이 남기고 있어 여성들은 새로운 시대 조류로부터 맡겨진 역할수행과 전래의 차별내지 속박 사이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사례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것임.
- 예컨대, 수적으로는 농촌사회에서 최소한 남성과 동등한 주류이나 노동력의 투입은 주체적이기보다는 임시단순노동력이 많아 임금차별이 발생함. 또한 상대적 인구비중 증가 및 남성보다 10년 이상 긴 수명은 여성가구주·여성단독가구를 증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를 재촉함. 실제로 농촌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투입을 포함한 농업경영주의 주도적 판단위치에 있는 농가의 경영주는 절대다수가 남성으로 여성의 노동투입이 종속적임을 알 수 있음.

- 60대 이상에서는 농가경영주의 여성비중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여성이 주도적 위치에서 농업을 경영할 때에는 이미 고령단계에 진입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3> 농가경영주의 성별·연령별 분포 비중(%)

구분	합계	30세미만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남자	84.5	96.7	96.7	93.2	85.5	79.2	78.9
여자	15.5	3.3	3.3	6.8	14.5	20.8	21.1

자료 : '98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농림부, 1999. 3.

- 농업·농촌의 구조변화는 여성노동력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처럼 주류 노동력이 아닌 주변 노동력화에 그치고 여기에다 가사와 같은 기존의 역할분담량은 마찬가지로 요구되어 농촌여성, 특히 농업노동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과중한 노동량의 부담이 상시화 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노동가치가 반영되는 임금에서의 차별, 고령에서 오는 노동기회의 상실, 법·제도·관행적 제약 등은 농촌여성의 빈곤을 구조화시킴. 여성의 열위를 교육적으로나 복지적으로 보상하는 사회시스템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농촌여성 또는 여성농업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노정함.
- 결국 우리나라 농업·농촌현실에서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을 표면적으로는 주류의 지위로 진입해가고 있지만 그 진전이 스스로의 자각과 능력의 축적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산업구조 개편 및 인구이동에 따른 농촌공동화의 반사적 복원작용에 기인한 부분이 크고 여기에 상대적 열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또한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외형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유형·무형의 차별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시대가 만들어가고 또는 요구하고 있는 주류로서의 여성농업인이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의 위상확립을 위한 지원조치

-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진행되고 있는 국민총생산내 비중감소, 전통적 농촌사회의 해체와 상업적 생산구조로의 재구성, 인구감소 및 그에 따른 여성의 주류화 추세 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국가전략상 농업·농촌이 효율성이나 경쟁력 논리와는 별개로 식량안보와 공간 절대가치라는 측면에서 포기할 수 없는 부문이며 오히려 그 본질적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경향임을 전제할 때, 이와 같은 농업·농촌의 사회현상에 대응하여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여성 및 여성농업인을 명실상부한 주류로서 격상시켜 21세기의 농업·농촌을 담당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수요증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
- 실제로 정부는 1998. 8월 여성 농업인의 농업생산활동과 가사활동에 대한 노동가치를 새롭게 평가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구축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
- 이어서 1999. 1. 1일 농업을 경쟁력 있고 환경과 조화된 생명산업으로, 농촌을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된 바, 여기에 처음으로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규정함.
 - ▶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여성농업인 정책기본계획과 농업·농촌기본법의 여성농업인 육성조항을 근간으로 현재 정부의 관련시책이 구상중에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기존의 여성농업인 단체나 농협 등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 관련서비스 전달체계가 활성화되는 추세임.

□ 정책의 기초근거 / 본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이나 농업·농촌기본법상의 규정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아니라 규범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자체 단위에서 여성농업인 자신의 의식화 및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이 성공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 법령의 바탕위에서 여성농업인의 현재실태와 미래비전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함.
- 여성농업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찰은 단순한 학술이론과 탁상공론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인 바, 농업·농촌 현장의 여성농업인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그들의 의식과 형태, 처해진 현실, 미래 소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이로부터의 시사점을 정책개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체계가 요구됨. 이는 바로 농림부 여성담당관실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용역과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이자 필요성이라 할 수 있음.

2. 연구과업의 범위

구 분	부 문 별 범 위
<input type="checkbox"/> 시간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기준 연도 : 1998 ● 추세 : 1989~1998 / 전망 : 2000~2010
<input type="checkbox"/> 공간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공간 : 전국농촌지역(특별시·광역시·제주도 제외) ● 행정기관 : 농림부 / 도 및 해당 시·군 ● 여성농업인 실태 : 전국대상 ● 농협 : 중앙회 및 회원조합 / 교육기관 : 농업계고교, 대학강좌 ●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전문가, 기타
<input type="checkbox"/> 내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의 미래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 전국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의식 및 실태 / 주거환경 ▶ 경제생활 ▶ 농업노동 / 취업기회 / 보건·복지 / 교육 ▶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 여성지위 향상 ▶ 농업·농업정책에 대한 판단 ●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수요 분석 ● 여성농업인 관련 민간기구 및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 정책시사점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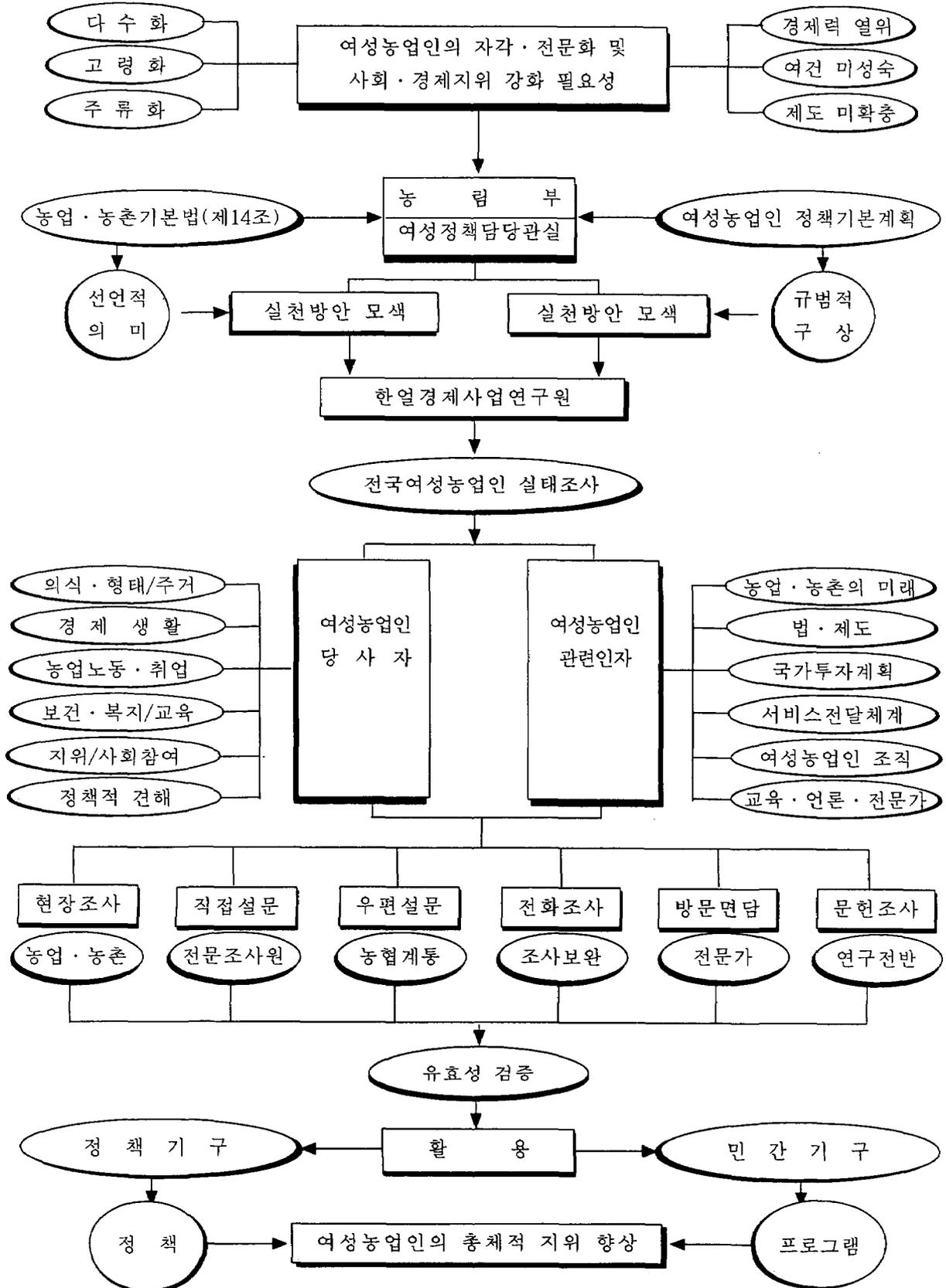
3. 연구과업의 수행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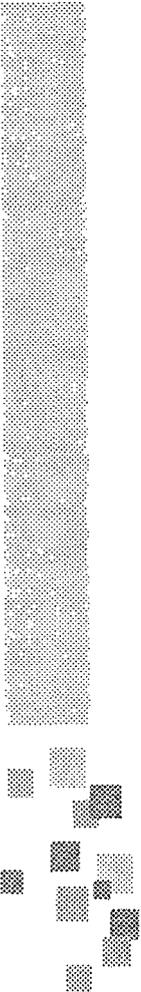
- 본 연구 : 1999. 5. 20 ~ 9. 17. / 수정보완 : 1999. 9. 18. ~ 11. 30.

4. 연구과업의 기본수행방법

- 조사대상의 특성에 맞는 조사방법론의 적용 및 샘플링으로 실태파악의 정밀화 도모
- 현장중심의 직접접촉 극대화로 실천적 대안제시
- 행정전달체계의 활용을 통한 조사업무의 능률·신속·광역화 달성
- 각종 업무회의·자문회의·보고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연구성과의 확대
- 조사자료의 전산처리 및 분석
- 농림부 및 관계기관의 축적된 자료의 최대이용과 발전적 적용
- 기타 기존문헌·통계자료의 수집과 연구의 2차 분석 및 인용

5. 연구과업의 내용구조 및 수행체계





II. 농업·농촌의 미래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1. 농업·농촌의 현실과 미래
2. 농업·농촌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의의와 위상
3. 여성농업인 노동가치의 실현
4. 가족농과 여성농업인
5. 사회·경제·정치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6. 21세기 농업·농촌에 있어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

여 백

II. 농업·농촌의 미래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1. 농업·농촌의 현실과 미래

가. 농업·농촌의 변화와 21세기적 의미

□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위상변화

1) 산업구조의 변화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60년대초 이후 1차산업에서 2차, 3차산업으로 재편되어 왔음. 특히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금융·보험,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3차산업이 더욱 확대되고 정보 및 지식관련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 ▶ 농림어업의 1차산업 중심에서 광공업 위주의 2차산업과 서비스 중심의 3차산업으로 개편되어 옴.
- ▶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농림어업의 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팽창함.
- ▶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증가는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그 전·후가 다른 양상을 보임. 1980년대 초까지는 광공업 특히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의 증가추세가 감소현상을 보이고 서비스업이 신장됨.
- ▶ 1998년 국내총생산 비중은 농림어업 4.9%, 광공업 31.0%, 기타 및 서비스업 64.1%

<표 II-1>

산업구조의 변화추이(국내총생산 기준)

(단위 : %)

구 분	농림어업	광공업	기타 및 서비스
1970	26.6	22.5	50.9
1975	24.9	27.5	47.6
1980	14.7	29.7	55.4
1985	12.5	30.5	57.0
1990	8.7	29.7	61.6
1995	6.5	27.1	66.4
1997	5.7	25.9	68.4
1998	4.9	31.0	64.1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2) 고용구조의 변화

- 산업구조변화와 더불어 산업별 고용구조에 있어서도 농림어업부문은 감소하고 있으며, 비농림어업부문은 중공업 중심의 경제발전계획과 함께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경제발전 및 경제성장은 비농림어업부문에서 직업의 다양화 및 취업기회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른 노동력 수요를 농림어업부문으로부터 충당함으로써 산업간 노동력 불균형 현상을 초래함.

<표 II-2>

산업간 고용구조 추이

(단위 : %)

구 분	농림어업	광공업	기타 및 서비스
1970	50.4	14.3	35.3
1975	45.7	19.1	35.2
1980	34.0	22.5	43.5
1985	24.9	24.4	50.6
1990	17.9	27.6	54.5
1995	12.5	23.6	64.0
1997	11.0	21.4	67.6
1998	12.2	19.6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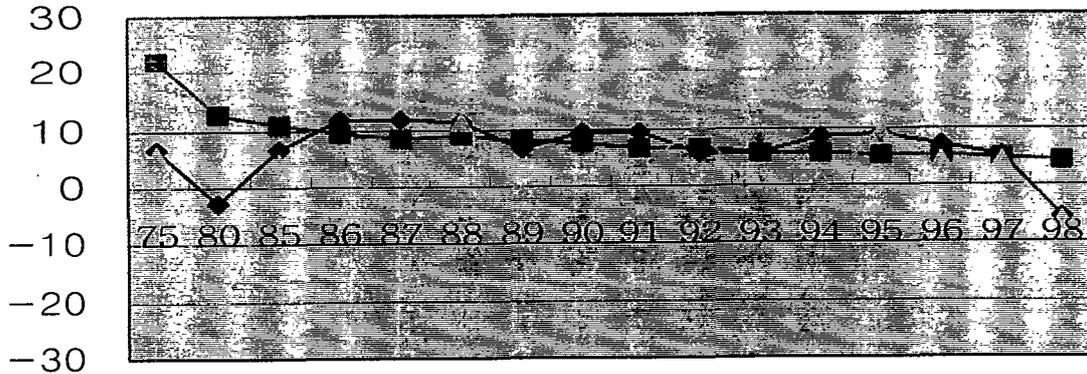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3) 농업생산부문의 구조변화

-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23.3%에서 1998년 4.4%로 급격히 감소하고 부문성장률에 있어서도 국내총생산의 전체성장률을 훨씬 하회함.
- ▶ 지난 1985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7%수준임에 비해 농림어업은 연평균 약 2%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농업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저하는 농업 내·외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음.
- ▶ 농업 외적 요인으로는 2, 3차산업의 절대적·상대적 팽창,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른 경쟁력 상실 및 비교열위에 의한 도태, 농업의 특성에 대한 국민경제의 수용력 부족, 정책적 소외 등을 들 수 있음.
- ▶ 농업 내적 요인으로는 변화 대응능력 부족, 생산성의 상대적 저하, 농업노동력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II-1>

국민경제내의 농업부문의 비중 및 성장률



◆ 경제성장률 (GDP) ■ 농업비중 ▲ 농업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연도

4) 농업생산 품목의 변화

- 품목별 주요농산물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 생산면적
 - 식량작물인 쌀·맥류·두류·서류·잡곡류 등의 생산면적이 1970년 270만6천ha에서 1998년 133만1천ha로 크게 감소하였음.
 - 반면에 경제작물인 채소의 생산면적은 1970년 25만4천ha에서 1998년 27만8천ha로 증가하였고, 과수의 생산면적은 역시 1970년 6만ha에서 1998년 17만3천ha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생산량
 -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생산면적의 축소와 함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1970년 693만7천M/T에서 1998년 575만9천M/T으로 절대량이 감소하였음.
 - 반면에 경제작물인 채소의 생산량은 1970년 265만3천M/T에서 1998년 998만4천M/T로 증가하였고, 과수의 생산량은 1970년 42만3천M/T에서 1998년 215만3천M/T로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농업생산은 식량작물 중심에서 경제작물 중심으로 작부체계가 이동하였는데 이는 우리 농촌에 상업농의 진전이 이루어져 왔음을 반영하는 것임.이제 1990년대에 이르러 상업농은 농가경영의 일반적인 목표가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영농대상도 벼농사 중심에서 채소·화훼·축산 등으로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

<표 II-3>

품목별 주요 생산물의 생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천ha, 천M/T)

구 분		1970	1980	1990	1995	1998
식량작물	생산면적	2,706	1,982	1,669	1,346	1,331
	생 산 량	6,937	5,324	6,635	5,476	5,759
채 소 류	생산면적	254	359	277	322	278
	생 산 량	2,653	7,676	8,677	10,586	9,984
과 수 류	생산면적	60	99	132	172	173
	생 산 량	423	833	1,766	2,300	2,153
특용작물	생산면적	89	118	130	122	115
	생 산 량	-	-	13,889	11,971	11,478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9

- 실제로 농가의 영농형태는 벼농사나 전작에 의존하는 농가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채소·축산·과수·화훼 등의 작목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 ▶ 논벼 농가의 비중은 1990년 69.7%에서 1995년 54.8%로 연평균 7.8%씩 감소한 반면 채소·축산·과수·화훼 등의 농가비중은 1990년도 21.2%에서 1995년 37.1%로 연평균 8.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그 중에서 축산농가는 같은 기간동안 8만9천 농가에서 15만6천 농가로 연평균 약 11.9%씩 증가함.
- 결국 영농형태의 다양화와 농업경영의 전문화·규모화는 소비자 지향의 상업영농체제와 상호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임.

<표 II-4>

영농형태별 농가수

(단위 : 천호, %)

구 분	계	논벼	채소	축산	과수	화훼	전작 등
1990	1,767 (100.0)	1,232 (69.7)	172 (9.7)	89 (5.0)	107 (6.1)	6 (0.4)	161 (9.1)
1995	1,501 (100.0)	823 (54.8)	247 (16.5)	156 (10.4)	144 (9.6)	10 (0.6)	121 (8.1)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

□ 농업과 타산업의 상호연관성

- 최근의 IMF사태 기간을 제외한다면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경제의 비농업부문은 연평균 8%를 상회하는 고도성장을 기록한 반면 농업부문의 성장률은 2~3%대에 그침
- 농업부문의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근본원인은 토지자원의 부족에 의한 영농규모의 영세성을 꼽을 수 있음. 영세 영농규모는 사실 단위면적당 토지생산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신기술도입과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막는 장애가 됨으로써 농업생산성 및 농업부문 성장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함.
- 60·70년대 성장연대의 경제전략은 공업화 및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근간으로 한 공업부문 총력육성이었으며, 농촌노동력의 대규모 도시이동 및 타산업으로의 편입은 성장연대의 팽창하는 공업부문의 저임금 유지에 절대적 기여를 함.
- 공업화와 도시화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식량수요의 급속한 증대 및 농산물 전반에 대한 시장확대를 촉진함. 나아가 국민의 실질소득 증대는 식생활의 다양화와 고도화를 통하여 농업생산 구조에 영향을 미침. 즉 이제까지의 곡물위주의 생산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환금작물의 재배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이는 곧 농촌사회전반의 소득증대와 연결됨.
- 불균형 성장전략에 의한 2·3차 산업의 급속한 신장은 취업기회의 증대를 통하여 농촌인력을 흡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농가경영규모의 더 이상의 영세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함. 산업화에 따른 기술력 및 외화가득능력의 신장은 농업기술의 도입·개발을 비롯하여 비료공업과 농기계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수지개선 및 국가신인도 향상은 수리사업·농어촌도로개설·생활환경정비 등 농촌하부구조의 확충·개선을 위한 외국차관도입을 용이케 함.
- IMF사태로 인한 산업화구조의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대량발생한 실업자의 귀농현상은 농업·농촌이 근대화의 초석이었으면서 오늘날에도 경제충격의 완충역을 통한 국민경제의 기반이자 국민정서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농업·농촌의 희생위에서 전개된 것은 틀림없으나 산업국가로서의 강력한 경제력을 갖게 된 오늘날 축적된 기술과 재화는 역으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이러한 상호구조는 우리나라가 농업국가가 아닌 산업국가로의 발전이 불가피한 선택인 이상 그 산업화의 과정에서 비록 심각한 시행착오가 야기됐으나 궁극적으로는 산업간 공존공영의 기반구축이 규범적 국가목표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인식됨.

□ 농촌사회의 변모

- 농촌사회는 전통적으로 농경이라는 산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가족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강한 보수성과 배타성, 자급자족성을 유지해 옴. 이러한 특성은 경쟁을 속성으로 하는 산업화시대의 격변 속에서 농업·농촌을 열위에 처하게 함으로써 농촌사회는 상대적으로 낙후됨. 특히 농업 자체의 산업적 특성과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 곤란한 토지조건에서 한국농업이 가질 수 밖에 없는 낮은 경쟁력은 개방경제시대의 국제비교우위론의 표적이 됨으로써 성장연대의 정책적 소외를 유발함.
- 그러나 산업화에 의한 국가 전체의 발전은 물질 투자·정보확산·교육확대·교류촉진 등을 통해 농촌사회에 자극을 주고 농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며 현실의 낙후를 타파할 수 있는 의식과 수단을 강화시킴. 초기 농민의 자각과 농촌의 변모를 유발한 동인은 국가정책이나 계몽이라는 형태로 작용한 외부의 힘이 적으나 일단 변화의 계기가 주어진 후에는 내부의 견인력에 의한 확대재생산 단계에 돌입함.
-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회운동은 60년대말 시작되어 70년대 전성기를 이루었던 새마을운동임. 자생적이기 보다는 정부의 관제적 의지가 보다 강했던 이 운동은 그러나 빈곤을 추방하고 약동하는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강국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던 한국형 지역사회개발의 원동력이었던 바, 그 전개과정 및 나름의 성취는 한국농촌의 근대화 과정 및 성취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농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자각케하고 숙명이라고 여겨졌던 구조적 빈곤을 타파할 수 있도록 의식 및 힘을 결집시켜 그 이후 농업·농촌의 발전기반을 구축토록 유도한 계기의 많은 부분에 새마을운동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음.
- 새마을운동은 농촌계몽·사회개발·경제개발의 3대 목표를 통하여 정신적 자각·물질적 생활환경개선·생산기반조성 및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였고 부작용도 없지 않았으나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많은 분야에서 민·관협작의 모범적이고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80년대 초 새마을운동은 정치세력에 극심하게 오염되어 본래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추진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퇴조기에 접어들었으나 그래도 새마을운동은 농촌을 의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급격히 변화시킨 원동력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을 승계할 수 있는 후속적인 농촌지역 발전 패러다임이 요구됨.

- 오늘날 농촌사회는 의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시지역과 실시간대로 교류하고 있으며 도시와 비교하여 사회복지·기반시설 등과 같은 현저하게 차별되는 제약조건들을 나름의 속도로 해소해 가고 있음. 모든 생산활동에 원가가 계산되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영위되고 모든 정보가 빠르게 전달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생활속성은 주체적인 선택일 뿐 크게 다르지 않음.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있는 것들도 있으나 어차피 공간과 정보가 차단됨으로써 유지되는 순진성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대속에서 농촌과 그 속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업과 농촌환경이라는 재료만 다를 뿐 도시인들과 노동·수입·교육·생활 등의 면에서 비슷한 어려움과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따라서 향후 농촌과 농민에 대한 정책개발은 도시인과 차별이 없는 국민 모두에 대한 복지목표와 동일하게 접근될 것임.

□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및 지원

1)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 농업·농촌부문은 자체의 구조적인 영세성과 경제성장과정의 정책편중에 의해 경쟁력을 손상당하고 비교열위의 산업군으로 간주되어 왔음. 그러나 농업·농촌이 토지·환경·자원의 공급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적 가치가 상존하는 이상 농업·농촌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확대재생산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배려와 지원은 불가결한 상황임
-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1970년 중반까지 식량증산을 통한 자급자족을 목표로 이루어져 왔으나, 1970년대 말부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재편되었음. 이는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전략의 일환이었음.
 - ▶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1962년 당시 농림부가 농업근대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업구조개선심의위원회」에서 농가 육성의 필요성이 처음 논의됨.
 - ▶ 이를 토대로 1967년 제정된 농업기본법에서 자립 가족농의 육성 및 기업농·협업농의 활성화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그러나 이는 실천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사업별 시책을 약간 다른 수준이며, 훨씬 뒤인 1981년부터 시작된 영농후계자 육성사업 역시 인력확보 수준에 미치는 정도였음.

- ▶ 1990년대 들어 한국농업의 과제가 국제개방과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구조로 고착되면서 농업·농촌을 위한 신농정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함.
 -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1994년 농어촌발전대책
 - 1995년 농어촌특별세사업 신설
 - 1997년 쌀전업농 규모화촉진을 위한 고령농업인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도입 등
- 국내 농산물시장은 공산품의 수출증대와 함께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개방되기 시작하였으며 UR협상의 타결과 함께 본격적인 개방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음. 즉, 1986년부터 시작한 UR 다자간 협상이 1994년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포괄적 관세화와 단계적 관세인하, 수입물량 확대라는 원칙하에 체결되면서 쌀을 포함한 기초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이 허용되고 기존의 각종 보상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농업보호조치에 대한 철회일정이 구체화됨.
-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신농정추진계획, 1994년 WTO체제 출범에 대응한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대책 등 농업·농촌에 대한 신농정이 전개됨.
- 신농정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기술농업을 지향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며, 또한 풍요로운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서 농어촌을 정비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있음.
 - ▶ 세부내용으로는 쌀생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곡관리제도·농지제도·인력개발 및 기술혁신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시장과 유통혁신, 농어촌 종합정비와 복지가반 확충, 수출농업 육성 등임.
 - ▶ 특히 영세소농구조로는 농가가 안정된 경영을 하면서 성장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농업구조조정의 조기실현을 위해 4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함. 현재 농가를 전업농, 겸업농, 탈농전업농가, 탈농은퇴농가 등으로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육성하며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임.
-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정책은 전면적 수입개방하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육성을 목표로 개별경영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업농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음.
 - ▶ 기술농수산업을 선도할 연간 1만명 수준의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농어민 육성제도를 개선하고, 농업경영자대학·농업기술전문대학의 설립, 농업사 자격증제도 도입, 지역의 농어가를 위한 위탁교육제 실시, 선진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습득을 위해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함.

- ▶ 쌀·과수·축산 등 분야별로 2004년까지 15만명의 전업농을 육성하며 이를 중심으로 규모화를 추진함. 구체적으로는 규모확대를 위한 자금을 늘리고 농업진흥지역내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소유 상한선을 현재 3ha에서 20ha로 대폭 확대하고 시설원예나 과수경영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규모화를 병행하여 추진함. 또한 축산의 경우 전업 양돈·양계의 계열화를 촉진토록 함.
- ▶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생산기반을 완비하고 농업기계화와 주산단지 중심의 시설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진흥지역에 생산기반정비 및 농기계·시설·수매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전업농과 대형 위탁영농에 의한 벼농사의 기계화체계 확립과 채소 및 화훼 주산단지 중심으로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집중 지원
- ▶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이농인력의 재취업과 사회정책적 차원의 지원대책 강구
- ▶ 향후 10년간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함.

<표 II-5>

기간별 농정의 변화추이

시 기	농정목표	농정수단	농정방식
1960년대	식량증산	유휴자원 동원	소농보호(형평지원)
1970년대	식량증산과 농가소득증대	가격지지	소농보호(형평지원)
1980년대	농가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농외소득원 개발	소농보호(형평지원)
1990년대	경쟁력 향상	구조개선	선진경영체 지원 (선택적 지원)

2)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지원

- 90년대 들어 농업·농촌부문의 지원대책에 분수령이 된 것은 UR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1. 7월 수립된 2001년 까지의 농어업부문 종합대책임.
 - ▶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설치·운용
 - ▶ 1992~2001년간 총 42조원 투자(중앙정부 35조4천억원)

- 1994. 6월 문민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확정·발표
 - ▶ 164개 세부실천과제 확정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 ▶ UR협상의 조기타결 예상으로 42조원 투자계획 달성연도를 당초(2001)보다 3년 앞당긴 1998년까지 조기집행
 - ▶ 42조원 투자계획과는 별도 계획으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신설, 향후 10년간 (1995-2004) 15조원 투입 → 10개년 투융자 계획
 - ▶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 1993. 12. 15일 UR협상 타결
- 1998. 12 국민정부의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 1999. 1. 1. 「농업·농촌기본법」 제정·공포 → 2000. 1. 1. 발효
- 1999. 4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농업·농촌투융자 세부실천계획 확정
 - ▶ 1999 - 2004 6년간 45조원(중앙정부 37조8천억원)
 - ▶ 투융자 지원방향

<표 II-6>

농업·농촌 투융자 지원계획

구 분	제1단계('92~'98)	농업·농촌 투융자('99~'2004)
■ 재원규모	● 실적 : 52조6천억원(농특세 포함)	● 계획 : 45조원
■ 중점지원분야	● 경지정리, 농기계, 유리온실 등 →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물적 기반 확충	● 유통개혁, 수출촉진, 농가경영개선, 친환경농업육성 등 → 주로 소프트웨어중심의 지원 *재해대비 기반정비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상습적인 기상이변 대비
■ 개별경영체지원	● 자본 형성을 위한 보조지원 중점	●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융자지원으로 전환
■ 자금지원 방식	● 공급자 위주의 사업자 관리	● 수요자 위주의 「농업경영종합자금제」 도입
■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 사업의 운영 및 사후관리 미흡	●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집행 및 관리

-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은 21세기 우리 농업과 농촌에 근본적인 변혁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농촌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모든 경영주체들은 국가투자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농업·농촌환경을 향유하거나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국가투자를 자신들이 구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임.

3) 정책지향점

- 새 천년을 대비한 농정기본방향
 - ▶ 지식·기술·정보를 생산요소로 삼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농업의 우위성을 확보하여 선진농업 실현

<표 II-7>

농업·농업인·농촌의 시대별 위상 비교

구 분	20세기 산업사회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농 업	비교열위 산업	지식농업으로 우위성 회복
농 업 인	사회적으로 경시	지식농업으로 어엿한 경제주체
농 촌	문화·교육여건 및 SOC열악	삶의 질이 높은 쾌적한 생활공간

- 중점추진과제
 - ①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한 「농업·농촌발전계획」 추진
 - ▶ 21세기를 대비하여 수립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45조원 농업·농촌투융자 세부실천계획 확정·추진
 - ▶ 경쟁제한적인 규제개혁과 각종 불합리한 관행 개선
 - ② 기술·시장혁신과 신지식농업인 육성으로 지식농업실현
 - ▶ 전통농업기술과 첨단과학기술접목에 의한 미래형 기계·정보화 농업육성
 - ▶ 농촌의 정보통신환경개선으로 생산성 증대와 유통혁신 가속
 - ▶ 신지식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 ③ Agr-Business(농업관련산업)육성으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 농산물 가공사업의 체계적 육성
 - ▶ 농업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④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농업확산
 - ▶ 2004년까지 농약·화학비료 30%이상 절감
 -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품질인증제 확대

- ⑤ 식량안보시대에 대비한 주곡 자급기반 마련
 - ▶ 재해대비 생산기반 정비
 - ▶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의 확대·도입
- ⑥ WTO 차기 농산물 협상 및 통일대비 농정추진
 - ▶ 1999년말부터 시작되는 차기 WTO 협상에 철저 대비
 - ▶ 남북 농업 교류·협력 추진
- ⑦ 삶의 질이 높은 쾌적한 농촌사회 건설
 - ▶ 도시수준에 접근하는 농촌생활환경·교육·의료·농업인 복지 확충

□ 농업·농촌의 21세기적 의미

- 우리나라 농업은 불균형성장에 의한 산업화과정에서 상당히 빠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음.
 - ▶ 농업부문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비농업부문은 선진경제 수준에 가깝게 발전되고 있으나, 농업부문의 경우 자급자족적 전통 농업형태에서 탈피하지 못한 실정임.
 - ▶ 노동력과 토지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산업간 구조조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비농업부문은 확대되고 농업부문은 축소됨.
- 공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농촌인구의 대거 탈농 및 이농현상은 농가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농업인력의 질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대두됨.
 - ▶ 농업인력의 노령화
 - ▶ 농업인력의 여성화
 - ▶ 농업인력의 사기저하
 - ▶ 영농후계자 확보 곤란
- 또한 UR타결에 의한 농업의 국제화와 개방화는 가속될 것이며, 자유무역의 원리에 따라 저렴한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증대되어 국내산 농산물가격은 하락하고 이에 따라 국내농산물 자급도가 감소될 전망이다.
- 따라서 향후 21세기 농업·농촌의 입지는 타부문에 비해 여전히 불리한 환경에 처할 것임. 그러나 농업·농촌은 효율성이나 경쟁력의 논리와는 별개로 식량안보와 공간절대가치라는 측면에서 보호·육성되어야 할 부문으로 그 본질적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측면에서 구조조정 및 정책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21세기 농업·농촌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기간산업으로서,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산업으로서, 그리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산업으로서 다면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다음 과제가 대두됨.
 - ▶ 농업의 산업화·규모화
 - ▶ 여성농업인의 위상정립 및 육성
 - ▶ 농업인력의 육성 및 농민의 전문경영자화
 - ▶ 농촌의 인간정주에 맞는 생활공간화
 - ▶ 농업인의 복지증진

나.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의 변화

□ 농가인구 변화추이

-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및 성장과정에 있어서 농업부문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중의 하나가 농가인구의 감소라 할 수 있음. 농가인구는 1970년 1천442만2천명에서 1998년 440만명으로 연평균 4.2%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1970년대 초반까지는 감소율이 아직 약하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감소율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음.
 - ▶ 이농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1980년대에는 농가인구가 연평균 5.1%인 약 55만명씩 감소함.
- 농가인구의 감소속도는 농업의 기계화나 경지기반의 현대화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농업노동력 부족문제를 초래, 결국 농업인력의 확보는 농업부문의 주요 과제중 하나가 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표 II-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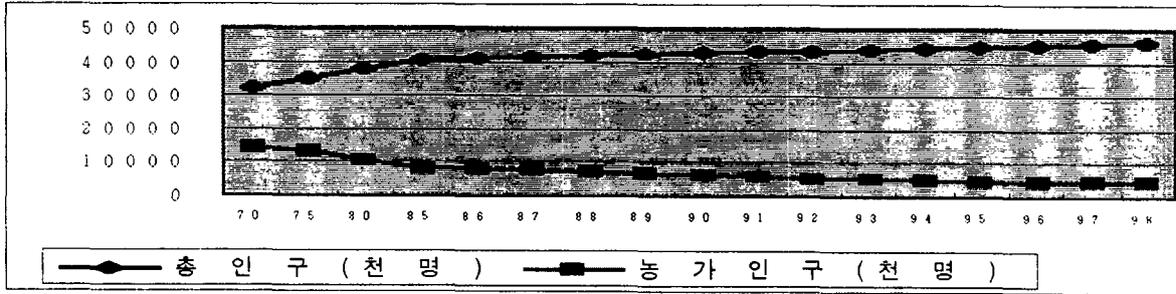
농가인구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1970	1980	1990	1998	연평균 변동률			
					1970~98	1970~80	1980~90	1990~98
총인구(A)	32,241	38,124	42,869	46,430	1.3	1.7	1.2	1.0
농가인구(B)	14,422	10,827	6,661	4,400	△4.2	△2.8	△5.1	△4.7
B/A(%)	44.7	28.4	15.5	9.5	-	-	-	-

자료 :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1999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9

<그림 II-2> 농가인구의 추이



□ 농가인구의 성별·연령별 변화추이

- 농가구성원중 20대의 경우 취업·결혼·대학 진학 등에 의한 이농으로 농가인구 비중이 크게 감소함. 30-50대의 경우에는 농가인구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전체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차이가 없음.
- 그러나 60세 이상의 농가인구의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대규모에 있어서도 1970년 114만3천명에서 1998년 134만3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결국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절대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60세 이상의 고령화라는 특징을 나타냄.

<표 II-9> 성별·연령별 농가인구현황

(단위 : 천명)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총농가인구	남	7,164	6,654	5,415	4,246	3,279	2,129
	여	7,258	6,590	5,412	4,275	3,382	2,271
	계	14,422	13,244	10,827	8,521	6,661	4,400
14세이하	남	3,231	2,478	1,653	1,086	699	352
	여	3,040	2,302	1,577	1,028	671	328
	계	6,271	4,780	3,230	2,114	1,370	680
15~19세	남	797	1,070	902	681	379	212
	여	700	910	782	590	355	211
	계	1,497	1,980	1,684	1,271	734	423
20~49세	남	2,096	2,069	1,857	1,433	1,157	845
	여	2,307	2,143	1,844	1,397	1,102	781
	계	4,404	4,212	3,701	2,830	2,259	1,626
50~59세	남	539	532	496	521	513	394
	여	567	575	578	608	598	473
	계	1,107	1,108	1,074	1,129	1,111	867
60세 이상	남	500	505	507	525	531	570
	여	644	659	631	652	656	685
	계	1,143	1,164	1,138	1,177	1,187	1,255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9

□ 농가 여성인구 변화추이

- 1970년 농가인구의 남녀 구성비를 보면 남성이 716만4천명(49.7%), 여성이 725만8천명(50.3%)에서 1998년 남성이 212만9천명(48.4%), 여성이 227만1천명(51.6%)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있어서 이미 70년대부터 여성인구가 더 많아진 상태에서 80년대에는 균형을 이루다가 90년대 들어 남성인구보다 계속 커지고 있음.
- 농가 여성인구의 연령별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음.
 - ▶ 15세 이상의 농가 여성인구는 같은 기간동안 58.1%에서 88.2% 높아졌음. 연령층별로 보면, 15~49세의 농가 여성인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변화가 미미하나, 50세 이상의 농가 여성인구는 그 비율이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음.
 - ▶ 같은 기간중 50세 이상의 노령층 농가 여성인구의 비율은 16.7%에서 50.5%로 크게 증가함.
 - ▶ 특히 같은 기간중 20~49세의 연령층이 230만7천명에서 68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출산을 통한 농가인구의 유지 내지 증가전망을 어둡게 함.
- 이처럼 농가 여성인구의 연령별 구조변화로 볼 때, 현재 농가인구의 감소원인은 집중적인 이농현상과 가임여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II-10>

농가 여성인구의 변화

(단위 : 천명, %)

구 분	1970	1980	1990	1995	1998
총농가인구(A)	14,422	10,827	6,661	4,851	4,400
농가여성인구(B)	7,258	5,412	3,382	2,373	2,271
15세 미만 농가여성인구(C)	3,040	1,577	671	328	269
15세 이상 농가여성인구(D)	4,218	3,835	2,711	2,045	2,002
20~49세 농가여성인구(E)	2,307	1,844	941	781	680
50세 이상 농가여성인구(F)	1,211	1,209	1,305	1,158	1,146
B/A	50.3	50.0	50.8	48.9	51.6
C/B	41.9	29.1	19.8	13.8	11.8
D/B	58.1	70.9	80.2	86.2	88.2
E/B	31.8	34.1	27.8	32.9	29.9
F/B	16.7	22.3	38.6	48.8	50.5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9

□ 농가인구의 성별 학력구조

- 우리나라의 국민의 전반적인 고학력화 추세와 마찬가지로 농가인구도 고학력화가 진전되고 있음.
 - ▶ 농가 남성의 경우 1970년대 초등학교 졸업자 이하의 비율이 83.2%에서 1995년 50.3%로 낮아졌으며,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각각 9.8%, 5.9%에서 17.4%, 26.4%로 높아졌음. 대졸자 이상의 비율도 1.1%에서 5.9%로 높아졌음. 그러나 아직 농가남성의 학력은 전국 남성 평균의 학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 농가 여성의 경우 1970년대 초등학교 졸업자 이하의 비율이 94.7%에서 1995년 71.9%로 낮아졌으며,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각각 4.0%, 1.2%에서 12.0%, 13.7%로 높아졌음. 대졸자 이상의 비율도 0.1%에서 2.4%로 높아졌으나, 전국 여성 평균의 학력인 12.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농가남성의 학력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
- 결과적으로 고졸이상의 학력소유자가 비록 전국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학력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농업생산부문에 있어 인적 자산의 질이 계속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함.

<표 II-11>

농가인구의 학력구조

(단위 : %)

구 분	남 성		여 성	
	전 국	농 가	전 국	농 가
1970 초졸 이하	61.2	83.2	84.7	94.7
중졸	15.1	9.8	8.2	4.0
고졸	15.2	5.9	5.5	1.2
대졸 이상	8.5	1.1	1.6	0.1
1995 초졸 이하	18.6	50.3	36.2	71.9
중졸	14.5	17.4	16.9	12.0
고졸	41.2	26.4	34.1	13.7
대졸 이상	25.7	5.9	12.8	2.4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및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해당연도

□ 농업인구의 변화전망

-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구를 전망함에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인력의 현황분석과 중장기 수급전망”에서 예측한 2005년까지의 전망치를 수용하고, 여기에서 2010년까지의 전망치는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함.

- 농업인구 전망모형 : Cohort 방법

- ▶ 1단계 : 농업인구를 전망하기 위해 인구균형식 도입

$$P_t - P_0 = B_{0t} - D_{0t} + I_{0t} - E_{0t}$$

여기서, P_t : t기의 인구수

P_0 : 0기의 인구수

B_{0t} : (0, t) 기간의 출산자

D_{0t} : (0, t) 기간의 사망자

I_{0t} : (0, t) 기간의 인구유입자

E_{0t} : (0, t) 기간의 인구유출자

- ▶ 2단계 : 인구균형식에 도입되는 각종 인구수의 산출을 위해 변형식들을 이용하여 연령별 농업인구 추정

- 연령별 농업인구의 이농률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연령별 출산율과 생존율 (Survival Rate)을 원용하여 각각 2000년과 2005년의 연령별 농업인구 추정

- 추정산식

$$P_2 = (B_1 + S_1)P_1 + M_1, \quad P_3 = (B_2 + S_2)P_2 + M_2$$

여기서, P_1 : 2000년 인구

P_2 : 2005년 인구

M_1 : 1995-2000년 순 이농인구

M_2 : 2000-2005년 순 이농인구

- 연령별·성별 농업인구 전망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인구의 전망을 위해 2가지 대안설정에 의해 추정하였음. 즉 IMF 외환위기사태가 농업·비농업부문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와 IMF 외환위기가 농업·비농업의 노동력에 다르게 영향을 미쳐 농업인구가 비농업인구로 순이농률이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추정하였음.

- ▶ 본 연구에서는 IMF의 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여 농업인구의 전망치를 기술하였음.(IMF위기의 고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참조)
- 1990~1995년 사이의 농업인구의 연령별 이농률이 1995~2005년에도 지속된다면 가정하에 농업인구의 성별·연령별 전망치는 1995년 485만1천명에서 2000년 370만명, 2005년 279만9천명, 2010년 218만2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농업인구의 연평균 변화율은 2000~2005년 남자가 △4.8%, 여자가 △4.9%, 2005~2010년 남자가 △4.4%, 여자가 △4.5%로 인구감소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간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이농률이 높은 20~30대 인구가 이미 급격히 감소되어 추가 이농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인구의 자연감소율이 작용하기 때문임.
- 2000년과 2005년, 2010년의 농업인구는 각각 60대 초반과 60대 후반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60세 이상의 농업인구는 남자가 2000년 31.7%, 2005년 37.0%, 2010년에는 42.3%로 증가하고 여자는 36.1%에서 42.4%, 48.7%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반면 20~30대 젊은층의 인구는 남자가 2000년 22.5%에서 2005년 20.7%, 2010년 18.9%로 감소하고, 여자의 경우 17.8%에서 16.3%, 14.8%로 감소할 전망이다.
- 예측결과 60대 후반 연령의 절대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나아가서는 농업생산부문의 인적자원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12>

농업인구의 장기 전망

(단위 : 천명,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남자	여자	합계									
10대이하	23.8	21.7	22.7	17.5	15.5	16.5	13.3	11.5	12.4	9.1	7.5	8.3
20대	13.9	9.9	11.8	12.7	10.0	11.3	9.8	7.3	8.5	6.9	4.6	5.8
30대	10.0	9.2	9.6	9.8	7.8	8.8	10.9	9.0	10.0	12.0	10.2	11.1
40대	11.8	12.4	12.1	12.9	13.4	13.1	12.6	12.4	12.5	12.3	11.4	11.8
50대	16.6	19.1	17.9	15.3	17.1	16.2	16.3	17.4	16.9	17.4	17.6	17.5
60대이상	24.0	27.6	25.9	31.7	36.1	34.0	37.0	42.4	39.7	42.3	48.7	45.5
합 계	2,373	2,478	4,851	1,813	1,887	3,700	1,374	1,425	2,789	1,074	1,108	2,182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력의 현황분석과 중장기 수급전망, 1998.

주 : 2010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5년 전망치에 증감률을 고려한 예측치임.

다. 농가소득 / 농가부채

-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수입으로 구분됨. 농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의 소득으로 나눌 수 있음.
- 농가소득은 1970년 25만6천원에서 1998년 2천49만4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반면에 농가부채도 동기간에 1만6천원에서 1천7백1만1천원으로 증가하여 농가소득 중 농가부채의 비율이 1998년 기준 83.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농가소득을 비교해 보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가의 생산의욕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IMF체제 이후 농가경제는 소득이 감소한데 비해 부채의 증가로 생활여건의 질적 저하를 가져와 이를 구조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정책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II-13>

농가소득 / 농가부채의 변화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1970	1980	1990	1995	1998
농가소득(A)	256	2,693	11,026	21,803	20,494
농업소득	194	1,755	6,264	10,469	8,955
농외소득	62	938	2,841	6,931	6,975
이전수입	-	-	1,921	4,403	4,563
농가부채(B)	16	339	4,734	9,163	17,011
금융기관	6	173	4,078	8,364	16,235
개 인	10	166	656	799	777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292	2,809	11,320	22,933	25,597
D = A-B	240	2,354	6,292	12,640	3,483
A/C	87.7	95.9	97.4	95.1	80.1
B/A	6.3	12.6	42.9	42.0	83.0
D/C	82.2	83.8	57.1	58.0	13.6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9

주 : 1982년까지 농외소득에 이전수입 포함.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계수지를 기초로 연간소득으로 환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됨

라. 생활환경

- 농촌의 인구감소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직업의 다양화 및 취업기회의 증가, 농업의 기계화 및 경지기반의 현대화, 농업의 상대적 열위, 농촌지역의 삶에 질을 위한 복지수준의 취약 등에 기인한다 할 것임.
- 특히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위한 복지수준의 취약함은 청·장년층의 이농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여 농가인구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야기시킴. 이로 인해 농업부문은 인적 자본의 질적 저하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존립기반은 위협받을 것임.
- 따라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위한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농촌의 미래지향적 위상을 지원하는 정책배려가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 자체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농촌지역의 복지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농간의 복지수준을 측정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1997. 12)”결과를 수용·참조함.

□ 교육부문

- 도시·농촌간 평균 교육수준에 있어 고졸이상자는 도시가 52.1%, 농촌이 23.3%로 도시가 농촌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도농간의 학력격차가 큼을 알 수 있음.
- 가구주의 자녀 기대수준(대학졸업 이상)은 도시가 88.0%, 농촌이 80.0%로 도시가 농촌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도시가 9.8%, 농촌이 10.5%로 농가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도시가 22.2명, 농촌이 17.5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농촌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이 높고 소득은 도시에 비해 낮기 때문에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발생한다 할 것임.

<표 II-14>

교육부문의 도농간 비교

(단위 : %, 명)

구 분	도 시	농 촌
평균 교육년수(고졸 이상)	52.1	23.3
가구주의 자녀 기대수준(대졸 이상)	88.0	80.0
가구당 교육비 지출	9.8	10.5
교원 1인당 학생수(고교)	22.2	17.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1997.

□ 보건부문

- 1인 1일 에너지 섭취를 위한 영양 공급량에 있어 도시 1,861kcal, 농촌 1,711kcal로 도시가 농촌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료인력 1인당 인구 수는 도시가 192명, 농촌이 626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기관 수는 전체의 91.1%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병상당 인구수는 도시가 202명, 농촌이 427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보건의료시설 및 인력과 영양공급량에 있어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5>

보건부문의 도농간 비교

(단위 : kcal, %, 명)

구 분	도 시	농 촌
영양공급량(1인 1일 에너지 섭취량)	1,861	1,711
의료인력 1인당 인구 수	192	626
의료기관 수	27,108(91.1)	2,665(8.9)
병상당 인구 수	202	427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1997.

□ 주거부문

- 주택보급율에 있어 도시 79.3%, 농촌 89.6%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이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내부 편리시설에 있어서는 도시가 농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주택보급율은 농촌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편리성 측면에서는 도시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I-16>

주거부문의 도농간 비교

(단위 : %, 개)

구 분	도 시	농 촌
주택보급율(1997)	79.3	89.6
온수목욕시설	79.2	60.9
수세식 화장실	84.0	44.0
입식부엌	87.4	74.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1997.

□ 상·하수도 보급

- 상·하수도 보급률은 도시가 농촌보다 월등히 높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환경 오염방지노력 또한 도시가 농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17>

상·하수도 보급의 도농간 비교

(단위 : %, 개)

구 분	도 시	농 촌
상수도 보급율	92.1	34.4
하수도 보급율	37.5	3.4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도	대도시 94.3, 중소도시 90.1	88.4
환경오염 방지노력	58.6	41.8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복지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1997.

□ 기타 부문

- 사회부문에 있어 노령화의 경우 도시 18.4%, 농촌 58.6%로 농촌이 도시에 비해 노령인구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구주의 경우 도시 16.1%, 농촌 19.2%로 농촌이 도시에 비해 여성가구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타 정보통신의 보급에 있어 도시가 농촌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전에 있어서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문화·여가에 있어서는 도시가 농촌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18>

기타 부문의 도농간 비교

(단위 : %, 개)

구 분	도 시	농 촌
노령화 지수	18.4	58.6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16.1	19.2
PC 보유, PC통신가입율	대도시 31.0, 9.0	16.3, 5.3
도로포장율	특별시도 90.6, 시도 73.7	군도 49.9, 농촌도로 23.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복지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1997.

□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 분석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준에 있어 대부분 농촌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의 이농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속적 이농현상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근원적인 면에서 농촌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마. 농촌가족구성원의 지위와 역할

□ 농촌 가족구성원의 역할구조

1) 역할구조의 정의

- 일반적으로 사회조직에 있어 그 조직에 속한 구성원은 그의 지위에 맞는 역할, 즉 행동을 기대함.
- 농촌의 가족구성원은 그 가족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기대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적 속성에 따라 개별적 가족구성원이 갖는 역할기대를 가족역할구조 또는 가족관계라 함.
- 가족역할구조란 가족구성원의 개별적인 역할이 가족과 함께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할당된 것이며, 가족구성원 각각의 역할에 있어 상호협력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의미함.
 - ▶ 보다 근본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역할구조는 가족관계의 하위적 개념으로 가족내 외에 있어 인간관계를 의미함. 따라서 가족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인간적 반응행동특성은 가족에 주어진 사회적 역할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개인적 역할이 주된 요인임.

2) 농촌가족구성원 역할구조의 규제요인

- 세대
 - ▶ 농촌가족내에서 세대는 25세 내지 35세 가량의 차이를 지님.
 - ▶ 농촌가족의 경우 높은 세대가 가족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짐.
 - ▶ 오늘날 상위세대가 60세 이상이면 다음 세대로 권한이 위임되나, 신·구세대간의 갈등이 매우 큼
- 성
 - ▶ 농촌의 경우 남존여비·남아선호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함. 즉 여성의 상대적 지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함.
 - ▶ 향후 농촌생산노동에 있어 여성의 주류화로 그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
- 서열
 - ▶ 서열과 연령은 지위와 역할의 차이에 주요한 규제요인임.
 - ▶ 특히 장자의 경우 아직도 그 권한과 의무가 매우 높음.

□ 농촌 가족구성원의 지위역할과 사회관계

1) 가장

- 농촌가족에서 가장은 호주 또는 세대주가 되며, 집안의 어른으로서 강력한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다른 가족구성원을 통제함.
- 오늘날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고 수평화되면서 가장의 권위와 권한은 약화되고 가족집단의 풍토 또는 분위기도 민주화 내지 동권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가장의 권위와 권한을 내세우는 가장은 가족과 세대차나 부적응적 행동으로 보임.
- 가장의 교체는 대부분 세대적인 교체로 고령화하여 현역에서 은퇴하면 다음 세대가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분위기를 변화시킴.
- 남자가 없는 경우 가장은 주부가 담당하게 되는데 농촌의 경우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장의 성격·가치관·행동유형은 가족의 역할구조의 지표가 됨. 가족생활의 주된 방침을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핵가족화의 오늘날 농촌가족에서는 농업자이자 남편으로서 가장이 주리더쉽이 되고 동 가장의 주부인 농가주부는 부리더쉽이 되는 경향이 높음.

2) 주부

- 주부는 농업생산자로서 가장의 부인으로서 농가주부라 함.
 - ▶ 과거 집안살림을 맡고 남편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삼아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생활에서의 소비결정 주체로서 또는 마을부녀회 등 각종 사회적 참여와 가족적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 주부의 역할은 핵가족화와 생산노동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점차 제고·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 주부의 생산참여 증가
 - ▶ 상품구입행동에서의 주부의 비중 증가
 - ▶ 가사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주부의 발언권 강화
 - ▶ 주부의 가사노동 및 공헌도 증가
 - ▶ 남성중심의 가족법 개정 등

3) 자녀

-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가족이나 농촌가족에 있어 장남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음. 장남은 가장을 계승하고 부친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며, 그 집안의 대를 잇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음.
- 최근에는 장남이 많은 교육을 이수하고 도시지역에 취업하여 분가하는 경향이 높아 그 역할과 책임을 차남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는 경우도 많음.
- 딸의 경우 출가하여 외인이 될 가족구성원으로 간주됨.
-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화 또는 전달매개를 통하여 자녀가 올바르게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상존함.

4) 계열 가족원

- 농촌의 계열 가족형태는 대부분이 미혼의 삼촌이나 고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음. 이들이 결혼을 하면 분가 또는 출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출가전 결혼한 장남과 동거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이들은 부모가 한쪽만 있는 경우 가족의사결정에 있어 그 비중이 높지만, 부모가 양쪽 모두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 그 비중이 매우 낮음.
- 계열 가족원이 결혼을 하면 대부분 분가하여 대가족화하지 않고 핵가족화함.

바. 농업·농촌의 과제와 대책방향

□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농업부문의 위기를 지적하는 것은 이 산업에 대한 습관적 애착이나 감상 때문이 아님. 그것은 농업부문이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도 그 존립기반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실체적 위험상황을 걱정하기 때문임
- 당연히 농업이 영위되기 위한 농촌의 일의적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생존의 선결조건인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한다는데 있음. 물론 국제비교우위의 입장에서서는 비교 열위의 국내농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극도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모든 식량을 외부에 맡긴다는 것은 안보차원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이 단순히 생산효율성면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용도폐기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임

- 그러나 외부로부터 모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농업·농촌을 포기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는 또 다른 곳에 있음. 그 동안 농업부문의 가치척도는 농촌사회나 농민의 삶보다는 생산해 내는 농산물의 국민경제에 의한 기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 즉,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총수요량을 어떤 가격하에서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는지가 가치판단의 관점이었음. 이러한 관점은 곧 바로 국제비교우위론과 연결되어 농촌의 상대적 낙후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총체적 국가경영의 관점에서 국민경제의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주의가 오류는 아니지만 그 동안 정책접근 방식이 진정한 농업부문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오류는 물질수준이나 국민욕구 또는 국가목표가 지금까지와는 다를 수 밖에 없는 앞으로의 탈실업·정보·지식기반 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나타날 위험성이 크다는데 문제가 있음
- 농업·농촌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발상의 전환이 요청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임. 다시 말해서 농어업부문의 가치를 생산공급면에 두어온 기존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 그 동안 성장제일의 국가목표를 복지우선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결부하여 농업·농촌의 미래지향적 위상을 확실히 하자는 것임
- 여기서 농업·농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의 확립은 농업부문의 본질적 가치가 농산물의 생산·공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농경지·산림지·목축지·강·호소·섬·바다·개펄 등 광역적 농업 관련 공간의 존재 자체와 그속에서 영위되는 생명창조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임
- 실제로 농업부문의 보유가치중 생산물 생산기능에 의한 기여는 30%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을 만큼 정작 농업·농촌이 국민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은 재화의 생산과 동일한 가치로 또는 그것을 능가하는 가치로 농업·농촌공간 그 자체가 갖는 생명의 보전과 육성능력, 환경의 자정기능, 물인간·무차별적 산업화에 대한 완충작용, 도·농 구별없는 생활권의 광역화 속에서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정신적·육체적 활력의 공급원, 미래의 불가측한 토지이용수요에 대비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우리 앞에 존재하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은 생산물의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의 주체인 농민과 공간의 상태인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본질가치적인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함.

□ 농업·농촌의 과제와 대책방향

- 개방화시대에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길 밖에 없으며, 그것도 총량증대의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수익성 증대에 중점을 둔 경영효율지향의 정책전환이 필요함
-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업생산 관련 각종 국가보조금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WTO체제의 출범은 국내 농산물 시장을 세계시장과 분리된 별개의 시장에서 통합된 미래시장의 한 지역시장으로 변모시키고 있음.
- 이러한 농산물교역의 자유화추세와 함께 농업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은 국내시장에서의 농산물 공급증가와 상품의 질적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농산물의 가격 및 품질경쟁을 촉진시키게 될 것임.
- 그 결과 농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주도권이 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소비자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임. 따라서 농업생산의 주체도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업적 경제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전문영농인으로 존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농정이 당면한 과제중 하나임.
- 농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업생산체제가 전문화·규모화·집약화의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생태계 순환체계의 붕괴와 각종 환경오염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해 옴. 농업은 본래 식량생산기능 못지 않게 자연환경의 보호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증산을 위한 집약화 과정에서 토양과 수질오염을 일으켜 농업 본래의 기능인 환경보전기능을 상실해 가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농업생산방식에서도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보전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상당기간 동안 농촌간의 소득 및 생활여건의 균형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외국에서는 농업을 단지 식료품을 생산하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태계와 지역사회의 공간질서를 유지·보전시키는 환경산업으로 보고 농업종사자에 대한 사회정책적 수단의 강구와 농촌개발을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음.
- 한국의 농정도 농업의 경쟁력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농촌공간의 소득기회와 소비기회 그리고 지역주민과 그들의 자녀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개발하도록 정책의 대상범위를 넓혀가야 함.

II. 농업·농촌의 미래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하게 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농업·농촌정책을 둘러싼 권한과 역할 및 재원의 배분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한국농정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임

□ 지표로 본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상

구 분	1995	2000	2004
● 농림업 및 관련산업 부가가치(10억원) (GDP 대비 비중, %)	53,149 (15.1)	60,745 (14.3)	70,345 (13.4)
▶ 농림업 부가가치(10억원) (GDP 대비 비중, %)	20,570 (5.8)	21,354 (5.0)	21,554 (4.1)
▶ 농림업관련산업 부가가치(10억원)	32,579	39,391	48,791
▶ 농림축산물 수출(십억달러)	1.2	2.3	5.0
● 농어촌 인구(십만명) (총인구 대비, %)	95.7 (21.3)	85.8 (18.3)	83.9 (17.4)
● 농가인구(십만명) (총인구 대비, %)	48.5 (10.9)	44.2 (9.4)	35.0 (7.3)
▶ 농가호수(십만호)	15	14	11
● 전업농(명) (쌀 전업농, 명)	16,375 (11,435)	95,000 (60,000)	150,000 (100,000)
● 농가소득(십만원)	218.0	233.7	295.0
▶ 농외소득(십만원)	69.3	85.9	106.2
● 농지면적(십만ha) (논면적, 십만ha)	19.8 (12.0)	18.8 (15.5)	18.0 (11.0)
▶ 호당 평균 경지면적(ha)	1.34	1.34	1.64
● 쌀 생산량(십만석)	326.0	325.7	306.7
▶ 쌀 자급률(%)	92.2	98.0	98.5
● 농어촌도로포장률(%)	29	38	51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39	57	71
● 의료인력 1인당 인구(명)	626	453	37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004년 농정지표 재점검』(농림부)자료를 기초로 최근 경제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치임. (부가가치 및 소득은 '95 불변가격)

2. 농업·농촌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의의와 위상

가. 여성농업인의 정의와 분류

□ 여성농업인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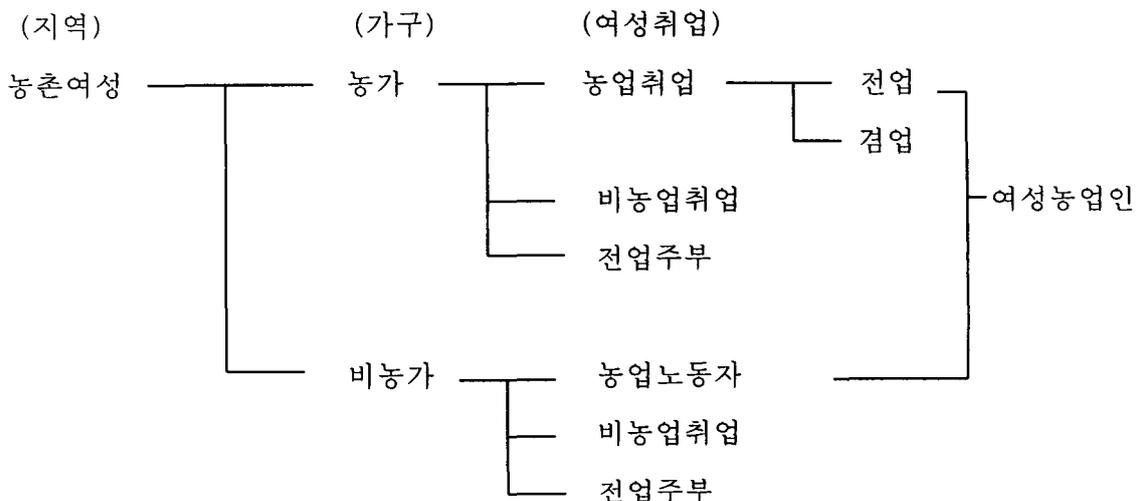
- 여성농업인은 현재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면서 농업재생산활동이라 할 수 있는 가사노동에도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부문 여성인력임.
- 현재 우리 농촌은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성의 영농참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종사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분명히 규정되어야 함. 농촌여성을 총체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나 또는 농가주부로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갖도록 하여 21세기의 농업을 담당할 주체로서 새롭게 농촌의 여성상이 정립되어야 함.
- 또한 여성농업인이 영농참여 증대에 의한 의식변화와 농가내의 역할구조를 이해하고 여성 스스로 농업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2) 여성농업인의 분류

-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자라는 농촌의 기능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할 수 있음.
- 우선 농가여성과 비농가 여성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집단은 다시 여성자신의 취업여부, 취업부문, 취업유형에 따라 세분화됨.

<표 II-19>

농업취업을 기준으로 여성농업인의 분류



나. 전통적 농업·농촌에 있어서의 여성농업인의 위치

- 과거 여성농업인은 과중한 노동량의 영농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위치는 농업보조자로서 단순농업노동만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활동의 참여에 비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하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영농 종사자로서의 인식이 희박하고 주체적인 영농인의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동기가 부족함.
- 전통적인 가족농이 경영의 개념없이 자급자족과 생산, 판매를 위해 남성위주의 일방적인 지휘와 지도아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에의 참여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나 경영에 있어 남성들의 주도하에 이끌리는 남성 - 주, 여성 - 종의 관계가 전통적으로 성립하여 영농에 대한 의사결정에 소극적인 경향을 가지며 폭넓은 농업경험을 지닌 생산주체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는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기 보다는 농업의 상대적 불리성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궁핍으로부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부차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함.

다. 미래 농업·농촌에 있어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의 산업구조 및 도시화에 의한 농촌의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에 대한 참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변화되는 농업환경은 농업생산활동에서 부각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위상과 지위를 보장하여 창조적인 경영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농업발전과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임을 시사함. 즉 향후 농업·농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여성농업인의 사회적인 역할증대와 위상정립이 선행되어야만 우리 농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 자산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임.
- 여성농업인의 위상정립과 권한보호는 농촌 인구구조의 구성에서 여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거나 농업·농촌에 대한 그들의 실제적인 기여도를 평가한 정당한 급부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남·여 불평등에 대한 구습의 타파라는 21세기적 관점에서 도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인간사회의 지향가치임.

3. 여성농업인 노동가치의 실현

가. 여성농업인의 노동형태

□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 우리나라의 현행 농업구조하에서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과 마찬가지로 농업생산노동에도 참여하면서 농업재생산활동이라 할 수 있는 가사노동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은 과중한 노동을 부담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은 농가경제 내에서 농가소득을 획득하는 경제주체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이자 농업생산의 주체로 농업노동에 참여하고 있음.
 - ▶ 1998년 현재 전체 농가인구의 51.6%가 여성이고 농가 노동투하량의 48.4%를 담당하고 있음
 - ▶ 1996년 여성농업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88.8시간, 월평균 근로일수는 24.2일, 일평균 근로시간은 7.8시간에 이르고 있음(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1997)
- 여성농업인이 담당하고 있는 농사는 비교적 가격이 안정된 논농사보다는 가격등락이 심한 밭농사·축산·과수·시설원예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시장 노동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격하되고 있음.
 - ▶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은 대부분 기계화정도가 낮고 수작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노동효율이 떨어져 본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에 의해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음.
 - ▶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농촌사회의 남녀차별의식은 여성의 임금수준을 적게 책정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음.
 - ▶ 전통적으로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한 밭농사인 콩·보리·밀·옥수수·녹두·팥·수수·감자 등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물이 수입개방됨으로써 국내생산물의 시장경쟁력을 상실함. 따라서 이들 작물의 국내생산은 화폐교환을 위한 생산이라기 보다는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노동은 주변적이고 화폐가치가 없는 생산노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활동에의 참여는 남성농업인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의 노동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담당하는 정신적·육체적 생산활동임. 가사노동에 포함되는 활동은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관리·가족관리·가정경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은 농업생산과 농촌주거의 특성상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구분이 어려워 가사노동은 사회적 생산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가사노동이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농가소득증대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 농촌가정의 일손부족으로 가사노동을 소홀히 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욕 상실, 자녀문제, 여성자신의 건강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생활의 질 저하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 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야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업생산비중의 올바른 평가, 여성농업인에 유리한 손실보상·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의 공정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이는 농업생산에 있어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노동에 대한 합당한 급부를 지불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농업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생산성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는 유인이 될 것임.

□ 여성농업인의 공익노동

-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활동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민의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지역활동 등에 참여하여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호 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각박한 사회분화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지역 주변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농촌의 소외노인을 돌보고 도시가족의 휴식을 포함한 가족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대가없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

나.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 여성농업인의 농업에서의 역할은 향후 지속적으로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에서의 노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노동·가사노동·공익노동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나, 아직은 제대로의 노동가치를 인정받거나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노동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야만 비로소 여성농업인의 노동대가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활동의 의욕을 자극하게 될 것임.
 - ▶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가치
 -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입농산물의 시장방출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발작물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수입농산물에 의해 사라지는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목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을 고려한 기계화 추진, 밭의 기반정리, 여성농업인의 농업전문인력으로서의 양성이 실현되어야 함.
 - ▶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가치
 - 가사노동 가치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는 그것이 농산물가격 및 농가소득에 공정하게 반영될 때 가능함.
 - ▶ 여성농업인의 공익노동 가치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식량자급의 중요성과 식량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국민을 감동시키는 농업으로 거듭나야 함.

4. 가족농과 여성농업인

가. 가족농의 개념 및 의의

- 가족농이란 가족구성원에 의해 농업의 경영의사가 결정되고 경영주와 가족구성원이 제공하는 가족노동력을 주축으로 하는 전통적 또는 전문적 농업경영체임.
 - ▶ 가족농은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농(중소농가) 뿐만 아니라 기업적 운영을 하는 가족농(전문가족농)을 포괄하는 개념임.
 - ▶ 전문가족농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몇 가지 작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몇가지 생산과정을 전문화한 가족농임.
- 가족농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농업생산이나 가공·유통으로부터 얻는다는 점에서 부업농과는 차이가 있음. 즉 가족농은 영농규모를 근거한 대·중·소농의 개념과는 달리 경영의사결정단위, 노동력 조달방법, 가계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의 비중과 같은 특성으로 정의됨.

- 가족농의 농업경영상 강점은 다음과 같음.
 - ▶ 가족노동력의 자기 고용 : 외부의 노동력을 찾기 위한 비용을 비롯하여 노동계약 등과 같은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 불황에 대한 강인성 : 최소한 노동보수만으로도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어 불황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임
 - ▶ 신속한 의사결정 : 가족의 유대를 기초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 경영교육과 경영승계 가능 : 후계자가 경영주와 함께 현장체험을 통하여 인적자본을 형성하게 되므로 경영승계가 유연하게 일어날 수 있음.
- 이러한 가족농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성격이 변모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력의 비중증가, 자본집약적 농업생산, 자작농 감소 및 대규모 농가 비중 증가 등에 의해 가족농의 겸업농가 전환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가족농은 감소하고 있으나, 그 속성은 서구의 대규모 농장에서 아시아 소농사회에 이르기까지 가장 이상적인 농업경영형태로 인정되고 있음.
- 따라서 농업부문 개방화에 당면하여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저로서 가족농 중심의 구조·경영정책을 체계화하여야 할 시점인 것으로 분석됨.

나.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 정책방향”의 검토

□ 정책수립의 배경

- WTO출범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체 규모확대 및 시설현대화 필요성
 -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는 물리적 한계와 대규모투자 및 장기적 시간소요
 - ▶ 다수의 중소농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는 비판 제기
- IMF이후 여건변화에 의해 대규모·첨단시설 투자사업의 한계 노출
 - ▶ 수입 원자재(농업용 유류, 배합사료 등) 가격상승으로 경영부담 가중
 - ▶ 기술이나 노하우 부족에 의한 부실화사례 발생
-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농업 경영형태가 대부분 가족농인 점에 비추어 가족농을 규모화·전문화·협동화하여 규모의 경영과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저비용·고효율 농업구조를 조기에 정착하여 농업체질을 강화토록 하는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 정책방향”을 수립(1998. 7.)

□ 가족농체계의 기본방향

- 전업농을 중심으로 규모의 확대 추진
 - ▶ 전업농 육성사업 보완 발전
 - ▶ 육성목표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상자 범위의 확대
- 가족농 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해 젊은 후계 가족농 양성
 - ▶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을 발전시켜 차세대 가족농의 중추세력으로 육성
 - ▶ 전업농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단계로 영농기반 확충 및 기술·경영능력 제고
- 규모화·전문화가 곤란한 중소농은 협동화를 통한 규모의 경영 및 소득안정화 도모
 - ▶ 품목별, 분야별로 협업화·조직화·법인화하여 공동생산, 공동작업, 공동유통 등 규모의 유리성 확보
 - ▶ 저장·유통·가공분야에 대한 참여확대로 범위의 경제 도모
 - ▶ 상품차별화와 친환경적 농업육성, 직거래 등에 의해 소득증대
- 영농승계인이 없는 고령농가나 이탈농은 경영이양 촉진대책 및 복지시책 추진
 - ▶ 고령농가의 경영이양 유도, 영세농업인에 대한 복지시책, 직업훈련 확충 등
 - ▶ 지역종합개발방식에 의해 2·3차 산업을 유치하여 농외소득기회 확대

□ 가족농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 가족농은 노동력의 기본적인 조달원이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임에 반해 전업농은 필요한 경우 노동력의 외부조달을 당연시함. 따라서 기업적 운영을 하는 경영체를 포괄하는 전업농을 전문가족농으로 포함하여 기존의 전업농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수정·보완하여 가족농의 정책방향으로 정립한 것은 대부분 중소농인 순수 가족농의 입장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 전문가족농에 대하여는 새로운 개념으로 한정하거나 재정립하여야 할 것임.
- 정부의 가족농의 정의에 의하면 가족농은 가족구성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우리 농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농가의 의사결정은 가족구성원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가족농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농가의 영농이 실질적으로 가족구성원의 경영의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경영자로서의 자기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의 농업경영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998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은 전체 농가소득의 43.7%인 895만5천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 이러한 농가현실에서 가족농에 대한 정책은 농촌의 현실경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임. 가족농이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이 상당부분 농업생산이나 농업과 관련된 가공, 유통 등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 이렇게 하여야 안정적인 소득보장하에 농업발전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
- 가족농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경영주뿐만 아니라 경영단위에 대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즉 가족농내의 가족구성원간 의사결정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도록 가족성원의 경영참여 보장과 함께 가족경영의 공동경영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다. 가족농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 가족농의 육성은 궁극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것으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일면을 보면,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 농업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며 가족농 경영의 핵심적인 한 축임.
- 전통적인 가족농은 경영의 개념없이 자급자족과 생산·판매과정이 남성위주의 일방적인 지휘와 지도아래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가족농에서는 농업생산활동에서 부각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가족구성원의 창조적인 경영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농업발전과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임.
- 또한 우리 농업생산 대부분을 담당해 온 중소농이 가족농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되는 가족농에 대한 정책은 가족농의 핵심이 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육성되어야 우리 농업이 소농구조에서 저생산성과 저소득 등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농업과 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음.
- 결국 건설한 가족농의 육성과 경영승계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지원강화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 ▶ 건설한 가족농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 확대를 통한 협동화 추진
 -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확충
 - ▶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 사업에의 참여 확대

5. 사회·경제·정치 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 사회적 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중심적 관념과 관행을 전통적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에 대한 불평등이 타 부문에 비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생산 및 노동활동은 사회적 주체로서 범주화되기보다는 농촌 가정 주부의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어 왔음.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은 사회적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보다는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인식됨. 여성농업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경제·사회적 지위는 과중한 노동과 함께 영농의욕을 떨어뜨리며, 결혼생활에서 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노정함.
-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향후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농촌사회의 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은 가시화 되지 않고 있음. 이는 여성농업인을 농업의 주된 노동력과 경영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불평등 의식에 기인함.
- 따라서 농촌의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경주되어야 할 것임.

□ 경제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량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1990년대 이후 여성인구의 확고한 우위에서 보듯 향후 농업생산의 주류로까지 부상하고 있음.
 - ▶ 성별로 보면, 1990년 균형을 이루었던 농가 성별인구는 1998년 현재 남자 48.4%, 여자 51.6%의 분포를 보임.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청장년층이 대거 도시로 이동한 결과 농촌지역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농업생산에 여성농업인이 적극 참여하게 됨.
 - ▶ 같은 기간중 50세 이상의 노령층 농가 여성인구의 비율은 16.7%에서 50.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특히 같은 기간중 20~49세의 연령층이 230만7천명에서 68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차세대 농가인구의 재생산이 어려울 전망이다.
-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여성농업인의 농업에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경제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아직 충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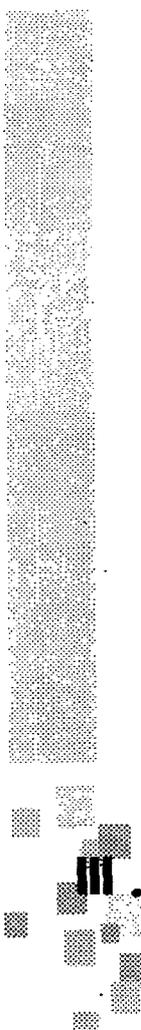
□ 정치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을 위한 각종 정책은 정치 역학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음. 그런 의미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조직을 통해, 혹은 개인이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곧 여성농업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를 진일보하게 만드는 관건임.
- 1948년 제헌국회에서 15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역구 및 전국구를 포함한 국회의원 후보자 수는 15,966명이며 이중 여성 후보는 258명(1.6%)임. 이들 여성 후보자 중 지역구에서 당선 여성의원은 단 19명(0.6%)이며, 전국구는 64명으로 여성의 정치진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줌.
- 더욱 여성농업인이 현재 정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전남에서 비례대표 1인이 광역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것이 유일함.
- 정치적 조직의 경우 국민의 정부의 여성인력 정책 참여기회 보장이지에 따라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된 분야와 형식적 참여에 그침. 도정이나 시·군의 각종 위원회에는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법인이나 농협에조차도 여성이사를 두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며, 여성농업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향후 정치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강화·확대되어야 함.
 - ▶ 농업은 지방화시대의 주산업이며,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주체임. 즉 농업과 여성농업인을 소외시키는 지방자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의미함.
 - ▶ 지방화시대와 지방농정의 주체인 여성농업인을 둘러싼 현실은 아직도 열악하며, 각 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실정임.
 - ▶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고 정치적 대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성농업인들은 제외되어 있음.
 - ▶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지역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생산활동과 생활의 주체임. 지역사회에서 주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의 회원으로 참여하여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를 움직여 가고 있음. 여성농업인의 정치적 활동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진취적인 조건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여성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인구적 잠재력과 농업경영 및 농촌사회에 대한 역량은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자각이 개인과 지자체, 중앙정부에 수용될 때 여성농업인의 주류화는 가시화될 것임.

6. 21세기 농업·농촌에 있어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

- 21세기는 국가경계의 퇴색,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화 사회의 도래,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물질적 풍요속에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대 등의 변화로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역할과 기능 모색이 필요함.
 - ▶ 농업과 농촌의 역할은 적정규모의 안정된 식량공급 기능, 공업화와 도시집중에 의한 국토환경의 황폐화를 방지하는 기능, 국토의 균형적 이용과 지역경제 및 전통문화 보전 기능,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기능, 도시과밀화에 의한 사회적 비용 억제기능 등 비교역적 공공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 ▶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경쟁력을 갖고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농업관에서 탈피하여 농업을 생산과 가공, 유통과 무역, 과학기술과 경영이 연계되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기술개발과 능력발휘가 가능한 개방된 농업정책 필요
- 이와 같은 변화속에서 21세기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참여·역할 증대
 - 지역발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 지역사회 정화를 위한 각종 여성단체참여
 - ▶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활동에서의 부각
 -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에 있어 주류화
 -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비중 증대
 - 여성농업인의 경제작물 생산 및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
 - ▶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및 정책참여에 대한 역할 증대
 - 농업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치적 참여 증대
 - 여성의 의회 참여
 -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여성농업인 참여
- 따라서 21세기 여성농업인은 사회적인 역할증대와 위상정립에 따라 농업의 생산량 증대,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및 농기계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등 우리농업과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여 백



Ⅲ.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1. 조사개요
2. 농촌 생활실태
3. 경제생활 실태
4. 농업노동 실태
5. 보건·복지·교육부문 실태 및 욕구
6. 지역활동·남녀평등에 대한 의견
7.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판단
8. 기타 부문
9.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부문별 시사점

여 백

Ⅲ.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 전국 대상 여성농업인의 의식·행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여성농업인 부문의 현황 인식제고와 21세기 농업·농촌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나. 표본선정

- 표본은 전국을 대상으로 층화추출방법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함.
- 1단계로 전국을 8도로 구분(광역시 및 제주도 제외)하여 분석대상을 선정함. 여성농업인에 대한 통계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전국 농가의 여성수(농가여성수)를 토대로 비율분포에 의해 분석대상을 선정.
- 2단계로는 각 도를 시·군으로 구분하여 농가여성 인원내 대한 현황자료를 통해 5,000가구 이상의 농가 및 10,000명 이상의 농가여성을 보유한 시·군을 우선적인 표본대상으로 하여 2,000명의 표본을 추출함.
- 8도 시·군별 표본수 선정 현황

구 분	시	군	계	농가여성수	표본수		
					시	군	계
경기도	21개시	10개군	31시·군	287,677명 (13.6%)	120	170	300 (15.0%)
강원도	7	11	18	135,914 (6.4%)	60	70	130 (6.5%)
충청북도	3	8	11	157,726 (7.4%)	20	130	150 (7.5%)
충청남도	6	9	15	295,095 (13.9%)	100	170	270 (13.5%)
전라북도	6	8	14	234,878 (11.1%)	70	150	220 (11.0%)
전라남도	6	18	24	357,845 (16.8%)	40	290	330 (16.5%)
경상북도	10	13	23	380,062 (17.9%)	240	110	350 (17.5%)
경상남도	10	10	20	273,740 (12.9%)	70	180	250 (12.5%)
계	69개시	87개군	156시·군	2,122,938명 (100.0%)	720	1,280	2,000 (100.0%)

주 : 농가여성인구는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수치임.(195,755명 제외)

다. 조사방법

1단계 : 농협 회원조합망 활용

- 1차적으로 전국 읍·면 단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농협의 회원조합망을 통해 조사함.
-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여성복지추진팀의 협조를 받아, 현지 회원조합의 여성복지담당자를 통해 해당 지역 여성농업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2단계 : 조사원들의 직접 조사

- 1단계를 통한 조사서의 회수가 미진할 것에 대비, 조사원들이 직접조사를 병행함.
- 조사원은 당 연구원과 협조관계에 있는 전국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을 통하여 확보하였으며, 직접 조사를 통한 설문매수는 500매임.

라. 설문설계 및 설문조사 수행일정

설문지 작성

- 설문지 1차 작성
 - ▶ 농림부의 본 과제 담당자와 타 과제 수행기관(KREI, 목포대학교)의 연구책임자 참석하에 설문지 내용을 제시하고 자문을 받음(6월11일)
- 1차 수정(6월 21일) / 2차 수정(7월 5일) / 3차 수정(7월 15일)
 - ▶ 농림부 검토 및 농림부의 추천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농협 조사부, 한국농업기술전문학교, 농촌생활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의 여성·여성농업인 관련 전문가의 자문 수렴.
- 7월19일 설문지 작성 완료
 - ▶ 7월 15일 ~ 7월 18일 3차 수정분 설문지에 의한 예비조사
 - ▶ 3차 수정분에 대한 예비조사, 농림부와 의 내용 검토 및 분량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설문지 작성을 완료.

설문조사 수행

- 예비조사 : 7. 15. ~ 7. 18.
- 본조사 수행 : 7. 22. ~ 8. 20.(1단계 / 2단계)
 - ▶ 1단계인 농협 회원조합을 통한 설문조사를 7월22일부터 수행
 - ▶ 2단계인 직접조사는 조사원 교육을 거쳐 8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실시함.
- 보완조사 : 8. 26. ~ 8. 28.

마. 설문지 분석방법

- 설문지 분석은 전 문항을 계량화하여 Coding하고 통계프로그램은 SPSS8.0을 이용하여 분석함.
- 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설문문항의 성격에 따라 FREQUENCIES, MEANS, ANOVA, CROSSTABS, MULTI RESPONSES 등을 적용함.

바. 분석결과 인용의 한계

- 본 조사는 여성농업인 부문에 대한 총론적 실태파악 관점에서 시행됨.
- 본 조사는 방법론상 주로 농협계통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응답자중 농가주부 모임 회원이 많다는 점에서 그 분석결과는 문항에 따라 표본특성에서 비롯되는 일부 오차나 편향이 있을 수 있음.

사. (회수설문지) 응답자 일반사항

□ 거주지역 특성별 분포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합 계		1,352	100.0
도별 분포	경기도	192	14.2
	강원도	85	6.3
	충청북도	105	7.8
	충청남도	168	12.4
	전라북도	145	10.7
	전라남도	187	13.8
	경상북도	311	23.0
	경상남도	159	11.8
시군별 분포	시소재지	574	42.5
	군소재지	778	57.5
거주지 특성별 분포	평야지역	374	27.7
	산간지역	404	29.9
	평야·산간 중간지역	526	38.9
	도시지역	48	3.6

□ 응답자 특성별 분류(1)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연령대	30세 미만	66	4.9
	30세 ~ 39세	325	24.0
	40세 ~ 49세	532	39.4
	50세 ~ 59세	235	17.4
	60세 이상	180	13.3
	무응답	14	1.0
학 력	국졸	361	26.7
	중졸	436	32.2
	고졸	389	28.8
	전문대졸	16	1.2
	대졸 이상	17	1.3
	기타	58	4.3
	무응답	75	5.5
혼인여부	미혼	34	2.5
	기혼(남편있음)	1,141	84.4
	기혼(남편없음)	146	10.8
	무응답	31	2.3
신 분	가家主 본인	204	15.1
	가家主의 아내	975	72.1
	가家主의 (시)어머니	19	1.4
	가家主의 며느리	106	7.8
	가家主의 딸	33	2.4
	무응답	15	1.1
농촌 거주기간	3년 미만	24	1.8
	3년이상 ~ 5년미만	29	2.1
	5년이상 ~ 10년미만	94	7.0
	10년이상 ~ 20년미만	384	28.4
	20년이상 ~ 30년미만	301	22.3
	30년 이상	503	37.2
	무응답	17	1.2

주 : 「신분」란중 '가家主 본인'이라 함은 응답자인 여성농업인 자신이 가家主인 경우임.

□ 응답자 특성별 분류(2)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영농경력 (15세이후)	3년 미만	83	6.1
	3년이상 ~ 5년미만	50	3.7
	5년이상 ~ 10년미만	178	13.2
	10년이상 ~ 20년미만	408	30.2
	20년이상 ~ 30년미만	279	20.6
	30년 이상	329	24.3
	무응답	25	1.8
주 작목별 분포	쌀	718	53.1
	쌀외의 곡류	43	3.2
	콩류 및 서류	24	1.8
	채소	95	7.0
	과수	168	12.4
	화훼	21	1.6
	특용	44	3.3
	한우	34	2.5
	젓소(낙농)	27	2.0
	양돈	25	1.8
	기타	78	5.8
	무응답	75	5.5
	평균 가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가족수 : 5.0명 → 남자 : 2.5명 / 여자 : 2.5명 ▶ 같이 사는 가족 : 4.0명 ▶ 외지에 있는 가족:1.0명 	
평균 혼인연령	● 23.1세		

2. 농촌 생활실태

가. 농촌거주 이유

- 전체적으로 '결혼한 남편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하게 된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61.9%에 달하며, '부모님이 농사를 짓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그 다음으로 많은 14.4%를 차지함. 결국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이 결혼 이전이나 이후에 집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부모님이 농사짓기 때문	남편이 농사짓기 때문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도시생활이 어려워서	농촌생활이 좋아서	기 타	계
사례수(명)	189	814	133	33	122	23	1,314
백분율(%)	14.4	61.9	10.1	2.5	9.3	1.8	100.0

-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령이 많거나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한 남편이 농사를 짓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은 반면 연령대가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농촌생활이 좋아서' 농촌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 결과로 보면 옛날 농촌 여성들은 농촌에서 태어나면 농사꾼에게 시집가는 비율이 높았던 데 반해 학력이 높고, 젊은 여성일 수록 농촌 총각에게 시집가는 경향이 낮고 농촌에 살더라도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음.
- 혼인여부별, 신분별로는 연령층이 높은 기혼(남편없음)자, 가구주의 (시)어머니의 경우 남편 때문에 농촌에 거주한 이유가 가장 많고, 연령층이 낮다고 볼 수 있는 미혼자, 가구주의 딸등의 경우 집에서 농사짓기 때문에 거주하는 이유가 가장 많음. 농촌거주기간별, 영농경력별로는 연령별 실태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나타냄.
- 거주지역별로는 산간지역이 부모님 또는 남편 때문에 거주한 경우가 가장 많고, 농촌이 좋아서 거주하는 비율은 도시지역, 중간지역, 평야지역, 산간지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결혼을 이유로 농촌에 거주하게 된 경우가 다른 지역의 절반수준인 34%에 불과, 집안이나 결혼때문이 아닌 자발적인 이유로 농촌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시·군별로는 각 거주이유별 비율분포에 뚜렷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음.

▶ 응답자 특성별 실태(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분		부모님 때문	남편때문	토지이용	도시생활 어려움	농촌이 좋아서	기타	비고
연령별	30세 미만	50.0	20.3	4.7	6.3	14.1	4.7	응답자수 =1,300 Sig.=0.00
	30~39세	14.6	58.9	7.6	2.2	15.5	1.3	
	40~49세	13.2	59.4	11.7	3.6	10.3	1.7	
	50~59세	11.5	71.7	11.5	0.9	2.2	2.2	
	60세 이상	8.7	78.5	9.9	0.6	1.2	1.2	
학력별	국졸	8.6	76.6	7.1	2.0	4.6	1.1	응답자수 =1,240 Sig.=0.00
	중졸	14.5	61.5	12.8	2.1	7.8	1.2	
	고졸	18.9	49.9	10.0	3.9	14.7	2.6	
	전문대졸	37.5	12.5	25.0	12.5	12.5	-	
	대졸이상	35.3	29.4	-	-	29.4	5.9	
	기타	7.3	74.5	9.1	-	7.3	1.8	
혼여부별	미혼	81.8	-	6.1	-	9.1	3.0	응답자수 =1,283 Sig.=0.00
	기혼(남편 유)	13.5	61.0	10.3	3.0	10.5	1.8	
	기혼(남편 무)	7.4	80.1	10.3	-	0.7	1.5	
응답자 신분별	가구주 본인	8.8	68.4	13.5	2.6	5.7	1.0	응답자수 =1,299 Sig.=0.00
	가구주 아내	13.5	63.6	9.9	2.3	8.9	1.8	
	가구주 어머니	17.6	76.5	-	-	5.9	-	
	가구주 며느리	12.6	53.4	6.8	4.9	20.4	1.9	
	가구주 딸	81.3	-	6.3	-	6.3	6.3	
농촌거주 기간별	5년 미만	9.4	32.1	13.2	13.2	24.5	7.5	응답자수 =1,311 Sig.=0.00
	5년~10년	19.6	54.3	8.7	5.4	10.9	1.1	
	10년~20년	13.0	60.2	10.6	3.4	11.7	1.1	
	20년~30년	17.7	60.1	13.7	0.7	6.5	1.4	
	30년 이상	13.1	68.8	7.7	1.2	7.3	2.0	
영농 경력별	5년 미만	37.1	26.5	9.8	6.1	13.6	6.8	응답자수 =1,303 Sig.=0.00
	5년~10년	14.5	51.4	13.3	4.0	15.6	1.2	
	10년~20년	11.6	63.6	9.8	2.8	11.1	1.3	
	20년~30년	11.9	66.1	11.6	0.7	8.3	1.4	
	30년 이상	10.5	77.4	7.4	0.9	2.8	0.9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15.1	62.2	9.0	3.3	9.0	1.4	응답자수 =1,314 Sig.=0.00
	산간지역	13.7	64.2	11.2	0.8	7.6	2.5	
	중간지역	13.8	62.6	9.3	3.3	10.0	1.0	
	도시지역	21.3	34.0	19.1	2.1	17.0	6.4	
시군별	시소재지	13.8	62.1	9.3	3.8	8.6	2.5	응답자수 =1,314 Sig.=0.06
	군소재지	14.8	61.9	10.7	1.6	9.8	1.2	

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 만족수준

- 전반적으로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이 보통수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음. 뚜렷한 만족 또는 불만족의 의견 제시가 없고, '비교적 만족'하거나, '약간 불만족'이거나, 아니면 '보통'이라는 중립적 입장에서 농촌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매우 만족 (Value=5)	비교적 만족 (Value=4)	보 통 (Value=3)	약간 불만족 (Value=2)	매우 불만족 (Value=1)	계	평 균 값
사례수(명)	82	331	475	360	75	1,323	3.01
백분율(%)	6.2	25.0	35.9	27.2	5.7	100.0	

-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층보다 다소 낮고, 학력별로는 '국졸'인 여성농업인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문대졸' 여성농업인들의 만족도는 학력별 집단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여부별로는 미혼자의 만족도가 두드러지게 낮고, 기혼자는 남편유무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임. 응답자신분별로 볼 때 가구주의 딸인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음. 미혼자나 가구주의 딸은 다른 계층보다 나이가 어리므로 이같은 현상은 연령별 특징에서 연령대가 가장 낮은 층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임과 동시에 젊은 연령층의 이농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농촌거주기간별, 영농경력별 만족도는 '5년미만'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님.
- 거주지 특성별로는 '산간지역' 거주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반면, '도시지역' 거주자의 만족도는 반대로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도시지역 거주자의 만족수준은 여타 특성별 전계층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임.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앞의 농촌거주 이유에서 '농촌생활이 좋아서' 거주하는 자발적인 거주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이 만족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시·군별 만족도의 차이는 시거주자의 만족수준이 약간 높으나 만족수준별 분포를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음.

▶ 응답자 특성별 실태(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매 우 만 족	비교적 만 족	보 통	약 간 불만족	매 우 불만족	평균값	비 고
연 령 별	30세 미만	1.5	24.6	44.6	20.0	9.2	2.89	응답자수 =1,309 Sig.=0.06
	30~39세	6.9	31.3	31.3	25.1	5.3	3.09	
	40~49세	5.9	27.3	35.6	23.7	7.6	3.00	
	50~59세	5.4	26.5	33.2	29.6	5.4	2.97	
	60세 이상	4.6	19.5	46.6	25.3	4.0	2.95	
학 령 별	국 졸	2.3	22.8	40.7	28.5	5.7	2.87	응답자수 =1,254 Sig.=0.02
	중 졸	7.6	29.6	34.4	22.9	5.5	3.11	
	고 졸	6.5	29.8	31.6	25.6	6.5	3.04	
	전문대졸	-	43.8	37.5	18.8	-	3.25	
	대졸이상	5.9	23.5	41.2	23.5	5.9	3.00	
	기 타	3.7	16.7	50.0	18.5	11.1	2.83	
혼 여 부 인 별	미 혼	-	15.2	57.6	12.1	15.2	2.73	응답자수 =1,295 Sig.=0.01
	기혼(남편 유)	5.9	27.7	34.9	25.3	6.2	3.02	
	기혼(남편 무)	5.7	23.4	44.0	24.1	2.8	3.05	
응 답 자 신 분 별	가구주 본인	4.5	23.6	43.7	24.1	4.0	3.01	응답자수 =1,308 Sig.=0.00
	가구주 아내	6.2	28.9	32.7	25.9	6.3	3.03	
	가구주 어머니	10.5	26.3	31.6	31.6	-	3.16	
	가구주 며느리	2.8	27.4	39.6	21.7	8.5	2.94	
	가구주 딸	-	6.3	65.6	12.5	15.6	2.63	
농촌거주 기 간 별	5년 미만	5.7	37.7	34.0	17.0	5.7	3.21	응답자수 =1,319 Sig.=0.36
	5년~10년	7.4	27.7	37.2	25.5	2.1	3.13	
	10년~20년	5.0	25.3	35.6	25.6	8.4	2.93	
	20년~30년	5.7	29.6	37.4	20.5	6.7	3.07	
	30년 이상	5.4	26.0	35.3	28.2	5.0	2.99	
영 경 령 농 별	5년 미만	4.5	28.6	40.6	22.6	3.8	3.08	응답자수 =1,312 Sig.=0.47
	5년~10년	5.6	29.8	33.7	25.8	5.1	3.05	
	10년~20년	6.9	26.8	35.0	23.1	8.2	3.01	
	20년~30년	4.4	25.6	37.4	24.9	7.7	2.94	
	30년 이상	5.2	26.8	35.7	28.6	3.7	3.01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9.5	31.4	32.5	21.1	5.4	3.18	응답자수 =1,323 Sig.=0.00
	산간지역	3.0	20.8	37.5	28.1	10.6	2.77	
	중간지역	4.7	28.1	36.9	26.4	3.9	3.03	
	도시지역	8.5	38.3	38.3	14.9	-	3.40	
시 군 별	시소재지	6.3	27.2	36.5	24.2	5.9	3.04	응답자수 =1,323 Sig.=0.89
	군소재지	5.2	27.2	35.5	25.7	6.4	2.99	

□ 농촌생활 불만족 이유

- 전체 집단의 농촌생활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소득이 낮다는 것이 가장 많은 비중(42.9%)을 차지함. 이를 제외하면 농사일이 힘든 것(20.6%), 자녀교육여건 취약(17.9%)을 불만족 이유로 들고 있음. 농촌의 소득이 낮고 농사일이 힘들다는 사회적 통념상의 이유를 제외하면 여성농업인들의 관심사는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문화생활 부족(7.1%)에 상대적으로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소득이 낮음	자녀교육 여건취약	인체 유해환경	농사일 어려움	문화생활 부족	가사시간 부족	기 타	계
사례수(명)	344	143	34	165	57	48	10	801
백분율(%)	42.9	17.9	4.2	20.6	7.1	6.0	1.2	100.0

주 : 농촌생활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 응답자 특성별 실태를 보면, '소득이 낮다'는 것이 역시 가장 큰 불만족 이유이나 그 중에서도 50대 연령층과 대졸이상의 학력 집단, 농촌거주기간과 영농경력이 오래된 계층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큼. '농사일이 힘들다'는 항목은 나이가 많고 학력 수준이 낮은 층일수록 그 비중이 높음. '소득이 낮다'는 이유를 제외하면 30대와 고졸 집단에서 '자녀교육여건'을, 30세미만에서는 '문화생활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함
- 응답자 신분별로는 연령층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가구주의 딸'의 경우 '소득이 낮다'는 이유 다음으로 '문화생활 부족'을 불만족 이유로 꼽았으며, 가구주의 아내와 가구주의 며느리는 '소득이 낮다'는 이유 다음으로 '농사일이 힘든 것' 과 '취약한 자녀교육여건'을 공히 제2의 불만족 이유로 들고 있음.
- 거주지 특성으로 볼 때, '소득이 낮다'는 이유가 역시 불만족 1순위이며 평야지역에서는 '자녀교육여건 취약'을 2순위로, 도시지역에서는 '가사시간 부족'을 제2의 불만족이유로 선택한 것이 특징임. 시·군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아 볼 수 없는 가운데 불만족 순위에 있어 전체 응답빈도의 결과와 대동소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III.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응답자 특성별 실태(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소득 낮음	자녀교 육여건	유해 환경	농사일 어려움	문화생 활부족	가사시 간부족	기 타	비 고
연 령 별	30세 미만	38.7	19.4	-	12.9	22.6	6.5	-	응답자수 =789 Sig.=0.00
	30~39세	37.3	25.5	3.4	11.3	10.3	10.3	2.0	
	40~49세	40.0	21.5	5.1	20.6	5.7	6.3	0.9	
	50~59세	57.0	4.7	4.7	25.8	4.7	1.6	1.6	
	60세 이상	49.5	4.4	4.4	37.4	2.2	2.2	-	
학 력 별	국 졸	48.7	5.2	6.8	33.0	1.6	3.1	1.6	응답자수 =750 Sig.=0.00
	중 졸	45.5	20.0	3.6	17.8	5.1	6.9	1.1	
	고 졸	33.8	29.4	2.2	12.1	13.4	7.8	1.3	
	전문대졸	40.0	20.0	-	20.0	-	20.0	-	
	대졸이상	62.5	25.0	-	-	12.5	-	-	
	기 타	55.0	-	-	30.0	10.0	2	-	
혼 인 여 부 별	미 혼	33.3	13.3	-	20.0	26.7	6.7	-	응답자수 =779 Sig.=0.01
	기혼(남편 유)	41.9	19.0	4.1	20.4	7.1	6.5	1.0	
	기혼(남편 무)	56.8	8.1	8.1	20.3	4.1	-	2.7	
응 답 자 신 분 별	가구주 본인	55.0	7.5	9.2	20.0	3.3	5.0	-	응답자수 =791 Sig.=0.00
	가구주 아내	41.2	20.6	4.0	20.6	6.8	5.8	1.0	
	가구주 어머니	41.7	-	-	41.7	16.7	-	-	
	가구주 며느리	38.4	19.2	-	19.2	6.8	11.0	5.5	
	가구주 딸	38.5	15.4	-	15.4	30.8	-	-	
농촌거주 기 간 별	5년 미만	34.4	37.5	6.3	12.5	3.1	6.3	-	응답자수 =799 Sig.=0.00
	5년~10년	35.3	35.3	7.8	7.8	7.8	5.9	-	
	10년~20년	40.9	18.9	1.9	17.4	10.0	9.3	1.5	
	20년~30년	40.0	16.0	4.0	24.0	8.6	5.1	2.3	
	30년 이상	48.6	12.8	5.7	24.8	3.9	3.5	0.7	
영 농 경 력 별	5년 미만	29.4	35.3	2.9	7.4	19.1	2.9	2.9	응답자수 =793 Sig.=0.00
	5년~10년	33.6	33.6	2.8	11.2	7.5	8.4	2.8	
	10년~20년	37.5	18.8	2.7	19.9	9.0	10.9	1.2	
	20년~30년	47.5	13.7	5.5	24.0	5.5	3.8	-	
	30년 이상	55.9	5.6	6.1	29.1	1.1	1.1	1.1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45.4	17.6	3.5	17.2	5.3	10.1	0.9	응답자수 =801 Sig.=0.00
	산간지역	43.0	20.7	2.3	22.7	6.3	3.9	1.2	
	중간지역	41.0	15.6	6.8	22.4	9.2	3.4	1.7	
	도시지역	43.5	17.4	-	8.7	8.7	21.7	-	
시 군 별	시소재지	43.8	19.1	3.9	19.1	6.7	6.5	0.8	응답자수 =801 Sig.=0.84
	군소재지	42.2	16.9	4.5	21.8	7.4	5.6	1.6	

다. 여성농업인의 정체성

□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인식

-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 알아본 결과 농사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농업인(적극적인 농업인)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으며(48.9%), 남편 일을 돕는 보조적 농업인이라는 인식이 그 다음을 차지함.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농촌 취업여성	적극적인 농업인	보조적인 농업인	전문 농업경영인	기 타	계
사례수(명)	101	646	491	73	10	1,321
백분율(%)	7.6	48.9	37.1	5.5	0.8	100.0

- 응답자 특성별 실태를 볼 때 연령이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적극적인 농업인이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학력이 높고 연령이 적을수록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30세 미만 집단은 56.3%가 자신을 보조적인 농업인이라고 응답함. 다만 대졸이상자의 경우 적극적인 농업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17.6%에 불과하며 도시 취업여성과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일하는 취업여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29.4%로 여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미혼의 경우 1,321명중 34명이 응답했는데 이중 19명(54.5%)이 ‘보조적인 영농인’이라고 응답했으며, ‘적극적인 영농인’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은 층은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남편없는 기혼자가 이에 해당함. 응답자 신분별로도 집안에서 연령층이 높거나 책임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어머니가 적극적인 농업인이라는 의식이 강하며, 가구주의 며느리나 가구주의 딸은 과반수 이상이 보조적인 농업인이라고 응답함.
- 농촌거주기간별, 영농경력별 특성은 연령별 실태와 비슷한 결과를 보임. 즉 농촌거주기간이 길고 영농경력이 오래 될수록 적극적인 농업인이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보조적인 농업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거주지 특성별로는 도시지역만이 타 거주지의 실태와 다른데, 타 거주지가 적극적인 농업인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은 반면 도시지역은 자신을 보조적인 농업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적극적 농업인이라는 인식은 그 다음 순위임.

III.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응답자 특성별 실태(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농촌 취업여성	적극적 농업인	보조적 농업인	전문 농업 경영인	기 타	비 고
연 령 별	30세 미만	9.4	31.3	56.3	1.5	1.5	응답자수 =1,307 Sig.=0.00
	30~39세	6.9	46.4	41.1	5.3	0.3	
	40~49세	8.0	48.7	35.7	7.1	0.5	
	50~59세	6.7	52.4	35.1	5.8	-	
	60세 이상	8.0	55.2	30.5	2.9	3.4	
학 력 별	국 졸	4.6	56.4	33.0	4.6	1.4	응답자수 =1,251 Sig.=0.00
	중 졸	4.6	53.9	34.0	7.4	-	
	고 졸	10.3	40.0	45.3	3.7	0.8	
	전문대졸	-	31.3	56.3	12.5	-	
	대졸이상	29.4	17.6	35.3	11.8	5.9	
	기 타	22.8	45.6	29.8	-	1.8	
혼 인 여 부 별	미 혼	12.1	30.3	54.5	-	3.0	응답자수 =1,290 Sig.=0.00
	기혼(남편 유)	7.6	48.5	38.6	5.0	0.3	
	기혼(남편 무)	6.5	56.8	21.6	11.5	3.6	
응 답 자 신 분 별	가구주 본인	7.5	53.0	27.0	9.5	3.0	응답자수 =1,306 Sig.=0.00
	가구주 아내	7.9	50.5	36.8	4.6	0.3	
	가구주 어머니	5.3	57.9	26.3	10.5	-	
	가구주 며느리	4.0	36.6	52.5	6.9	-	
	가구주 딸	12.5	25.0	59.4	-	3.1	
농촌거주 기 간 별	5년 미만	7.8	29.4	56.9	5.9	-	응답자수 =1,317 Sig.=0.00
	5년~10년	5.3	41.5	51.1	1.1	1.1	
	10년~20년	9.7	49.9	34.9	5.0	0.5	
	20년~30년	7.1	49.5	35.7	7.4	0.3	
	30년 이상	6.9	51.2	35.0	5.7	1.2	
영 령 경 력 별	5년 미만	8.0	31.2	55.2	2.4	3.2	응답자수 =1,309 Sig.=0.00
	5년~10년	7.9	37.1	51.7	3.4	-	
	10년~20년	8.9	53.4	31.3	6.4	-	
	20년~30년	5.4	52.0	34.7	7.9	-	
	30년 이상	8.0	54.8	30.7	4.6	1.9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6.2	52.6	37.7	2.7	0.8	응답자수 =1,321 Sig.=0.10
	산간지역	9.3	47.5	35.6	6.6	1.0	
	중간지역	7.5	48.9	36.9	6.3	0.4	
	도시지역	6.4	31.9	48.9	10.6	2.1	
시 군 별	시소재지	10.3	45.3	38.7	5.0	0.7	응답자수 =1,321 Sig.=0.02
	군소재지	5.7	51.6	36.0	5.9	0.8	

□ 앞으로 희망하는 자신의 역할

- 응답자 전체의 비율을 보면 '주부 겸 보조영농인'을 원하는 비율이 50.4%로 가장 많고 전업주부로 남기를 원하는 여성이 20.3%로 그 다음을 차지함. 전체적으로 농사일을 계속 원하는 비율(주부겸 보조영농인 + 전문 농업인)이 61.8%이며, 나머지인 38.2%의 응답자가 현재의 영농인 역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음.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전업주부	주부 겸 보조영농인	전문 농업인	따로 직장가진 여성	농사외에 따로 사업하는 자영업자	기 타	계
사례수(명)	264	671	150	77	146	11	1,319
백분율(%)	20.0	50.9	11.4	5.8	11.1	0.8	100.0

- 연령별로는 60세이상자의 경우 대부분 주부 겸 보조영농인(54.1%) 또는 전업주부(33.1%)로 남기를 원하는 반면, 30세미만 집단은 직장여성(29.0%)이나 농사외에 따로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25.8%)를 원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대졸이상' 집단이 타 학력집단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임. 전업주부로 남겠다는 비율이 두 집단 공히 7%대로 타 학력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반면 자영업자(전문대졸 집단, 38.5%)나 직장여성(대졸이상 집단, 28.6%)을 원하는 비율은 타 학력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음.
- 혼인여부별로 보면 기혼자는 남편유무에 관계없이 보조영농인을 원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미혼자의 경우 직장여성, 전업주부, 자영업자를 원하는 비율이 타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아 농업인으로 남겠다는 비율(보조영농인 + 전문농업인)이 합해서 27.3%이며, 72.7%가 농업인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 신분별로는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 아내의 경우 보조영농인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가구주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를 원하는 경향이 가장 강함. 가구주의 딸은 미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장여성, 전업주부, 자영업자를 원하는 비율이 농업인으로 남겠다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농촌거주기간별, 영농경력별 실태는 전체 응답자의 분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냄. 즉, 보조영농인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업주부를 선호함. 거주지 특성별 및 시군별 실태도 전체 응답자의 분포와 대동소이하며, 통계적으로도 계층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실태(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전업주부	보조 영농인	전문 농업인	직장여성	자영업자	기 타	비 고
연 령 별	30세 미만	12.5	23.1	4.6	27.7	23.1	-	응답자수 =1,307 Sig.=0.00
	30~39세	15.0	48.1	16.6	6.3	13.8	0.3	
	40~49세	19.6	51.4	12.0	5.1	11.8	-	
	50~59세	16.7	59.5	9.5	4.5	9.0	0.9	
	60세 이상	33.1	53.7	4.6	1.1	2.9	4.6	
학 령 별	국 졸	24.3	56.9	6.9	4.6	6.3	1.1	응답자수 =1,250 Sig.=0.00
	중 졸	17.7	51.7	14.5	3.5	11.9	0.7	
	고 졸	18.5	44.0	12.0	9.4	16.1	-	
	전문대졸	14.3	28.6	21.4	7.1	28.6	-	
	대졸이상	5.9	47.1	23.5	23.5	-	-	
	기 타	28.6	55.4	3.6	3.6	5.4	3.6	
혼 인 여 부 별	미 혼	24.2	21.2	6.1	30.3	18.2	-	응답자수 =1,289 Sig.=0.00
	기혼(남편 유)	19.4	52.5	11.1	5.6	10.9	0.4	
	기혼(남편 무)	23.6	45.7	15.7	2.1	9.3	3.6	
응 답 자 신 분 별	가구주 본인	24.1	52.3	11.3	3.1	6.2	3.1	응답자수 =1,305 Sig.=0.00
	가구주 아내	18.2	53.1	11.4	5.2	11.5	0.5	
	가구주 어머니	42.1	31.6	15.8	-	10.5	-	
	가구주 며느리	21.7	42.5	13.2	9.4	13.2	-	
	가구주 딸	21.9	15.6	3.1	34.4	25.0	-	
농촌거주 기 간 별	5년 미만	27.5	47.1	7.8	11.8	5.9	-	응답자수 =1,314 Sig.=0.06
	5년~10년	17.2	46.2	12.9	8.6	15.1	-	
	10년~20년	18.4	50.7	11.7	6.4	12.5	0.3	
	20년~30년	19.5	51.7	11.1	4.7	13.1	-	
	30년 이상	21.3	52.1	11.1	4.8	8.7	2.0	
영 경 령 농 령 별	5년 미만	20.0	42.3	5.4	16.2	16.2	-	응답자수 =1,306 Sig.=0.00
	5년~10년	18.2	47.2	11.9	8.0	14.8	-	
	10년~20년	19.0	51.4	13.0	4.7	11.7	0.2	
	20년~30년	16.3	50.7	14.5	5.1	13.4	-	
	30년 이상	25.4	57.3	7.4	2.2	4.6	3.1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18.4	53.7	11.7	5.4	9.8	1.1	응답자수 =1,319 Sig.=0.76
	산간지역	22.9	46.6	11.1	5.7	12.4	1.3	
	중간지역	18.6	52.8	11.3	6.0	10.9	0.4	
	도시지역	23.4	42.6	12.8	8.5	12.8	-	
시 군 별	시소재지	19.8	49.7	11.4	6.1	11.8	1.2	응답자수 =1,319 Sig.=0.73
	군소재지	20.2	51.7	11.3	5.7	10.6	0.5	

라. 가사노동 실태

□ 평균 가사노동시간

- 여성농업인들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농번기 4.90시간, 농한기 5.07시간으로 농번기보다 농한기 가사노동시간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이를 응답자의 신분별로 보면 농번기에는 가구주의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반면, 농한기에는 가구주 며느리들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농번기와 농한기 구분없이 하루에 5.4시간정도의 가사노동을 하는 며느리들의 경우 연중 구분없이 가사노동 부담이 큰 계층에 속함.

▶ 평균 가사노동시간(전체/ 응답자 신분별)

구 분	전체 평균	응답자 신분별 평균				
		가구주 본인	가구주의 아내	가구주의 (시)어머니	가구주의 며느리	가구주의 딸
농번기	4.90	4.66	4.87	6.28	5.46	3.93
농한기	5.07	4.57	5.18	4.00	5.41	3.78

- 거주지 특성별로 비교해 볼 때 농번기에는 중간지역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산간지역이 가장 짧은 반면, 농한기에는 산간지역이 가장 길고 도시지역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시군별로는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군소재지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노동시간이 시소재지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음.

▶ 평균 가사노동시간(거주지 특성별/ 시군별)

구 분	거주지 특성별 평균				시군별	
	평야지역	산간지역	중간지역	도시지역	시소재지	군소재지
농번기	4.68	4.69	5.22	4.86	4.87	4.93
농한기	4.98	5.17	5.07	4.82	5.02	5.10

□ 가사노동 분담형태

-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형태는 농번기의 경우 여성농업인 자신이 약 60%, 나머지 40%를 다른 식구들이 분담하는 형태이며, 농한기의 경우 본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65%로 높아지고 있음. 본 실태조사의 대상자중 남편이 있는 가구주의 아내가 약 86%를 차지하는데, 조사결과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일년 내내 거의 없는 실정임.

▶ 가사노동 분담비율(%)

	(시)부모	남편	자녀	(시)누이	본인	기타
농번기	10	5	23	0	60	2
농한기	7	4	22	0	65	2

※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비교

- 한국 전체 여성의 가사노동 평균시간은 1994년기준으로 3시간15분(3.25시간)이며, 가정주부의 경우 5시간21분(약 5.3시간) 취업여성은 1시간50분(약 1.8시간)으로 조사된 바 있음. 국제적으로 북유럽국을 제외하고는 가사노동시간이 짧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한국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시간은 농번기 4.90시간(4시간54분)/ 농한기 5.07시간(5시간4분)으로 조사된 바, 여성전체 평균에 비해 2시간 가량 길며 취업여성이 아닌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주요 국가별 여성의 1일 가사 노동시간 비교, 1994>

(단위 : 시, 분)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핀란드	덴마크	구미평균	한국	
여성전체	4:41	4:09	4:18	4:31	3:37	3:11	4:07	3:15	여성농업인
가정주부	7:23	6:08	6:08	6:11	5:15	4:36	5:40	5:21	농번기: 4:54
취업여성	3:29	2:54	3:25	3:36	3:24	-	3:20	1:50	농한기: 5:04

주 :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시간은 본 실태조사 결과이며, 시·분 단위로 환산한 것임.

자료 :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999. 7

마. 주거환경 실태

□ 주거시설 현황

● 가옥형태

- ▶ 전체적으로 양옥(슬라브집)이 36.6%로 가장 많고, 한옥 기와집 29.7%, 합석·스레트집 27.0%의 순임. 이 세 가지 가옥형태가 전체의 93.3%를 차지함
- ▶ 거주지 특성별로 보아도 상위 3개 가옥형태의 순위는 전체응답자의 경우와 똑같으나 한옥은 산간지역이 가장 많고 합석·스레트집은 평야와 산간의 중간지역에 많으며 양옥은 도시지역에서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함. 시군별 가옥형태 분포는 전체 분포와 동일한 순위로 분포되고 있으며, 가옥형태별 두 집단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가옥형태별 분포(%)

구 분	전 체	거주지 특성별				시·군별	
		평야지역	산간지역	중간지역	도시지역	시소재지	군소재지
한옥 기와집	29.7	29.4	31.3	30.0	13.6	31.1	28.7
합석·스레트집	27.0	26.7	29.6	26.2	15.9	26.9	27.1
양옥(슬라브집)	36.6	35.4	33.6	38.2	54.5	36.1	36.9
아파트	1.4	1.6	0.3	1.6	9.1	1.8	1.2
연립주택	2.8	3.8	2.3	2.1	6.8	2.3	3.1
기타	2.5	3.0	3.0	1.9	-	1.8	3.0

● 상수도

- ▶ 전체적으로는 자가수도 비율이 약간 높음. 평야지역이 산간지역보다 오히려 자가수도 비율이 높고 중간지역의 상수도비율이 가장 낮음. 시지역의 경우 상수도와 자가수도 비율이 비슷하나, 군소재지는 자가수도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
- ▶ 식수 시설 분포(%)

구 분	전 체	거주지 특성별				시·군별	
		평야지역	산간지역	중간지역	도시지역	시소재지	군소재지
상 수 도	43.6	40.5	47.1	41.0	67.4	47.1	41.0
자가수도	50.1	54.3	48.1	50.1	32.6	47.3	52.1
우물이나 샘	3.8	2.4	2.8	5.8	-	3.4	4.0
기 타	2.6	2.7	2.0	3.1	-	2.2	2.9

● 하수시설

- ▶ 집밖에 하수관과 연결된 경우가 71.5%이며, 하수관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28.6%에 달함. 특히 산간지역의 하수시설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 하수시설 현황(%)

구 분	전 체	거주지 특성별				시·군별	
		평야지역	산간지역	중간지역	도시지역	시소재지	군소재지
있 음	71.5	72.9	66.9	73.3	79.1	72.6	70.6
없 음	28.5	27.1	33.1	26.7	20.9	27.4	29.4

- ▶ 단, 상기 결과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비된 경우의 완전한 하수시설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전국적인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 ▶ (참고) 전국 하수도 보급률 현황(1997년)

지역명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보급률(%)	60.9	69.9	37.6	55.7	19.7	34.3	3.9	19.1	20.7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998

● 목욕시설

- ▶ 목욕시설은 전체적으로 90%이상 갖추고 있으며, 산간지역의 경우 동비율이 가장 낮은 86.3%이며 시지역보다 군지역이 목욕시설을 더 많이 갖춘 것으로 조사됨.
- ▶ 목욕시설 현황(%)

구 분	전 체	거주지 특성별				시·군별	
		평야지역	산간지역	중간지역	도시지역	시소재지	군소재지
있 음	91.1	91.9	86.3	94.1	93.5	87.9	93.4
없 음	8.9	8.1	13.7	5.9	6.5	12.1	6.6

● 취사연료

- ▶ 취사연료는 전체 응답자중 73.4%가 가스를 사용하며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23.4%임. 산간지역의 가스사용 비율이 가장 낮고 시군별로는 비슷한 분포임.
- ▶ 취사연료 종류별 분포(%)

구 분	전 체	거주지 특성별				시·군별	
		평야지역	산간지역	중간지역	도시지역	시소재지	군소재지
연 탄	0.8	0.3	0.8	1.2	2.2	1.1	0.7
장 작	1.4	1.4	1.8	1.2	-	1.1	1.6
기 름	23.4	25.5	29.4	18.3	13.0	24.0	23.0
가 스	73.4	71.7	66.0	79.2	84.8	73.2	73.6
전 기	1.0	1.1	2.0	0.2	-	0.7	1.2

● 부엌시설

- ▶ 부엌시설은 전체 응답자중 94%가 현대식(입식)이라고 응답, 거주지역별로도 공히 90%이상 현대식의 부엌시설을 가진 것으로 조사됨.
- ▶ 부엌시설 현황(%)

구 분	전 체	거주지 특성별				시·군별	
		평야지역	산간지역	중간지역	도시지역	시소재지	군소재지
채 래 식	6.0	6.0	7.6	5.3	4.3	7.7	5.0
현 대 식(입식)	94.0	94.0	92.4	94.7	95.7	92.3	95.0

● 난방연료

- ▶ 난방연료는 전체 응답자중 약 88%가 기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비싼 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비경제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음.
- ▶ 난방연료 종류별 분포(%)

구 분	전 체	거주지 특성별				시·군별	
		평야지역	산간지역	중간지역	도시지역	시소재지	군소재지
연 탄	2.2	1.4	2.3	2.7	2.2	3.1	1.6
장 작	3.1	2.2	4.6	2.7	-	3.4	2.8
기 름	88.0	88.3	88.5	88.0	80.0	85.9	89.4
가 스	4.6	6.5	2.8	3.9	13.3	4.5	4.8
전 기	2.1	1.6	1.8	2.5	4.4	3.1	1.4

□ 생활용품·시설에 대한 수요

-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컴퓨터, 오디오, 자가용, 전자렌지의 순으로 응답함. 상위 5개 품목외에는 휴대폰(337건), 상수도시설(257건), 신문(232건) 등의 순이며 나머지 항목을 희망하는 응답수는 소수에 불과함.
- 또한 상위 5개 품목에 대한 희망순위는 응답자 특성별로 보아도 큰 차이없는 결과로 나타남.
-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품·시설(선호도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응답자 전체 (빈도수)	에어컨 (1,003)	컴퓨터 (596)	오디오 (483)	자가용 (403)	전자렌지 (352)

주 : 복수응답 결과임.

3. 경제생활 실태 분석

가. 농가의 일반적인 재산상태

□ 소득규모 및 소득의 원천

- 응답자(1,070명, 전체 조사대상자의 79.1%)의 1998년 평균 소득규모는 2천570만원이며, 그중 농업소득이 73.2%인 1천882만원, 농외소득은 26.8%인 688만원에 달함.
 - ▶ 거주지 특성별로 보면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평균 소득총계는 2천5백만원을 전후로 큰 차이 없으며 소득총계에 대한 농업소득의 비중도 70%대의 비슷한 수준임. 반면 도시지역은 소득총계가 2,851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중 52.6%가 농외소득임. 도시지역의 경우 농사규모가 적은 대신 농외부문에서 가계 소득의 절반이상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농가소득중 농업외 소득구조를 별도로 살펴보면 응답자 전체로 볼 때 농외 근로 소득이 농외소득 총액의 68.8%인 473만원에 달함. 이외에 품앗이 임금으로 얻은 소득과 자녀송금등의 기타 소득이 각각 약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조사됨.
 - ▶ 지역별로는 농외 근로소득 비중이 각 지역을 망라하고 가장 높은 가운데 도시지역의 경우 동비중은 전체 평균 수준에 미달하나 금액은 1,035만원에 달하여 타 거주지역의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도시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농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업농의 형태로 가계를 영위해 가는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됨.
 - ▶ 농가의 평균 소득규모 및 농업외 소득의 구조(만원, %)

구 분		평균 소득규모			농업외 소득의 구조			응답자수	
		소득총계	농업소득	농외소득	품앗이	농외 근로소득	기타(자녀 송금등)		
총 계	금액	2,570	1,882	688	117	473	98	1,070	
	비중	100.0	73.2	26.8	17.0	68.8	14.2		
거주지 특성별	평야	금액	2,549	1,797	752	89	550	113	294
		비중	100.0	70.5	29.5	11.8	73.1	15.0	
	산간	금액	2,520	1,905	615	128	393	94	312
		비중	100.0	75.6	24.4	20.8	63.9	15.3	
	중간	금액	2,597	1,962	635	112	437	86	432
		비중	100.0	75.5	24.5	17.6	68.9	13.5	
	도시	금액	2,851	1,350	1,501	313	1,035	153	32
		비중	100.0	47.4	52.6	20.9	69.0	10.2	

□ 자산·부채규모

- 응답자(866명, 전체 조사대상자의 64.1%)평균 자산규모는 1억4천482만원에 달하며, 그중 부동산이 평균 9천532만원, 저축액은 평균 1천572만원임.
 - ▶ 거주지별로는 중간지역의 자산규모가 가장 많고 도시지역의 자산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도시지역의 자산규모가 적은 것은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가 도시내 읍·면지역의 영세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됨.
- 농가의 평균 부채규모는 4천94만원이며, 농협에서 빌린 돈이 대부분으로 총부채의 80.3%의 비중을 차지함.
 - ▶ 거주지 특성별로는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4천만원대의 비슷한 부채 규모를 갖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자산규모가 가장 적은 대신 부채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부채총액중 농협에서 빌린 돈은 각 거주지역을 막론하고 80%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 농가의 자산·부채규모(만원)

구 분	평균 자산규모			평균 부채규모			응답자수	
	자산총계	(부동산)	(저축액)	부채총계	(농협부채)	(기타부채)		
응답자 전체	14,482	(9,532)	(1,572)	4,094	(3,287)	(807)	941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14,538	(9,235)	(965)	4,347	(3,232)	(1,115)	250
	산간지역	12,960	(8,929)	(1,285)	4,064	(3,296)	(768)	292
	중간지역	15,788	(10,389)	(2,244)	4,035	(3,373)	(662)	373
	도시지역	12,308	(6,609)	(940)	2,672	(2,411)	(261)	26

□ 농지규모(평, %)

- 조사대상 농가의 평균 농지규모는 4,235평이며, 그중 논이 62.2%, 밭이 24.7%, 과수원등 기타는 13.1%를 차지함.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주지역별로 비슷한 규모이며 평야지역은 논이, 산간지역은 밭의 규모가 타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의 전체 농지규모는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으로 조사됨.

▶ 농가의 평균 농지규모(평)

구 분		전 체	논	밭	과수원	기타	응답자수
응답자 전체		4,235	2,634	1,047	369	185	866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4,424	3,067	835	370	152	215
	산간지역	4,420	2,215	1,535	379	291	262
	중간지역	4,179	2,842	879	335	123	352
	도시지역	2,364	1,099	431	611	223	37

나. 여성농업인의 재산상태

□ 여성농업인 소유의 농지

● 소유 농지규모

- ▶ 여성농업인 자신 명의의 농지가 있는 비율은 농지보유 응답농가(866명 / 거주지 특성별 기준)의 34.9%(302명)인 바, 이 경우 그 소유규모는 2,371평으로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응답자 전체 농가의 평균 농지규모인 4,235평의 56%수준임. 이는 대부분 가구주가 남자이고, 재산 소유주가 가구주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명의의 농지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풀이됨. 또한, 남편이 없는 노년층이 주로 본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 쪽 '본인 명의 농지소유자의 특성' 참조)
- ▶ 거주지역별로는 산간지역 거주자는 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크고 전체 농지규모도 타 거주지역에 비해 가장 크며, 평야지역과 중간지역의 농지규모는 비슷한 수준임. 반면 도시지역 거주자의 농지규모는 매우 영세함.
- ▶ 여성농업인 명의의 평균 농지규모(평)

구 분		전체규모	논	밭	과수원	기타	응답자수
보유자 전체		2,371	1,501	556	225	89	302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2,329	1,554	435	240	100	84
	산간지역	2,669	1,506	948	196	19	104
	중간지역	2,175	1,542	282	226	125	104
	도시지역	1,656	550	380	380	346	10

주 : 여성농업인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만의 평균 농지규모임.

● 본인 명의의 농지소유 비율

- ▶ 조사사례 1,352명중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866명(거주지 특성별 기준)이며, 이중 여성농업인 본인 명의의 농지를 갖고 있는 응답자는 302명으로 표본 대비 22.5%, 응답자 대비 34.9%임.(* 다음 쪽 '주요 특성별 본인 명의의 농지소유자' 분석표 참조)

● 본인 명의 농지소유자의 특성

- ▶ 어떤 계층이 농지를 본인 명의로 많이 갖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로 응답자수와 본인 명의 소유자수를 구분하여 그 분포를 살펴 보았음. 이 경우 어떤 집단(예: 연령별 집단)내에서 특정 계층의 응답자수가 많으면(예: 40대 계층) 본인 명의 소유자중에서의 분포비율도 그 계층이 가장 높은 것이 통례이므로(예: B란의 분포), 같은 계층내의 응답자중에서 본인 명의 소유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비교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B/A란의 비율).
-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농지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계층을 추출해 본 결과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즉, 본인 명의의 농지를 갖고 있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35.1%인데 비해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응답자의 45.1%가, 학력별로는 국졸자가 41.2%로 본인 명의의 농지소유 비율이 전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남.
- ▶ 혼인여부별, 응답자 신분별로 보면 본인 명의 농지소유자의 특징이 더욱 뚜렷해지는 바, 남편이 없는 기혼자의 경우 응답자의 60.2%가 본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여성농업인 자신이 가구주인 경우에도 54.1%가 본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응답자가 가구주의 아내와 며느리인 경우에 본인 명의의 농지소유 비율이 각각 31.5%, 30.9%로 평균치인 35%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 거주지별로는 평야지역과 산간지역이 타 지역보다 여성농업인 본인 명의 농지보유 비율이 높음.
- ▶ 이를 종합해 보면,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 남편의 사별 등으로 인해 가구주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농지를 물려받아 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주로 본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음.

▶ 주요 특성별 본인 명의의 농지소유자 분포

구 분		응답자수(A)		본인명의 소유자수(B)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연 령 별	30세 미만	36	4.2	4	1.4	11.1
	30~39세	198	23.1	54	18.2	27.3
	40~49세	322	37.6	116	39.2	36.0
	50~59세	168	19.6	62	20.9	36.9
	60세 이상	133	15.5	60	20.3	45.1
	계	857	100.0	296	100.0	34.5
학 력 별	국 졸	245	29.7	101	35.4	41.2
	중 졸	297	36.0	88	30.9	29.6
	고 졸	240	29.1	79	27.7	32.9
	전문대졸이상	17	2.0	2	0.7	11.8
	기 타	26	3.2	15	5.3	57.7
	계	825	100.0	285	100.0	34.5
혼 인 여 부 별	미 혼	181	2.1	4	1.3	22.2
	기혼(남편 유)	726	85.2	228	76.8	31.4
	기혼(남편 무)	108	12.7	65	21.9	60.2
	계	852	100.0	297	100.0	34.9
응 답 자 신 분 별	가구주 본인	148	17.2	80	26.6	54.1
	가구주 아내	629	73.1	198	65.8	31.5
	가구주 어머니	13	1.5	5	1.7	38.5
	가구주 며느리	55	6.4	17	5.6	30.9
	가구주 딸	15	1.7	14	0.3	6.7
	계	860	100.0	301	100.0	35.0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215	24.8	84	27.8	39.1
	산간지역	262	30.3	104	34.4	39.7
	중간지역	352	40.6	104	34.4	29.5
	도시지역	37	4.3	10	3.3	27.0
	계	866	100.0	302	100.0	34.9

□ 여성농업인 명의의 예금규모

- 응답자중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이 있는 경우가 91.7%에 달하여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통장 하나 이상은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통장의 예금규모는 5백만원 이하가 전체의 53.5%를 차지하여 절반이상이 저축형태보다는 생활자금 용도로 통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 따라서 통장 보유비율이 높다는 것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독립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가사를 위한 생활자금을 관리하는 형태의 통장 보유가 지배적이라고 보여짐.
- ▶ 여성농업인 소유의 예금규모

구 분	1백만원 미만	1백만원-5백만원	5백만원-1천만원	1천만원-3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 이상	통장없음	계
사례수(명)	334	318	202	206	33	23	101	1,217
백분율(%)	27.4	26.1	16.6	16.9	2.7	1.9	8.3	100.0

- 연령별로 볼 때 각 연령별로 1백만원~5백만원의 예금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30세미만의 경우 5백만원이하가 76%에 달하며, 1천만원이상의 예금 비중은 3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20%대에 달함.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1백만원미만의 소액 통장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며, 혼인여부별로 보면 미혼자는 5백만원이상의 소액 예금통장을 주로 갖고 있고, 기혼자의 경우 남편유무에 관계없이 비슷한 분포임.
- 가구주의 어머니인 경우 1백만원 미만의 소액 통장을 주로 갖고 있으며, 가구주 본인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농촌 거주기간 및 영농경력별로는 5년 미만인 응답자가 5백만원 이하의 통장을 갖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여타 계층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 거주자의 75%가 1백만원~1천만원사이의 예금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타 지역 거주자와 다른 특징중 하나이고, 다른 거주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와 비슷한 예금구조를 보이고 있음

▶ 응답자 특성별 실태(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1백만원 미만	1백만-5백만원	5백만-1천만원	1천만-3천만원	3천만-5천만원	5천만원 이상	통장없음	비 고
연 령 별	30세 미만	41.3	34.9	7.9	9.5	-	3.2	3.2	응답자수 =1,205 Sig.=0.00
	30~39세	30.5	19.3	15.9	20.3	2.7	1.7	9.5	
	40~49세	24.6	28.4	18.7	16.0	2.1	1.5	8.6	
	50~59세	19.5	25.7	17.6	21.0	3.3	1.4	11.4	
	60세 이상	34.6	29.6	13.0	11.7	4.9	3.1	3.1	
학 력 별	국 졸	30.3	28.4	13.1	15.9	3.1	1.6	7.5	응답자수 =1,156 Sig.=0.01
	중 졸	23.1	24.9	19.6	18.1	3.0	0.8	10.6	
	고 졸	27.0	27.3	18.4	17.0	1.9	3.1	5.3	
	전문대졸	31.3	18.8	6.3	43.8	-	-	-	
	대졸이상	47.1	29.4	11.8	-	5.9	-	5.9	
	기 타	41.3	21.7	13.0	6.5	6.5	-	10.9	
혼 여 부 별	미 혼	30.0	46.7	3.3	16.7	-	-	3.3	응답자수 =1,195 Sig.=0.03
	기혼(남편 유)	27.3	24.6	17.5	17.2	3.0	1.6	8.8	
	기혼(남편 무)	26.0	34.4	11.5	16.8	1.5	3.8	6.1	
응 답 자 신 분 별	가구주 본인	24.0	29.0	13.1	21.3	2.7	2.7	7.1	응답자수 =1,206 Sig.=0.01
	가구주 아내	27.2	25.0	18.1	15.6	3.1	1.7	9.3	
	가구주 어머니	64.7	17.6	11.8	5.9	-	-	-	
	가구주 며느리	32.3	24.0	15.6	19.8	-	2.1	6.3	
	가구주 딸	25.8	51.6	3.2	19.4	-	-	-	
농 촌 거 주 기 간 별	5년 미만	36.7	32.7	20.4	4.1	-	2.0	4.1	응답자수 =1,208 Sig.=0.04
	5년~10년	25.3	33.3	14.9	10.3	4.6	2.3	9.2	
	10년~20년	32.5	22.4	14.3	19.4	1.8	0.3	9.3	
	20년~30년	23.9	29.0	16.7	18.1	2.9	3.3	6.2	
	30년 이상	25.8	24.9	18.0	17.1	2.8	2.0	9.3	
영 경 력 별	5년 미만	31.4	33.1	20.7	10.7	1.7	0.8	1.7	응답자수 =1,203 Sig.=0.06
	5년~10년	25.8	23.9	17.2	19.0	2.5	2.5	9.2	
	10년~20년	31.1	23.8	15.8	18.0	1.9	0.5	8.7	
	20년~30년	20.9	28.5	16.9	19.7	2.8	3.2	8.0	
	30년 이상	28.6	25.3	15.1	14.8	3.6	2.3	10.2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26.2	29.4	13.8	14.1	5.0	1.2	10.3	응답자수 =1,217 Sig.=0.04
	산간지역	28.9	23.8	17.1	17.6	1.4	2.8	8.4	
	중간지역	28.3	25.2	17.1	18.1	2.3	1.9	7.1	
	도시지역	15.0	30.0	30.0	20.0	-	-	5.0	
시 군 별	시소재지	28.9	26.7	16.6	14.6	2.2	2.2	8.8	응답자수 =1,217 Sig.=0.53
	군소재지	26.4	25.7	16.6	18.6	3.1	1.7	8.0	

다. 경제활동에서의 의사결정(남편있는 기혼자를 중심으로)

□ 영농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 영농활동에 있어서는 남편이 거의 혼자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 중에서도 영농자재를 구입하는 일은 61.1%가 남편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여성농업인 본인이 결정하거나 본인이 주도하여 결정하는 비중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품종 선택'도 '영농자재 구입' 다음으로 남편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영농활동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남.
- 농지를 매매하는 일은 여성농업인 혼자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2.4%에 불과한 대신 부부가 공동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농지매매는 곧 가계의 재산 이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부가 상의하여 의사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은 남편이 혼자 결정하는 일이 낮고 부부가 공동결정하거나 상의하여 의사결정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로서, 이 또한 가계의 소득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 여성농업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은 외부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한해서 남편보다 의사결정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품앗이 등의 경우 여성농업인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만큼 부녀자들을 동원하는데 있어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함.

▶ 영농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비율(%)

구 분	남편이 결정	본인이 결정	부부 공동결정	남편주도 본인과 상의	본인주도 남편과 상의	기타
농사일정 짜기	40.2	7.6	30.0	18.9	1.6	1.8
품종 선택	49.7	5.7	23.6	17.5	1.5	2.1
영농자재 구입	61.1	7.0	15.7	12.6	1.7	1.9
외부인력 고용	25.2	26.8	26.4	14.1	5.6	1.8
농산물 판매	36.4	12.9	29.6	16.2	2.9	2.0
농지 매매	43.7	2.4	30.9	19.6	1.5	2.0

□ 자금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 자금 관리에 있어서는 영농활동의 경우보다 여성농업인들의 의사결정 참여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생활자금 관리는 여성농업인 혼자 결정하는 비율이 42.5%에 달했으며 본인이 주도하는 경우와 합하면 여성농업인 주도하에 결정하는 비율이 약 52%에 달함.
- 반면 영농자금을 관리 또는 차입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실정이며 생활용도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남편의 의사결정 참여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국 가사활동과 관련된 제한된 경우에만 여성농업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을 뿐 영농활동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금관리면에서 대부분 남성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실정임.

▶ 자금관리에 관한 의사결정구조 비율(%)

구 분	남편이 결정	본인이 결정	부부 공동결정	남편주도 본인과 상의	본인주도 남편과 상의	기타
영농자금 관리	40.9	14.9	25.2	14.1	3.4	1.5
생활자금 관리	13.2	42.5	24.0	9.5	9.4	1.4
저축 가입	16.1	34.9	28.0	10.6	8.9	1.5
영농자금 차입	47.6	6.2	24.3	19.0	1.3	1.7
생활자금 차입	29.4	21.6	26.8	13.2	7.2	1.7

4. 농업노동 실태

가. 농업노동 실태

□ 평균 농업노동시간

- 여성농업인이 가사노동외에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평균 시간은 농번기에 약 8.5시간, 농한기에는 4.6시간임.
- ▶ 거주지역별로 볼 때 농번기의 경우 산간지역의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8.95시간이며 도시지역 거주자의 농번기 평균 농업노동시간은 6.87시간으로 가장 적은 편임. 농한기에는 거주지역별로는 두드러진 차이를 찾아볼 수 없음.
- ▶ 평균 농업노동시간

구 분	전체 평균	거주지 특성별 평균			
		평야지역	산간지역	중간지역	도시지역
농번기	8.45	8.04	8.95	8.50	6.87
농한기	4.64	4.54	4.50	4.79	4.70

□ 농업노동 분담실태

- 농번기와 농한기 공히 농사일은 남편이 전체의 약 50%, 여성농업인 본인이 약 40%를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밖의 식구나 외부노동력의 분담은 다 합해서 10%정도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음
- ▶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과 비교하여 이같은 분담비율을 통해 남편의 농업노동시간을 추산해 보면, 농번기 9.7시간, 농한기 5.4시간으로 여성농업인보다 농사일을 1시간 내외정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 농업노동 분담비율(%)

	본인	남편	(시)부모	자녀	그외 식구	외부노동력
농번기	40	46	7	3	1	3
농한기	41	48	7	2	1	1

□ 여성농업인의 총노동시간(가사노동+농업노동)

- 여성농업인은 농번기에 가사노동 4.9시간, 농업노동 8.5시간으로 하루 평균 13.4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조사됨. 농한기에는 가사노동 5.1시간, 농업노동 4.6시간으로 합계 9.7시간 일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평균 총노동시간

구 분	가사노동시간	농업노동시간	합 계
농 번 기	4.90	8.45	13.35
농 한 기	5.07	4.64	9.71

- 응답자 집안에서의 신분별로 평균 노동시간을 산정해 본결과 농번기에는 농가 가구주의 시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신분을 가진 여성농업인이 가사노동 6.28시간, 농업노동시간 8.53시간, 합계 14.81시간으로 농번기중 노동부담이 가장 크고, 가구주의 아내(합계 13.42시간), 가구주의 며느리(합계 13.38시간)의 순으로 노동시간이 많으며 딸의 신분을 가진 응답자의 노동부담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농한기에는 가구주 며느리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이 가장 큼.

- ▶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주 며느리 또는 가구주의 아내의 경우 노동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즉, 가구주의 며느리나 가구주의 아내의 경우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농한기에는 가사를 주도로 하는 입장에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됨.

▶ 응답자 신분별 여성농업인의 평균 노동시간

구 분	구 분	가사노동시간	농업노동시간	합 계
가구주 본인	농 번 기	4.66	8.39	13.05
	농 한 기	4.57	4.51	9.08
가구주 아내	농 번 기	4.87	8.55	13.42
	농 한 기	5.18	4.71	9.89
가구주 (시)어머니	농 번 기	6.28	8.53	14.81
	농 한 기	4.00	4.09	8.09
가구주 며느리	농 번 기	5.46	7.92	13.38
	농 한 기	5.40	4.61	10.01
가구주 딸	농 번 기	3.93	6.68	10.61
	농 한 기	3.78	3.14	6.92

※ 여성농업인 노동시간(총노동시간) 비교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총노동시간은 1994년 기준으로 7시간28분(약 7.5시간)이며, 그중 취업여성의 경우는 하루 평균 8시간 18분(약 8.3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부(6시간 3분)에 비해, 하루 총 일하는 시간이 가장 많음
- 본 실태조사 결과 조사된 여성농업인의 총노동시간과 비교하면 농번기의 경우 여성농업인은 한국 여성 전체평균보다 하루에 약 6시간 많이 일하는 것이며, 농한기와 비교하더라도 2시간이상 많이 일하는 것임.
-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취업여성과 비교하더라도 여성농업인이 농번기에 약 5시간, 농한기에 1.4시간 정도 많이 일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중 여성의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며, 이 경우에도 한국 여성 전체평균에 비해 약 1시간 정도 많이 일하는 정도임. 따라서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여성농업인의 노동강도를 실감할 수 있음.

<주요 국가별 여성의 총 노동시간 비교, 1994>

(단위 : 시, 분)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핀란드	덴마크	구미평균	한국	
여성 전체	8:30	7:21	7:31	6:49	7:09	6:33	6:57	7:28	여성농업인
가정주부	7:50	6:40	6:44	6:30	5:41	5:03	6:08	6:03	농번기: 13:21
취업여성	9:03	8:14	8:16	7:14	7:45	-	7:53	8:18	농한기: 9:43

주 :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본 실태조사 결과이며, 시·분 단위로 환산한 것임.

자료 :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999. 7

□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수요

- 여성농업인이 다룰 줄 아는 농기계 조사
 - ▶ 여성농업인이 전반적으로 다룰 줄 아는 농기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다룰 줄 아는 농기계로는 경운기인 것으로 조사됨. 승용차와 화물차가 그 다음 순위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순수한 농기계로는 경운기 다음으로 관리기, 건조기, 양수기, 선별기, 트랙터의 순으로 다룰 줄 아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여타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

▶ 다룰 줄 아는 농기계 종류(빈도수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⑥위	⑦위	⑧위
농기계명	경운기	승용차	화물차	관리기	건조기	양수기	선별기	트랙터
빈 도 수	375	311	219	181	161	148	112	105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여성용 농기계(농기구) 필요성에 대한 견해
 - ▶ 전체 응답자중 69%가 필요하다고 응답, 여성용 농기계에 대한 필요성을 비교적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전체응답빈도

구 분	필요	불필요	계
사례수(명)	835	376	1,211
백분율(%)	69.0	31.0	100.0

- 여성용 농기계(농기구) 수요
 - ▶ 여성용으로 별도의 농기계나 농기구를 개발·보급할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는 다룰 줄 아는 농기계 종류별 순위와 동일하게 경운기, 관리기가 상위 1,2위를 차지함.
 - ▶ 3위이하부터는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파종기의 순으로 여성용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 필요한 여성용 농기계 종류(빈도수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⑥위
농기계명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파종기
빈 도 수	276	265	128	124	76	54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농기계(농기구) 문제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력이 열세인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의 주류로 실질적인 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가의 관건임. 여성농업인들의 대다수가 농기계를 다룸에 있어 불편·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여성농업인의 주류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관점에서 농기계 개발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농업노동의 애로부문

- 농사를 짓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농산물 가격'을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그 다음으로 '힘 부족', '가사일하면서 농사일하기', '판매처 확보하기'등의 순으로 농업노동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지적한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불만은 전체 농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여성농업인들에게 해당되는 육체적 부담 해소나 가사환경 개선등에 대해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힘부족	영농기술 부족	농기계조작 미숙	시장정보 부족	판매처 확보	가사일과 농사일 병행	생산비이하 농산물 가격	기타	계
사례수(명)	318	103	59	33	149	299	325	9	1,295
백분율(%)	24.6	8.0	4.6	2.5	11.5	23.1	25.1	0.7	100.0

- 위의 결과를 응답자의 연령별로 볼 때 30대 집단에서는 '가사일하면서 농사하기'를, 50세이상의 노령층에서는 '힘 부족'을 농사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어 해당 연령층의 고충을 짐작케 하고 있음.
- 학력별로는 국졸자가 '힘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들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계층에 노령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여타 학력 계층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가장 큰 애로요인이며, '가사일하면서 농사일하기'를 그 다음 애로요인으로 꼽고 있음.
- 혼인여부별로 보면, 미혼자는 농산물 가격외에 영농기술 부족과 판매처 확보를 주된 애로요인으로 꼽고 있는 반면, 기혼자중 남편없는 응답자의 경우 힘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들고 있음. 이는 응답자신분별로 볼 때 가구주의 어머니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인 바 이는 해당 계층이 노년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농촌거주기간과 영농경력이 10년 미만인 응답자인 경우 농산물 가격보다는 가사일하면서 농사하기와 힘 부족을 가장 주된 두 가지 애로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영농경력 30년 이상자의 경우 힘 부족을 가장 큰 애로로 들고 있음. 여타 계층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가장 큰 애로로 지적함.
- 거주지 특성별, 시군별로는 전체 응답의 경우와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

III.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응답자 특성별 실태(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힘부족	영농 기술 부족	농기계 조작 미숙	시장정 보 부족	판매처 확보	가사일하 며 농사 일하기	낮은 농산물 가격	기 타	비 고
연령별	30세 미만	21.5	12.3	3.1	9.2	12.3	20.0	21.5	-	응답자 수 =1,281 Sig.=.00
	30~39세	17.8	10.4	3.9	3.2	15.2	26.5	22.0	1.0	
	40~49세	17.1	6.6	4.7	2.7	12.6	26.8	29.2	0.2	
	50~59세	33.8	5.5	4.6	1.4	6.8	18.7	26.9	2.3	
	60세 이상	49.4	8.6	5.2	-	8.0	10.3	18.4	-	
학력별	국졸	34.8	4.3	4.3	0.9	8.4	23.5	23.8	-	응답자 수 =1,222 Sig.=.00
	중졸	20.3	9.1	3.6	2.4	12.0	22.5	29.7	0.5	
	고졸	20.0	10.1	5.3	2.7	13.9	25.6	21.3	1.1	
	전문대졸	12.5	12.5	-	25.0	12.5	-	37.5	-	
	대졸이상	6.3	12.5	-	12.5	6.3	18.8	43.8	-	
	기타	34.6	3.8	7.7	3.8	13.5	21.2	15.4	-	
혼인 여부별	미혼	12.1	21.2	-	9.1	15.2	12.1	30.3	-	응답자 수 =1,267 Sig.=.00
	기혼(남편 유)	21.9	7.2	4.8	2.7	12.0	24.5	26.3	0.6	
	기혼(남편 부)	47.5	9.2	4.3	-	7.8	15.6	14.2	1.4	
응답자 신분별	가꾸주 본인	43.7	7.0	5.5	1.0	9.0	14.6	18.1	1.0	응답자 수 =1,281 Sig.=.00
	가꾸주 아내	21.3	7.6	4.5	2.4	12.6	23.6	27.6	0.4	
	가꾸주 어머니	38.9	5.6	-	-	5.6	27.8	22.2	-	
	가꾸주 며느리	18.6	9.3	3.1	7.2	7.2	37.1	14.4	3.1	
	가꾸주 딸	12.5	21.9	3.1	6.3	12.5	9.4	34.4	-	
농촌거주 기간별	5년 미만	19.6	17.6	13.7	13.7	3.9	27.5	3.9	-	응답자 수 =1,286 Sig.=.00
	5년~10년	25.5	16.0	5.3	-	9.6	23.4	19.1	1.1	
	10년~20년	21.8	6.4	3.6	2.5	13.0	25.7	26.0	1.1	
	20년~30년	23.2	7.8	2.4	4.1	15.0	23.5	23.9	-	
	30년 이상	27.8	6.8	5.6	1.0	9.1	20.0	29.0	0.8	
영농 경력별	5년 미만	16.5	17.3	5.5	7.9	9.4	22.8	19.7	0.8	응답자 수 =1,279 Sig.=.00
	5년~10년	26.7	8.1	5.8	2.3	15.1	23.3	17.4	1.2	
	10년~20년	17.9	6.6	2.8	2.3	11.5	26.3	32.1	0.5	
	20년~30년	23.6	7.4	3.7	2.6	15.5	23.2	23.6	0.4	
	30년 이상	36.0	5.7	6.6	0.6	6.3	18.9	24.9	0.9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27.5	9.9	4.1	2.5	8.5	23.1	24.2	-	응답자 수 =1,295 Sig.=.03
	산간지역	23.5	5.1	3.8	1.8	15.9	22.8	26.1	1.0	
	중간지역	24.0	8.0	5.2	2.8	10.0	23.8	25.1	1.0	
	도시지역	14.3	16.7	7.1	7.1	14.3	16.7	23.8	-	
시군별	시소재지	23.8	8.8	4.8	2.0	12.3	26.0	21.8	0.5	응답자수 =1,295 Sig.=.16
	군소재지	25.1	7.3	4.4	2.9	10.9	21.0	27.5	0.8	

다. 이농에 대한 견해

- 여성농업인들은 상당수가 이농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응답자의 약 11.8%만 이농의사가 없다고 대답한 반면 나머지인 88.2%가 여건만 된다면 이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이농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소득이 보장 안된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 이유로는 ‘자녀 교육여건’, ‘농사일이 힘들어서’의 순임. 이 같은 결과는 위에서 농사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지적된 순위와 동일한 바, ‘소득 보장’, ‘자녀교육여건’, ‘힘든 농사여건’ 같은 항목들은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며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겠음.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생활여건 안좋아서	자녀 교육문제 때문	농사일이 힘들어서	문화생활 부족	소득이 보장안됨	이농의사 없음	기타	계
사례수(명)	78	313	190	46	487	151	20	1,285
백분율(%)	6.1	24.4	14.8	3.6	37.9	11.8	1.6	100.0

- 응답자 특성별로 분류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다만, 30대 연령층, 대졸이상자, 가구주의 며느리, 농촌거주기간 및 영농경력 10년 미만자의 경우 ‘자녀교육 때문’이라는 이유를 소득문제보다 앞서 이농을 고려케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 본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가 얼마나 큰가를 대변함. 즉 우리의 농업·농촌 현실이 여성농업인 대부분으로 하여금 이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노동여건·생활여건의 근본적인 개선없이는 인구규모적으로 여성농업인이 주류가 될 뿐 의식과 행태·자각면에서 명실상부한 생산·생활·공간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의 주류화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함.
- 또한 본 문항분석결과는 앞의 농촌생활 실태중 만족도 부문에서 응답한 67% 이상이 보통 또는 그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여성농업인들의 현실적인 선택가능성이 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여줌. 즉 현재 여성농업인으로서 또는 농촌 여성으로서의 신분 정착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비교적 현실을 긍정하지만, 또는 긍정할 수 밖에 없지만 만약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이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음.

III.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응답자 특성별 이농이유(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생활여 건이 안 좋아서	자녀 교육문 제 때문	농사일 이 힘들 어서	문화생 활부족	소득이 보장 안됨	이농 의사 없음	기 타	비 고
연 령 별	30세 미만	3.1	26.6	14.1	14.1	34.4	7.8	-	응답자수 =1,271 Sig.=0.00
	30~39세	5.4	35.1	10.5	3.8	34.2	8.9	1.9	
	40~49세	5.8	27.0	12.8	3.3	40.9	9.5	0.6	
	50~59세	8.5	9.9	17.8	2.3	42.7	15.0	3.8	
	60세 이상	6.0	12.6	25.1	1.2	32.3	21.0	1.8	
학 령 별	국 졸	6.8	13.6	25.1	2.4	33.9	16.5	1.8	응답자수 =1,215 Sig.=0.00
	중 졸	5.5	25.7	12.2	1.9	45.3	9.1	0.2	
	고 졸	7.5	33.2	7.8	6.2	34.9	8.8	1.6	
	전문대졸	-	13.3	-	20.0	40.0	26.7	-	
	대졸이상	-	60.0	-	-	26.7	13.3	-	
	기 타	1.8	17.9	32.1	3.6	38.1	8.9	1.8	
혼 여 부 별	미 혼	-	18.2	12.1	18.2	45.5	6.1	-	응답자수 =1,255 Sig.=0.00
	기혼(남편 유)	6.1	26.2	13.8	3.5	38.2	10.7	1.6	
	기혼(남편 무)	8.8	12.5	21.3	1.5	33.8	19.9	2.2	
응 답 자 신 분 별	가구주 본인	7.7	14.9	12.8	2.1	43.6	16.4	2.6	응답자수 =1,270 Sig.=0.00
	가구주 아내	5.8	25.6	15.8	3.4	36.7	11.3	1.3	
	가구주 어머니	21.4	-	-	-	50.0	28.6	-	
	가구주 며느리	6.0	37.0	11.0	4.0	33.0	6.0	3.0	
	가구주 딸	-	18.8	15.6	15.6	43.8	6.3	-	
농촌거주 기 간 별	5년 미만	6.0	42.0	16.0	8.0	22.0	6.0	-	응답자수 =1,275 Sig.=0.00
	5년~10년	6.5	44.1	7.5	2.2	32.3	6.5	1.1	
	10년~20년	6.5	27.5	14.3	3.8	39.4	8.1	0.5	
	20년~30년	8.0	23.1	13.3	3.5	39.9	11.5	0.7	
	30년 이상	4.6	16.6	17.7	2.9	38.9	16.0	3.2	
영 경 력 농 령 별	5년 미만	4.8	33.3	16.7	11.9	25.4	4.8	3.2	응답자수 =1,269 Sig.=0.00
	5년~10년	8.0	34.7	9.7	3.4	33.0	10.2	1.1	
	10년~20년	6.8	30.9	10.4	2.8	39.5	8.9	0.8	
	20년~30년	5.2	17.2	13.9	3.4	49.8	9.7	0.7	
	30년 이상	5.6	11.5	23.9	1.0	34.4	20.7	3.0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8.9	23.3	12.5	4.4	39.2	10.3	1.4	응답자수 =1,285 Sig.=0.00
	산간지역	5.5	24.7	15.4	3.4	35.7	14.6	0.8	
	중간지역	5.0	24.4	15.6	2.8	39.0	11.6	1.6	
	도시지역	-	29.3	19.5	7.3	34.1	-	9.8	
시 군 별	시소재지	6.7	23.7	15.3	3.3	37.3	11.5	2.2	응답자수 =1,285 Sig.=0.70
	군소재지	5.6	24.9	14.4	3.8	38.3	12.0	1.1	

라. 타부문 취업에 대한 견해

□ 타부문 취업의사 및 이유

● 타부문 취업의사

- ▶ 응답자중 65.8%가 농사일 이외에 다른 사업이나 취업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타부문 취업을 고려	고려하지 않음	계
사례수(명)	795	413	1,208
백분율(%)	65.8	34.2	100.0

- ▶ 타부문 취업을 생각하는 주요 계층은 연령이나 농촌경력과 관련이 있으며, 학력 과도 다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즉 연령이 낮고 농촌거주기간이나 영농경력이 짧은 계층이 타부문 취업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혼인여부 별·응답자 신분별 결과에서도 미혼자나 가구주의 딸등과 같이 연령이 낮은 계층에서 타부문 취업의사가 높으며, 학력별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타부문 취업의사가 다소 높게 나타남.
- ▶ 응답자 특성별 타부문 취업의사 비율(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타부문 취업의사		비 고	구 분		타부문 취업의사		비 고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	30세 미만	88.5	11.5	응답자수 =1,197 Sig.=0.00	농촌 거주 기간별	5년 미만	72.9	27.1	응답자수 =1,198 Sig.=0.00
	30~39세	70.1	29.9			5년~10년	71.4	28.6	
	40~49세	70.0	30.0			10년~20년	71.8	28.2	
	50~59세	59.5	40.5			20년~30년	67.4	32.6	
	60세 이상	45.3	54.7			30년 이상	58.5	41.5	
학력별	국졸	55.1	44.9	응답자수 =1,139 Sig.=0.00	영농 경력별	5년 미만	80.7	19.3	응답자수 =1,191 Sig.=0.00
	중졸	69.0	31.0			5년~10년	71.3	28.7	
	고졸	77.5	22.5			10년~20년	71.3	28.7	
	전문대졸	78.6	21.4			20년~30년	66.0	34.0	
	대졸이상	78.6	21.4			30년 이상	49.3	50.7	
기타	40.0	60.0							
혼인 여부별	미혼	96.7	3.3	응답자수 =1,180 Sig.=0.00	시군별	시소재지	63.4	36.6	응답자수 =1,208 Sig.=0.12
	기혼(남편 유)	67.9	32.1			군소재지	67.6	32.4	
	기혼(남편 무)	45.3	54.7						
응답자 신분별	가구주 본인	56.0	44.0	응답자수 =1,194 Sig.=0.00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66.0	34.0	응답자수 =1,208 Sig.=0.10
	가구주 아내	67.6	32.4			산간지역	63.4	36.6	
	가구주 어머니	23.5	76.5			중간지역	66.0	34.0	
	가구주 며느리	69.3	30.7			도시지역	82.9	17.1	
	가구주 딸	93.3	6.7						

- ▶ 시군별로는 군소재지 응답자의 타부문 취업의사가 시소재지보다 다소 높으며, 거주특성별로 보면 도시지역 응답자의 82.9%가 타부문 취업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여타 계층의 응답자보다 타부문 취업의사가 매우 높고 여타 지역은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같이 60%대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타부문 취업을 하려는 이유
 - ▶ 경제적 이유인 '살림이 어려워서' 타부문 취업을 하려는 비율이 47.4%로 가장 많고, 노동여건상 '농사가 힘들어서' 타부문에 취업하려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많은 30.1%에 달하여 이 두 가지 이유가 전체 응답자의 77.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
 -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살림이 어려워서	농사가 힘들어서	나만의 일을 갖고 싶어	적성에 안맞아서	기 타	계
사례수(명)	441	280	85	106	18	930
백분율(%)	47.4	30.1	9.1	11.4	1.9	100.0

- ▶ 응답자 특성별로 구분해 보아도 '살림이 어려워서'나 '농사가 힘들어서'의 두 가지 이유가 타부문에 취업하려는 이유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순위에서는 계층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대부분 경제적 이유인 '살림이 어려워서' 타부문에 취업하려는 이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연령별로는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계층에서 '농사일이 힘들어서' 타부문에 취업하려는 이유가 '살림이 어려워서' 타부문에 취업하려는 이유보다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없는 기혼자, 영농경력이 가장 많은 계층(30년 이상), 거주지역중 도시지역 응답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줌.
- ▶ 개인의 적성이나 직업적 독립의 차원에서 타부문에 취업을 고려하는 비율은 극히 낮으며 30세 미만자, 미혼자 등 연령이 낮은 일부 계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앞의 두 계층에서 조차 '적성에 안맞아서' 타부문에 취업하려는 비율이 '농사일이 힘들어서'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비율 분포를 보이는 정도임.
- 본 문항에서 응답자의 65.8%가 농사일 이외 타부문 사업이나 취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안으로 삭일 수 밖에 없는 불만요인을 보여줌.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현재 여성농업인이 몸담고 있는 농업부문에서 일정부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여성농업인의 타부문 취업의사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형성함

III.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응답자 특성별 타부문 취업 고려 이유 분포(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살림이 어려워서	농사가 힘들어서	나만의일을 갖고자	적성에 안맞아서	기 타	비 고
연 령 별	30세 미만	24.6	31.6	19.3	24.6	-	응답자수 =918 Sig.=0.00
	30~39세	49.4	23.0	14.9	8.5	4.3	
	40~49세	51.2	25.2	8.6	13.8	1.3	
	50~59세	48.9	38.5	2.2	8.9	1.5	
	60세 이상	41.5	50.0	2.8	4.7	0.9	
학 령 별	국 졸	47.4	41.8	2.8	7.0	0.9	응답자수 =885 Sig.=0.00
	중 졸	55.0	25.7	8.5	9.4	1.3	
	고 졸	39.9	24.8	14.5	17.7	3.2	
	전문대졸	45.5	18.2	18.2	18.2	-	
	대졸이상	27.3	45.5	18.2	9.1	-	
	기 타	53.1	40.6	3.1	3.1	-	
혼 인 여 부 별	미 혼	17.9	46.4	14.3	21.4	-	응답자수 =912 Sig.=0.00
	기혼(남편 유)	49.8	26.5	9.7	11.8	2.1	
	기혼(남편 무)	33.7	53.9	4.5	6.7	1.1	
응 답 자 신 분 별	가구주 본인	43.9	43.2	3.6	7.9	1.4	응답자수 =920 Sig.=0.00
	가구주 아내	49.5	28.2	9.8	10.7	1.8	
	가구주 어머니	62.5	37.5	-	-	-	
	가구주 며느리	47.6	15.9	13.4	18.3	4.9	
	가구주 딸	14.3	46.4	14.3	25.0	-	
농촌거주 기 간 별	5년 미만	34.1	26.8	22.0	12.2	4.9	응답자수 =923 Sig.=0.00
	5년~10년	38.6	34.3	12.9	14.3	-	
	10년~20년	51.8	22.7	9.9	12.8	2.8	
	20년~30년	50.7	29.2	6.8	12.8	0.5	
	30년 이상	45.3	36.7	7.1	8.7	2.3	
영 농 경 령 별	5년 미만	29.0	30.8	15.0	21.5	3.7	응답자수 =917 Sig.=0.00
	5년~10년	42.4	26.5	17.4	13.6	-	
	10년~20년	54.8	23.8	8.9	10.2	2.3	
	20년~30년	58.0	26.9	5.2	8.3	1.6	
	30년 이상	40.7	45.1	3.3	9.9	1.1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42.9	28.9	11.7	15.0	1.5	응답자수 =930 Sig.=0.03
	산간지역	49.8	32.8	5.5	9.2	2.6	
	중간지역	50.0	27.4	10.3	10.9	1.4	
	도시지역	37.1	45.7	5.7	5.7	5.7	
시 군 별	시소재지	43.5	31.3	9.4	13.5	2.3	응답자수 =930 Sig.=0.23
	군소재지	50.3	29.2	8.9	9.9	1.7	

5. 보건·복지·교육부문 실태 및 욕구

가. 여성농업인의 질병과 치료

□ 여성농업인 질병의 종류

- 여성농업인들이 최근 1년동안 걸린 적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온몸이 쭈시고 걸리는 '일반 통증', 무릎이나 손마디등 뼈마디부위의 질병인 '관절 질환', 위장 장애나 위궤양등의 '소화성 질환'의 순으로 빈도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위의 세 가지 외의 질병에 걸렸거나 현재 앓고 있는 경우는 소수에 해당함.
 -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응답자 전체 (빈도수)	일반통증 (805)	관절질환 (574)	소화성질환 (386)	신경성질환 (303)	고혈압 (79)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연령별 또는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많이 걸리는 질병 종류에 차이가 있는지 구분해 보아도 빈도수 1~4위 까지는 전체 응답빈도의 상위 네 가지 질병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그 외의 질병에 대한 응답자는 극히 소수에 해당함.
 - ▶ 연령별, 거주지 특성별 응답빈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연령별	30세 미만	일반 통증	소화성질환	관절질환	신경성질환	눈병
	30세~39세	일반 통증	관절질환	소화성질환	신경성질환	고혈압
	40세~49세	일반 통증	관절질환	소화성질환	신경성질환	눈병
	50세~59세	일반 통증	관절질환	소화성질환	신경성질환	고혈압
	60세 이상	일반 통증	관절질환	신경성질환	소화성질환	고혈압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일반 통증	관절질환	소화성질환	신경성질환	눈병
	산간지역	일반 통증	관절질환	소화성질환	신경성질환	고혈압
	중간지역	일반 통증	관절질환	소화성질환	신경성질환	눈병
	도시지역	일반 통증	관절질환	소화성질환	신경성질환	당뇨병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자주 찾는 진료기관

- 평소에 질병을 앓을 경우 가장 자주 찾는 진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의 순으로 자주 찾고 있음.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비율이 높은 것은 농촌지역의 진료시설 여건을 감안해 볼때 다소 의외의 현상이라고 생각됨.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병원이나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약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타	계
사례수(명)	669	90	309	107	123	2	1,300
백분율(%)	51.5	6.9	23.8	8.2	9.5	0.2	100.0

- 이러한 실태를 거주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이 병원이나 의원보다는 약국을 찾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비율이 타 진료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임.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포함)를 찾는 비율은 산간지역에서 타 지역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냄.

▶ 거주지 특성별 빈도(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병원이나 의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약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타
평야지역	50.1	8.4	24.8	7.9	8.4	0.3
산간지역	46.3	7.1	21.5	13.4	11.8	-
중간지역	57.5	5.1	23.4	4.7	9.1	0.2
도시지역	37.2	14.0	39.5	7.0	2.3	-

□ 자주 찾는 이유

- ① 거리(거리가 가까워서) ② 대기시간(오래 기다리지 않으므로) ③ 진료비(진료비가 싸기 때문에) ④ 치료능력(잘 낮게 해주므로) ⑤ 친절도(친절하기 때문에)의 순으로 자주 찾는 이유를 들고 있음.

▶ 전체 응답빈도(빈도수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응답자 전체 (빈도수)	거리 (773)	대기시간 (589)	진료비 (444)	치료능력 (440)	친절도 (297)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거리가 가깝고, 오래 기다리지 않는 진료기관을 찾는 것은 도시지역 거주자(1위 거리, 2위 치료능력, 3위 대기시간)와 전문대졸 이상자(1위 대기시간, 2위 거리, 3위 진료비)를 제외하고는 응답자 특성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빈도수 각각 1,2위를 차지함. 진료기관의 능력보다 거리나 대기시간등의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이같은 결과는 굳이 농촌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라 할 수 있음. 이는 또한 큰 병이나 특수 질병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도 풀이됨.

▶ 주요 응답자 특성별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연령별	30세 미만	거리	대기시간	치료능력	진료비/시설
	30세~39세	거리	대기시간	진료비	치료능력
	40세~49세	거리	대기시간	치료능력	진료비
	50세~59세	거리	대기시간	진료비	치료능력
	60세 이상	거리	대기시간	진료비	치료능력
학력별	국졸	거리	대기시간	진료비	치료능력
	중졸	거리	대기시간	치료능력	진료비
	고졸	거리	대기시간	진료비	치료능력
	전문대졸이상	대기시간	거리	진료비	치료능력/시설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거리	대기시간	치료능력	진료비
	산간지역	거리	대기시간	진료비	치료능력
	중간지역	거리	대기시간	진료비	치료능력
	도시지역	거리	치료능력	대기시간	진료비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요구되는 진료기관

● 요구되는 진료기관의 종류

- ▶ 집 가까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진료기관은 병원이나 의원을 1순위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포함), 약국의 순임. 앞의 설문에서 조사한 평소에 자주 찾는 진료기관의 순위와 비교할 때 1위(병원이나 의원)는 동일하나 2위와 3위가 서로 순위가 바뀜. 즉, 실제 이용하는 진료기관은 병원이나 의원 다음으로 약국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요구하는 진료기관 순위로 볼 때 약국보다는 보건소가 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병원이나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약국	보건소	기타	계
사례수(명)	614	166	209	250	42	1,281
백분율(%)	47.9	12.8	16.4	19.8	3.2	100.0

- ▶ 요구하는 진료기관이 거주지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빈도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 다만, 도시지역에서 보건소와 약국을 원하는 비율이 동일하다는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임.

▶ 거주지 특성별 빈도(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병원이나 의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약국	보건소	기타
평야지역	53.6	11.4	13.1	20.6	1.4
산간지역	46.1	13.5	16.1	19.2	5.2
중간지역	46.2	13.4	18.3	18.7	3.4
도시지역	35.7	16.7	23.8	23.8	-

● 요구하는 진료기관의 요건

- ▶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는 진료기관의 요건은 전문성(전문적인 치료가 가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대기시간(오래 기다리지 않음), 진료절차(진료절차가 간단함)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집 근처에 전문적인 진료기관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기도 하나 대기시간이 짧고 진료절차가 간단한 전문 진료기관의 존재는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요건인 것으로 판단됨. 그 다음 순위로는 신뢰성(믿음이 감), 진료회수(여러 번 가지 않아도 됨), 진료비(진료비가 싸), 친절도 등의 순으로 진료비 문제는 의외로 매우 낮은 순위에 해당하고 있음.

▶ 전체 응답빈도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응답자 전체 (빈도수)	전문성 (687)	대기시간 (561)	진료절차 (425)	신뢰성 (376)	진료회수 (335)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 지역별등 응답자 특성별로 분류해 보아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들의 보편적인 요구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주요 응답자 특성별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연령별	30세 미만	전문성	신뢰성	진료회수	대기시간
	30세 ~ 39세	전문성	대기시간	진료절차	진료회수
	40세 ~ 49세	전문성	대기시간	진료절차	신뢰성
	50세 ~ 59세	전문성	대기시간	진료절차	신뢰성
	60세 이상	전문성	대기시간	진료절차	진료비
학력별	국졸	전문성	대기시간	진료절차	신뢰성
	중졸	전문성	대기시간	진료절차	신뢰성
	고졸	전문성	대기시간	진료절차	진료회수
	전문대졸이상	전문성	신뢰성	진료회수	대기시간/진료절차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전문성	대기시간	신뢰성	진료절차
	산간지역	전문성	대기시간	진료절차	신뢰성
	중간지역	전문성	대기시간	진료절차	신뢰성
	도시지역	전문성	대기시간/진료절차	-	신뢰성/진료회수

주 : 복수응답 결과임.

나. 보육시설 현황 및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

□ 보육시설 필요성 판단

- 응답자중 절반 가량은 어린이가 없는 경우이고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년내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가 ‘농번기에만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보다 많았음.
- ▶ 즉, 보육시설이 있으려면 농번기에만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임시 탁아소같은 시설보다는 일년내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설 보육시설을 보다 더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 ▶ 보육시설 필요성에 대한 응답빈도

구 분	일년내내 필요	농번기에만 필요	필요없음	어린이 없음	기타	계
사례수(명)	318	210	58	499	8	1,093
백분율(%)	29.1	19.2	5.3	45.7	0.7	100.0

- 거주지 특성에 따라 보육시설의 필요성 판단에 차이가 있는 지 조사해 본 결과 보육시설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며, 전체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년내내 필요하다는 견해가 농번기에만 필요하다는 경우보다 많았음. 다만, 도시지역 응답자만 농번기에만 필요하다는 비율이 일년내내 필요하다는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 거주지 특성별 빈도(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일년내내 필요	농번기에만 필요	필요없음	어린이 없음	기타
평야지역	37.9	16.4	7.0	37.2	1.3
산간지역	24.8	20.8	4.9	49.5	-
중간지역	26.3	18.9	4.4	49.4	0.9
도시지역	28.2	30.8	5.1	35.9	-

□ 원하는 보육시설의 종류 및 보육시설의 조건

● 원하는 보육시설의 종류

- ▶ 응답자의 절반은 어린이가 없는 경우이며, 원하는 보육시설에 응답한 경우 유아용 보육시설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유치원이 그 다음으로 원하는 보육시설이며 젓먹이용 탁아소는 소수만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따라서 유아용 어린이방, 놀이방 등 유아용 보육시설이 농촌에 가장 먼저 확충되어야 할 것임.
-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젓먹이용 탁아소	유아용 어린이집	유치원	필요없음	어린이 없음	기타	계
사례수(명)	16	333	81	59	504	15	1,008
백분율(%)	1.6	33.0	8.0	5.9	50.0	1.5	100.0

- 거주지 특성에 따라 원하는 보육시설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아용 어린이집을 원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함.

▶ 거주지 특성별 빈도(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젓먹이용 탁아소	유아용 어린이집	유치원	필요없음	어린이 없음	기타
평야지역	4.3	41.7	7.6	6.2	39.1	1.1
산간지역	0.9	28.6	7.5	5.0	55.3	2.5
중간지역	0.2	30.3	9.3	5.9	53.3	1.0
도시지역	-	48.6	-	5.7	45.7	-

● 보육시설의 조건 우선 순위

- ▶ 응답자 전체적으로는 교사의 질(믿음직스러워야 한다), 거리(가까워야 한다), 비용(저렴해야 한다)의 순으로 보육시설의 우선적인 조건을 들고 있으며, 이들 상위 세 가지 조건간 응답빈도는 거의 차이가 없음. 나머지 조건(교육수준, 시설, 맡길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한 응답은 상위 세 가지 조건에 비해 소수에 불과함. 따라서 교사의 질, 거리, 비용의 세 가지가 공히 보육시설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분석됨.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응답자 전체 (빈도수)	교사의 질 (443)	거리 (442)	비용 (438)	시설 (199)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로 조사결과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특성에 따른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상위 세 가지 조건(교사의 질, 거리, 비용)의 빈도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또한 어린아이를 가진 비율이 높아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30대 연령층의 경우 비용, 거리, 교사의 질 순으로 우선순위를 꼽고 있어 전체 집단의 경우와는 우선순위에 있어 차이가 남. 다만, 상위 3위 조건간 빈도수에 큰 차이가 없어 의미있는 결과라고는 볼 수 없음.
- ▶ 주요 응답자 특성별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연령별	30세 미만	비용	교사의 질	거리	시설
	30세~39세	비용	거리	교사의 질	시설
	40세~49세	교사의 질	거리	비용	시설
	50세~59세	거리	교사의 질	비용	시설
	60세 이상	거리	비용	교사의 질	시설
학력별	국졸	거리	교사의 질	비용	시설
	중졸	비용	교사의 질	거리	시설
	고졸	교사의 질	거리	비용	시설
	전문대졸이상	교사의 질	비용	시설	거리/맡기는 시간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교사의 질	거리	비용	시설
	산간지역	비용	교사의 질/거리	-	시설
	중간지역	거리	교사의 질	비용	시설
	도시지역	비용	교사의 질	거리/시설	-

주 : 복수응답 결과임.

다. 교육실태 및 요구

□ 영농교육 참여여건

- 응답자들은 바쁘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876건에 달했으며, 오래 걸리는 교육은 참석이 곤란한 것으로 응답('하루종일'이나 '1박2일이상' 걸리는 경우)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아('하루종일'과 '1박2일이상' 걸리는 경우를 합하여 총 688건) 여성농업인들의 교육 참석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여건은 농사나 가사 등에 따른 개인 일정이 크게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음. 그 다음 순으로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차지하여 농촌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자녀 보육이 교육참석을 제약할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님. 교육참여 여건을 묻는 7개항중 응답수 순위가 6위에 해당할 정도로 교육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여건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음.
- ▶ 영농교육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빈도수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응답자 전체 (빈도수)	바쁘지않으면 언제든지 참석 (876)	하루종일 걸리지않으면 참석 (483)	교통수단이 있어야 참석 (262)	1박2일이상 걸리지 않으면 참석 (205)	참여할만한 교육 부재 (133)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교육받고 싶은 분야

- 영농교육분야
 - ▶ 단일 항목으로는 컴퓨터 활용에 대한 교육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컴퓨터 교육에 대한 순위는 50세미만과 50세이상의 연령층으로 대별되어 지는데 50세미만은 공히 컴퓨터활용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1순위인 반면 50세이상 연령층에서는 3위 내지 4위에 해당하는 응답수를 나타냄.
 - ▶ 두 번째로 빈도수가 많은 교육분야는 '현재 하고 있는 작목에 대한 영농기술교육'이며, '비료와 농약사용 기술교육'과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심있는 작목에 관한 영농기술교육'이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순위를 차지함.

▶ 전체 응답빈도(빈도수 순위)

순 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교육명 (빈도수)	컴퓨터 (영농을 위한 컴퓨터 활용 교육) (673)	현재 작목 (현재 하고있는 작목에 대한 영농교육) (605)	비료·농약 (비료·농약에 대한 사용기술) (452)	관심 작목 (관심있는 작목에 대한 영농교육) (372)	농기계 (농기계 사용교육) (294)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 2위와 4위에 해당하는 교육분야가 모두 경작물의 영농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경작물에 관한 영농기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컴퓨터 활용교육과 함께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4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여성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수강(30세미만), 전반적인 농업경영관리 교육(30대)에 대한 욕구가 3위 내지 4위를 차지하고 있어 연령층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차별화가 필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주요 특성별 영농교육 요구분야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연령별	30세미만	컴퓨터	관심 작목	현재 작목	최고경영자과정	비료·농약
	30~39세	컴퓨터	현재 작목	농업경영관리	관심 작목	비료·농약
	40~49세	컴퓨터	현재 작목	비료·농약	관심 작목	농기계
	50~59세	비료·농약	현재 작목	컴퓨터	관심 작목	농기계
	60세이상	비료·농약	현재 작목	관심작목	컴퓨터	농기계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컴퓨터	현재 작목	비료·농약	관심 작목	농업경영관리
	산간지역	현재 작목	컴퓨터	비료·농약	관심 작목	농기계
	중간지역	컴퓨터	관심 작목	비료·농약	관심 작목	농업경영관리
	도시지역	컴퓨터	관심 작목	현재 작목	최고경영자과정	비료·농약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관심작목

- ▶ 현재 키우고 있지 않지만 영농교육을 받기 원하는 관심작목을 조사한 결과, '미작(쌀)'과 '과수'에 대한 관심이 전체 응답자의 21.6% 및 21.4%로 가장 많았고, '한우', '채소', '젓소(낙농)', '화훼', '양돈'등도 관심작목으로 나타남. 이 외의 작목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인원만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영농교육을 받기 원하는 관심작목 분포

구 분	쌀	쌀외 곡류	서류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작물	한우	젓소 (낙농)	양돈	양계	기타	계
사례수(명)	98	4	4	54	97	26	18	59	36	26	4	27	453
백분율(%)	21.6	0.9	0.9	11.9	21.4	5.7	4.0	13.0	7.9	5.7	0.9	6.0	100.0

주 : 관심작목을 지정한 응답자의 결과임.

● 일상교육분야

- ▶ 영농교육 말고 일상생활에 필요해서 받고 싶은 교육분야를 별도로 조사하였음. 그 결과 컴퓨터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했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교육을 꼽았고, 가사교육, 취미 및 교양교육의 순으로 교육 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교육받기 원하는 일상교육분야(전체 응답빈도)

구 분	가사교육	보건교육	컴퓨터 교육	취미, 교양교육	재테크 교육	부업교육	기타	계
사례수(명)	197	227	299	133	60	94	34	1,044
백분율(%)	18.9	21.7	28.6	12.7	5.7	9.0	3.3	100.0

- ▶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데 50세미만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컴퓨터교육을 가장 원하고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은 30대 및 40대 연령층이 가사교육, 30세미만자는 보건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50세 이상자의 경우는 노령층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보건교육을 가장 받기 원하고 가사교육을 그 다음 순으로 꼽고 있음.

▶ 주요 특성별 일상교육 요구분야(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가사 교육	보건 교육	컴퓨터 교육	취미, 교양교육	재테크 교육	부업 교육	기타	비 고
연 령 별	30세 미만	15.3	16.9	45.8	13.6	3.4	-	5.1	응답자수 =1,035 Sig.=0.00
	30~39세	18.4	15.7	39.7	11.6	3.7	7.5	3.4	
	40~49세	18.2	13.9	34.3	11.8	8.4	11.0	2.4	
	50~59세	23.6	37.9	8.0	17.8	3.4	8.0	1.1	
	60세 이상	16.9	43.2	5.1	11.0	5.1	10.2	8.5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16.4	22.7	29.3	13.5	8.6	6.9	2.6	응답자수 =1,043 Sig.=0.00
	산간지역	21.1	21.1	27.5	11.3	4.2	9.5	5.3	
	중간지역	19.4	22.2	29.9	13.6	3.6	9.6	1.7	
	도시지역	16.2	13.5	18.9	8.1	18.9	13.5	10.8	

6. 지역활동 · 남녀평등에 대한 의견

가. 지역사회 활동실태

□ 응답자의 단체가입 실태

- 금번 실태조사의 응답자는 농가주부모임 가입자가 주축이며, 생활개선회(생개회), 한국여성농민회(한여농), 전국여성농민회(전여농) 회원이 소수인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가입단체명	농가주부모임	생개회	한여농	전여농	기타	가입안함
빈도수	508	314	75	15	128	327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지역활동에 있어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견해

- 대외적 직위보유 희망 여부
 - ▶ 여성단체의 임원등의 사회적인 직위를 보유하는 것이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이러한 직위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함. 조사 결과는 전체응답자중 34.7%만이 직위를 갖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직위 보유여부가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 여성농업인들에게 의미있는 변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대외적 직위보유를 희망하는 지의 여부

구 분	예	아니오	계
사례수(명)	446	838	1,284
백분율(%)	34.7	65.3	100.0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 연령층의 직위보유를 희망하는 비율이 44.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으며 30대 미만과 60세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반대로 20% 미만의 낮은 희망율을 나타냄.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집단과 중졸 집단이 직위보유를 희망하는 비율이 특히 높으며, 거주지별로는 도시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직위보유 희망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별 직위보유 희망여부 실태(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예	아니오	비 고
연 령 별	30세 미만	18.8	81.2	응답자수 =1,272 Sig.=0.00
	30~39세	33.2	66.8	
	40~49세	44.0	56.0	
	50~59세	34.7	65.3	
	60세 이상	17.2	82.8	
학 력 별	국 졸	24.6	75.4	응답자수 =1,216 Sig.=0.00
	중 졸	43.4	56.6	
	고 졸	37.8	62.2	
	전문대졸	53.3	46.7	
	대졸이상	29.4	70.6	
	기 타	15.4	84.6	
혼 인 여 부 별	미 혼	27.3	72.7	응답자수 =1,255 Sig.=0.02
	기혼(남편 유)	36.4	63.6	
	기혼(남편 무)	24.8	75.2	
응 답 자 신 분 별	가구주 본인	27.6	72.4	응답자수 =1,272 Sig.=0.00
	가구주 아내	37.9	62.1	
	가구주 어머니	11.1	88.9	
	가구주 며느리	28.7	71.3	
	가구주 딸	21.9	78.1	
농 촌 거 주 기 간 별	5년 미만	28.8	71.2	응답자수 =1,274 Sig.=0.04
	5년~10년	27.5	72.5	
	10년~20년	37.0	63.0	
	20년~30년	40.3	59.7	
	30년 이상	31.2	68.8	
영 농 경 력 별	5년 미만	30.2	69.8	응답자수 =1,266 Sig.=0.00
	5년~10년	30.3	69.7	
	10년~20년	37.5	62.5	
	20년~30년	45.3	54.7	
	30년 이상	26.2	73.8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31.5	68.5	응답자수 =1,284 Sig.=0.06
	산간지역	31.9	68.1	
	중간지역	39.0	61.0	
	도시지역	39.0	61.0	
시 군 별	시소재지	37.7	62.3	응답자수 =1,284 Sig.=0.06
	군소재지	32.6	67.4	

□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 대외적 직위보유에 대한 인식

● 대외적 직위보유를 희망하는 이유

- ▶ 직위보유를 희망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70%가 활동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선택하였음. 이 결과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직위를 갖고 지역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활동하기를 원하는 개인적 성향에 가장 많이 좌우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 기타 이유로는 대외 행정기관과의 관계 개선, 대인관계 원활등의 이유로 대외적 직위를 갖기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위를 갖는 것이 물질적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
-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본인적성 부합	물질적 이유	대인관계 개선	행정기관 관계개선	금융기관 관계개선	직위가 좋아서	기타	계
사례수(명)	346	14	29	32	6	5	59	491
백분율(%)	70.5	2.9	5.9	6.5	1.2	1.0	12.0	100.0

주 : 직위보유 희망자에 한해 응답한 결과임.

- ▶ 활동하는 것이 좋기 때문(본인적성에 부합)이라는 항목을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선택하였기 때문에 응답자 주요 특성별로 본 결과는 동일 특성을 가진 집단내에서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큰 의미는 부여할 수 없음.

□ 지역사회활동의 애로요인

-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시간문제(시간을 많이 빼앗겨 집안일에 지장을 준다)가 가장 큰 애로이며, 모임여건에 대한 애로(시간이나 거리관계상 모이기가 쉽지 않다)가 두 번째 큰 애로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가사와 농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생활여건상 개인들의 바쁜 일정이 지역사회활동에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인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집안에서 비협조적	시간문제	관련기관에 서비협조적	모임여건 애 로	개인적으로 활동 싫어함	기 타	계
사례수(명)	131	474	42	320	85	36	1,088
백분율(%)	12.0	43.6	3.9	29.4	7.8	3.3	100.0

III.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 소수 응답중에서는 집안문제(집안에서 비협조적)를 전체 응답자중 12%가 지역사회 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지적하여 집안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40세미만의 연령층에서 특히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응답자 특성별 애로요인 실태(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집안문제	시간문제	관련기관 문제	모임여건 애로	본인 적성문제	기타	비 고
연 령 별	30세 미만	20.4	37.0	5.6	13.0	20.4	3.7	응답자수 =1,078 Sig.=0.00
	30~39세	19.4	40.5	2.9	29.7	6.1	1.4	
	40~49세	11.7	47.8	5.4	26.5	5.6	3.0	
	50~59세	3.8	45.4	1.6	37.2	6.6	5.5	
	60세 이상	5.2	37.8	3.7	34.8	14.1	4.4	
학 력 별	국 졸	7.8	41.6	1.4	33.8	11.4	3.9	응답자수 =1,036 Sig.=0.00
	중 졸	11.9	49.7	2.6	28.2	4.1	3.5	
	고 졸	16.1	40.3	5.8	26.4	9.1	2.4	
	전문대졸	-	92.9	-	7.1	-	-	
	대졸이상	-	31.3	25.0	37.5	-	6.3	
	기 타	19.6	15.7	5.9	43.1	11.8	3.9	
혼 인 여 부 별	미 혼	14.8	44.4	11.1	14.8	14.8	-	응답자수 =1,067 Sig.=0.00
	기혼(남편 유)	12.4	44.7	4.0	28.6	6.8	3.5	
	기혼(남편 무)	7.7	34.2	0.9	41.9	12.8	2.6	
응 답 자 신 분 별	가구주 본인	9.1	34.1	3.7	38.4	11.0	3.7	응답자수 =1,078 Sig.=0.00
	가구주 아내	12.1	46.4	3.7	29.0	5.8	2.9	
	가구주 어머니	15.4	53.8	-	7.7	23.1	-	
	가구주 며느리	15.4	34.1	4.4	27.5	11.0	7.7	
	가구주 딸	14.3	35.7	10.7	14.3	25.0	-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11.4	45.2	2.3	27.4	11.4	2.3	응답자수 =1,088 Sig.=0.10
	산간지역	14.5	40.1	4.0	32.1	5.9	3.4	
	중간지역	11.0	43.3	4.9	29.7	7.3	3.7	
	도시지역	7.9	63.2	2.6	18.4	2.6	5.3	
시 군 별	시소재지	13.4	43.9	2.5	29.3	7.9	3.0	응답자수 =1,088 Sig.=0.39
	군소재지	11.0	43.3	4.9	29.5	7.8	3.6	

나.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 남녀평등에 대한 일반적 인식

- 남녀 차별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일반적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중 과반수 이상인 62.8%가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함.

▶ 전체응답빈도

구 분	남성보다 불이익 받음	불이익 안받음	계
사례수(명)	797	472	1,269
백분율(%)	62.8	37.2	100.0

- 여성농업인의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을 세분화하여 조사해 보기 위해 응답자의 특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층에 있어 30세 미만 집단과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보다 강하고, 전문대졸자의 경우 차별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 혼인여부별로는 미혼자가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가장 강하고 남편없는 기혼자의 차별 인식이 가장 약함. 농촌거주기간별, 영농경력별 실태는 연령별 결과와 유사하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낮음. 거주지별(특성별, 시군별)결과 또한 각 거주지 특성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
 -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나이가 젊은 층이 차별의식을 많이 갖고 있으며, 노령일수록 이러한 인식은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타 특성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부여할 수 없음.

▶ 응답자 특성별 실태(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남성보다 불이익 받음	불이익 안받음	비 고
연 령 별	30세 미만	71.4	28.6	응답자수 =1,258 Sig.=0.69
	30~39세	61.6	38.4	
	40~49세	62.6	37.4	
	50~59세	62.5	37.5	
	60세 이상	63.6	36.5	
학 력 별	국 졸	67.2	32.8	응답자수 =1,203 Sig.=0.02
	중 졸	58.3	41.7	
	고 졸	64.2	35.8	
	전문대졸	40.0	60.0	
	대졸이상	82.4	17.6	
	기 타	68.0	32.0	
혼 인 여 부 별	미 혼	78.1	21.9	응답자수 =1,239 Sig.=0.06
	기혼(남편 유)	63.5	36.5	
	기혼(남편 무)	56.3	43.7	
응 답 자 신 분 별	가구주 본인	57.9	42.1	응답자수 =1,258 Sig.=0.19
	가구주 아내	63.8	36.2	
	가구주 어머니	47.1	52.9	
	가구주 며느리	59.8	40.2	
	가구주 딸	74.2	25.8	
농촌거주 기 간 별	5년 미만	66.0	34.0	응답자수 =1,260 Sig.=0.76
	5년~10년	68.2	31.8	
	10년~20년	61.2	38.8	
	20년~30년	61.8	38.2	
	30년 이상	63.0	37.0	
영 농 경 력 별	5년 미만	71.5	28.5	응답자수 =1,253 Sig.=0.13
	5년~10년	61.7	38.3	
	10년~20년	59.7	40.3	
	20년~30년	65.4	34.6	
	30년 이상	60.3	39.7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61.3	38.7	응답자수 =1,269 Sig.=0.88
	산간지역	63.8	36.2	
	중간지역	63.3	36.7	
	도시지역	60.5	39.5	
시 군 별	시소재지	60.7	39.3	응답자수 =1,269 Sig.=0.20
	군소재지	64.3	35.7	

□ 여성으로서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야

- 여성농업인이 남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분야를 노동부담(일의 양), 정신적 부담(신경쓸 일이 많음), 노동의 대가(일에 대한 소득인정 여부), 행동의 자유성, 질병빈도, 남자들의 일반적인 인식, 지역사회활동상의 차별, 공적기관의 차별(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의 차별)등 8개 분야 9개 항목으로 나눠 설문 조사함.
- 조사 결과 ‘행동 부자유(남자에 비해 행동에 자유가 없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했으며, ‘노동에 대한 소득 불인정’, ‘정신적 부담(남자들보다 신경쓸 일이 많다)’는 인식이 빈도수에 큰 차이없이 각각 그 다음 순을 차지함. ‘남자들의 일반적인 남녀차별의식’과 ‘남자에 비해 일하는 양이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여 특히 노동부담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민감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여성농업인들은 행동, 남자들의 의식, 일의 양 등에서 남자들에 비해 불리한 환경을 갖고 있지만 노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음.

▶ 여성으로서 불이익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야(빈도수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응답자 전체 (빈도수)	행동 부자유 (남자보다 행동 부자유) (557)	소득 불인정 (일에 대한 소득 불인정) (461)	정신적 부담 (신경쓸일이 많음) (451)	차별의식 (남자들의 남녀차별의식) (304)	노동 부담 (남자들보다 일이 많음) (231)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응답자 특성별로 볼 때 연령층의 경우 ‘행동 부자유’ 항목이 공통적으로 1위이며, 2위와 3위 항목에 있어 40대 미만과 50대 계층은 ‘소득 불인정’ 항목에, 40대와 60대는 소득보다는 ‘정신적 부담’ 면에서 더 많이 차별받는다고 인식함. 학력별로는 전체 응답자와 대동소이하나 고졸이상의 계층에서 금융·행정 차별을 거론하여 학력이 높은 계층에서 민감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여타 특성별 특징은 미혼자와 가구주의 딸의 경우 금융차별을 1위로 거론하고 있으며 기혼(남편없는)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순위에서 2위인 ‘소득 불인정’ 항목이 다섯 번째 순위에 분포, 해당계층에서는 민감하지 않은 항목인 것을 나타냄을 알 수 있음.

▶ 응답자 주요 특성별 실태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연령별	30세 미만	행동 부자유	소득 불인정	금융 차별	차별의식	행정 차별
	30~39세	행동 부자유	정신적 부담	소득 불인정	차별의식	노동 부담
	40~49세	행동 부자유	소득 불인정	정신적 부담	차별의식	노동 부담
	50~59세	행동 부자유	소득 불인정	정신적 부담	노동 부담	차별의식
	60세 이상	행동 부자유	정신적 부담	소득 불인정	차별의식/노동 부담	
학력별	국 졸	행동 부자유	정신적 부담	소득 불인정	노동 부담	차별의식
	중 졸	행동 부자유	정신적 부담	소득 불인정	차별의식	노동 부담
	고 졸	행동 부자유	소득 불인정	정신적 부담	차별의식	행정 차별
	전문대졸이상	행동 부자유	차별의식	정신적 부담/금융 차별		소득 불인정
혼 인 여부별	미 혼	금융 차별	차별의식	행동 부자유	행정 차별	소득/정신부담
	기혼(남편 유)	행동 부자유	소득 불인정	정신적 부담	차별의식	노동 부담
	기혼(남편 무)	행동 부자유	정신적 부담	차별의식	노동 부담	소득 불인정
응답자 신분별	가구주 본인	행동 부자유	정신적 부담	차별의식	소득 불인정	노동 부담
	가구주 아내	행동 부자유	소득 불인정	정신적 부담	차별의식	노동 부담
	가구주 어머니	행동 부자유	정신적 부담	소득 불인정/노동 부담		행정 차별
	가구주 며느리	행동 부자유	소득 불인정	정신적 부담	차별의식	노동 부담
	가구주 딸	금융 차별	차별의식	행동 부자유	행정 차별	소득 불인정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행동 부자유	소득 불인정	정신적 부담	차별의식	노동 부담
	산간지역	행동 부자유	소득 불인정	정신적 부담	차별의식	노동 부담
	중간지역	행동 부자유	정신적 부담	소득 불인정	차별의식	노동 부담
	도시지역	행동 부자유	소득 불인정	정신적 부담	차별의식	노동 부담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농업인으로서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야

- 앞의 항목이 일반적인 사회활동상의 남녀차별 분야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 항목은 같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 노동부담(일의 양), 재산소유문제, 기계조작 능력, 영농교육기회 차별여부, 사회활동상의 제약, 제도적인 차별(농·축협외 조합원 가입, 법인설립) 등의 사항에 대해 어떤 부문에 특히 차별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지 조사함.
- 조사 결과 '농기계 사용이 어렵다'는 점과 '재산에 대한 소유 제한'이 상위 1,2위에 분포함. '일의 양이 남자들에 비해 많다', '영농교육 참여기회가 적다'는 인식이 각각 3,4위를 차지하지만 상위 1,2위에 비해 빈도수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남.

III.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응답자 특성별로 구분해 보아도 응답자 전체대상으로 본 빈도수 상위 1위~4위 항목은 그 순서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으로 대동소이함. 결국 여성농업인이 영농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남자들에 비해 불리한 점을 해소하려면 가족경영체에서의 재산소유문제, 여성용 농기계 개발이나 농기계교육을 통한 농업노동 부담 해소, 여성농업인의 교육 활성화 등이 고려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됨.

▶ 같은 농업인으로서 남자보다 불이익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야(빈도수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응답자 전체 (빈도수)	농기계 사용 (농기계 사용이 어려움) (603)	재산소유 (본인명의 재산소유 제한) (482)	일의 양 (남자들보다 일을 많이 함) (283)	교육기회 (영농교육 참여기회 제한) (210)	조합원 가입 (농축협 조합원 가입 제한) (134)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응답자 특성별 실태(빈도수,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연령별	30세 미만	재산소유	농기계 사용	교육기회	일의 양	조합원 가입
	30~39세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교육기회	일의 양	조합원 가입
	40~49세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일의 양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50~59세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일의 양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60세 이상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일의 양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학력별	국 졸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일의 양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중 졸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일의 양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고 졸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일의 양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전문대졸이상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일의 양
혼 인 여부별	미 혼	재산소유	농기계 사용	교육기회	지역참여	조합원 가입
	기혼(남편 유)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일의 양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기혼(남편 무)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일의 양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응답자 신분별	가구주 본인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일의 양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가구주 아내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일의 양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가구주 어머니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교육기회	일의 양	법인 설립
	가구주 며느리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일의 양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가구주 딸	재산소유	농기계 사용	지역참여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일의 양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산간지역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일의 양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중간지역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일의 양	교육기회	조합원 가입
	도시지역	농기계 사용	재산소유	교육기회/조합원 가입		일의 양

주 : 복수응답 결과임.

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소득·재산의 남녀 분배 문제

□ 소득·재산에 대한 남녀 분배 정도

- 여성의 지위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등 각 부문별로 정책적인 뒷받침과 함께 남녀간 의식구조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본 실태조사는 남녀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여겨지는 가족내 소득·재산의 소유구조에 초점을 두고 여성농업인의 의향을 조사하였음.
- ▶ 여성농업인이 가장 원하는 사항은 전체 응답자의 약 35.3%가 선택한 '결혼후 마련한 재산은 공동소유하기'이며, '전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13.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여성농업인들의 과반수 정도가 집안 재산에 대한 소유를 원하고 있는 셈임. 또한 응답자의 31%는 '노동에 대한 보수 인정'을 원하고 있음.
- ▶ 결국 여성농업인들은 생활자금을 관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재산·소득을 여성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 전체 응답빈도

구분	노동에 대한 보수인정	돈관리	재산소유 평등	사회복지 평등	재산 상속권보장	기타	계
사례수(명)	346	113	394	84	151	27	1,115
백분율(%)	31.0	10.1	35.3	7.5	13.5	2.4	100.0

- 응답자 특성별로 볼 때 우선 연령별로는 40대 계층에서 재산의 공동소유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반면, 30세미만 계층은 노동에 대한 보수인정을 가장 원하고 돈을 관리하려는 욕구도 타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강함. 60세이상 연령층은 재산소유를 희망하는 비율이 타 연령층보다 낮은 대신 돈관리를 원하는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음.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계층에서 노동에 대한 보수인정을 원하는 비율이 높을 뿐 전반적으로 재산소유 평등을 가장 많이 원함. 또한 가지 특징은 특성별 전 계층을 통털어 볼 때 가구주 어머니에 해당하는 계층은 재산상속권 보장을 가장 많이 원하는 유일한 계층에 속함.
- 거주지역별로는 산간지역이 노동에 대한 보수인정을 가장 원하는 반면 타지역 거주자들은 재산 공동소유를 가장 원하고 있음.

▶ 응답자 특성별 실태(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노동에 대한 보수인정	돈관리	재산소유 평등	사회복지 평등	재산 상속권보 장	기타	비 고
연 령 별	30세 미만	46.0	19.0	23.8	4.8	4.8	1.6	응답자수 =1,103 Sig.=0.00
	30~39세	35.1	6.8	35.1	6.8	15.8	0.4	
	40~49세	27.7	7.6	40.0	8.1	14.5	2.1	
	50~59세	29.6	11.8	34.4	8.6	12.9	2.7	
	60세 이상	28.9	17.6	29.6	5.6	10.6	7.7	
학 령 별	국 졸	29.3	12.5	32.4	9.4	12.5	3.8	응답자수 =1,063 Sig.=0.16
	중 졸	27.6	10.8	38.4	7.2	14.1	1.9	
	고 졸	32.4	8.7	37.2	6.6	13.2	1.8	
	전문대졸	64.3	-	7.1	7.1	21.4	-	
	대졸이상	25.0	12.5	43.8	12.5	6.3	-	
	기 타	35.3	7.8	21.6	7.8	21.6	5.9	
혼 여 부 별	미 혼	24.1	17.2	41.4	6.9	10.3	-	응답자수 =1,088 Sig.=0.00
	기혼(남편 유)	30.9	9.1	37.2	8.0	12.8	2.0	
	기혼(남편 무)	28.8	18.9	18.0	5.4	21.6	7.2	
응 답 자 신 분 별	가구주 본인	34.4	13.5	28.2	4.9	16.0	3.1	응답자수 =1,103 Sig.=0.05
	가구주 아내	31.2	9.1	36.1	8.3	12.9	2.4	
	가구주 어머니	10.0	10.0	10.0	20.0	40.0	10.0	
	가구주 며느리	30.5	9.5	40.0	4.2	13.7	2.1	
	가구주 딸	26.7	23.3	36.7	6.7	6.7	-	
농촌거주 기 간 별	5년 미만	44.9	14.3	18.4	4.1	14.3	4.1	응답자수 =1,109 Sig.=0.05
	5년~10년	30.1	9.6	43.4	6.0	8.4	2.4	
	10년~20년	29.2	9.5	37.2	6.5	16.0	1.5	
	20년~30년	32.9	7.5	37.3	8.3	13.5	0.4	
	30년 이상	30.3	12.0	33.0	8.5	12.0	4.3	
영 농 경 령 별	5년 미만	35.3	13.4	26.9	5.0	16.0	3.4	응답자수 =1,103 Sig.=0.03
	5년~10년	30.6	10.8	36.9	8.3	11.5	1.9	
	10년~20년	32.3	7.9	37.2	6.2	15.2	1.2	
	20년~30년	29.3	6.6	38.4	10.0	14.4	1.3	
	30년 이상	30.0	14.0	33.1	7.8	10.1	5.1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32.6	11.8	33.9	6.3	14.1	1.3	응답자수 =1,115 Sig.=0.00
	산간지역	36.9	10.7	28.3	8.3	13.4	2.4	
	중간지역	27.2	8.5	41.2	7.6	13.4	2.1	
	도시지역	12.2	9.8	41.5	9.8	12.2	14.6	
시 군 별	시소재지	29.6	14.0	35.3	5.5	13.5	2.1	응답자수 =1,115 Sig.=0.00
	군소재지	32.1	7.3	35.4	9.0	13.6	2.6	

□ 소득·재산에 대한 남녀 분배 이유

- 여성농업인들이 재산·소득에 대한 공동 소유나 노동 대가를 받기 원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됨. 즉,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과 관계있는 '가사를 위한 정당한 주도권 행사'가 전체 응답의 21.7%, '노동대가에 대한 인정감을 확보'하고 싶은 이유가 14.6%로 약 36%정도의 응답자가 개인 재산 확보라는 개인적 욕구보다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 또는 노후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1.6%를 차지하여 재산이나 소득의 분배를 개인적 신분보장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응답빈도

구 분	노동대가에 대한 인정감 확보	가사 위한 정당한 주도권 행사	본인명의 대출가능	노후보장	여성차별의 해소	상관없음	기 타	계
사례수(명)	175	259	47	258	125	286	46	1,196
백분율(%)	14.6	21.7	3.9	21.6	10.5	23.9	3.8	100.0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연령별로 볼 때 30세 미만의 경우 '노동대가에 대한 인정감 확보', 30대는 '가사를 위한 정당한 주도권 행사'를, 기타 연령층에서는 '노후보장'을 가장 주된 이유로 삼고 있음. 학력별로는 국졸과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노후보장'을, 여타 계층은 '가사를 위한 정당한 주도권 행사'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음. 즉, 나이가 많은 연령층은 '노후보장'을, 나이가 젊은 층은(30대 미만, 미혼자, 가구주의 딸) '노동대가 인정'을 원하는 추세이며 그 중간 연령층은 가사를 위한 주도권행사를 위해 주로 재산·소득에 대한 소유 또는 분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거주지별로 보면 산간지역의 경우 '가사위한 주도권'을 나머지 지역은 '노후보장'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음. 시군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시소재지 여성농업인의 경우 '가사위한 주도권'을, 군소재지의 경우는 '노후보장'을 가장 원하고 있으나 그 분포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음.

III.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응답자 특성별 실태(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노동대가 인정감 확보	가사위한 주도권 행사	본인명의 대출가능	노후 보장	여성 차별의 해소	상관없음	기 타	비 고
연령별	30세 미만	30.6	21.0	8.1	22.6	8.1	8.1	1.6	응답자수 =1,184 Sig.=0.00
	30~39세	15.4	24.6	2.6	15.7	11.8	26.9	2.9	
	40~49세	14.9	18.4	2.9	21.2	13.2	26.6	2.7	
	50~59세	12.0	19.8	5.2	29.7	7.3	20.8	5.2	
	60세 이상	7.4	27.7	6.1	25.7	3.4	20.9	8.8	
학력별	국 졸	14.0	17.9	4.9	26.7	6.2	23.5	6.8	응답자수 =1,143 Sig.=0.01
	중 졸	12.9	23.5	3.4	21.2	10.1	26.6	2.3	
	고 졸	16.1	24.0	4.1	16.9	14.2	21.3	3.5	
	전문대졸	26.7	6.7	13.3	26.7	13.3	13.3	-	
	대졸이상	18.8	18.8	-	31.3	18.8	6.3	6.3	
	기 타	15.7	29.4	3.9	15.7	5.9	25.5	3.9	
혼 인 여부별	미 혼	25.8	19.4	9.7	25.8	9.7	6.5	3.2	응답자수 =1,172 Sig.=0.00
	기혼(남편 유)	14.6	21.9	3.8	20.9	10.4	25.8	2.6	
	기혼(남편 무)	11.7	18.8	3.9	26.6	10.9	14.1	14.1	
응답자 신분별	가구주 본인	15.9	16.5	5.7	21.6	9.7	18.2	12.5	응답자수 =1,184 Sig.=0.00
	가구주 아내	14.3	20.9	3.3	22.4	9.9	27.0	2.3	
	가구주어머니	-	21.4	7.1	35.7	21.4	14.3	-	
	가구주며느리	14.6	38.5	3.1	13.5	14.6	13.5	2.1	
	가구주 딸	26.7	20.0	13.3	23.3	6.7	3.3	6.6	
농촌 거주 기간별	5년 미만	21.6	15.7	7.8	19.6	19.6	9.8	5.9	응답자수 =1,190 Sig.=0.00
	5년~10년	19.8	40.7	3.5	10.5	9.3	12.8	3.5	
	10년~20년	16.5	23.1	4.8	18.5	10.5	23.6	2.8	
	20년~30년	15.2	17.0	4.1	23.3	10.4	28.1	1.9	
	30년 이상	11.1	20.4	2.8	24.8	9.5	25.7	5.8	
영 농 경력별	5년 미만	26.4	24.0	4.8	16.8	12.8	11.2	4.0	응답자수 =1,183 Sig.=0.00
	5년~10년	15.2	29.7	8.5	15.8	9.1	18.8	3.0	
	10년~20년	14.9	19.4	2.9	19.9	12.5	27.1	3.2	
	20년~30년	12.3	18.5	3.3	23.5	12.8	28.0	1.6	
	30년 이상	11.3	21.2	2.9	27.0	4.4	25.9	7.3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14.3	20.7	3.0	23.7	12.2	20.7	5.4	응답자수 =1,196 Sig.=0.00
	산간지역	14.6	23.3	7.6	18.3	10.7	23.6	2.0	
	중간지역	14.7	21.9	2.1	22.3	8.5	27.2	3.2	
	도시지역	17.1	12.2	-	24.4	17.1	14.6	14.7	
시군별	시소재자	16.0	23.9	4.3	21.2	8.9	20.4	5.3	응답자수 =1,196 Sig.=0.04
	군소재자	13.6	19.9	3.7	21.8	11.6	26.5	3.8	

7.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판단 조사

가. 농촌의 미래에 대한 전망

- 향후 농촌이 생활터전으로서 도시에 비해 어떨 것이냐는 전망에 대해 여성농업인들의 46.5%가 농촌이 도시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고 응답함('농촌이 도시보다 훨씬 살기 좋다' : 20.2%, '농촌이 도시보다 약간 살기 좋다' : 26.3%). 반면 도시가 농촌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30.9%에 달하여 여성농업인의 절반가량은 농촌의 미래를 밝게 보는 것으로 조사됨. 평균값은 3.19로 농촌을 도시보다 약간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응답빈도

구 분	농촌이 도시보다 훨씬 좋음 (value=5)	농촌이 도시보다 약간 좋음 (value=4)	비슷함 (value=3)	도시가 농촌보다 약간 좋음 (value=2)	도시가 농촌보다 훨씬 좋음 (value=1)	계	평균값
사례수(명)	259	337	289	180	215	1,280	3.19
백분율(%)	20.2	26.3	22.6	14.1	16.8	100.0	

- 응답자 특성별로 볼 때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연령층에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농촌의 미래를 밝게 전망한 반면 노년층은 도시를 좋게 전망하는 경향이 있음.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자가 도시의 미래를 좋게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한 반면 나머지 계층에서는 모두 농촌을 좋게 보고 있음. 여타 특성별로는 미혼자(혼인여부별), 가구주의 딸(응답자 신분별), 10년미만자(농촌거주기간·영농경력별)의 경우 특히 농촌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음. 거주지별로는 도시거주자와 평야지역 거주자가 농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산간지역이 농촌의 미래를 가장 어둡게 보고 있음.
- ▶ 종합적으로 보면 젊은 층(30세 미만, 미혼자, 가구주의 딸 등)과 도시지역 여성농업인이 여타 계층보다 농촌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음. 향후 농촌의 잠재적인 후계세력이자 여성농업인의 주류를 이룰 수 있는 젊은 계층이 농촌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 응답자 특성별 실태(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농촌이 도시보다 훨씬 좋음	농촌이 도시보다 약간 좋음	비슷함	도시가 농촌보다 약간 좋음	도시가 농촌보다 훨씬 좋음	평 균 값	비 고
연령별	30세 미만	29.7	25.0	18.8	14.1	12.5	3.45	응답자수 =1,267 Sig.=0.01
	30~39세	24.5	21.4	23.6	15.1	15.4	3.24	
	40~49세	19.9	27.8	23.5	15.0	13.8	3.24	
	50~59세	16.3	28.2	23.9	9.6	22.0	3.07	
	60세 이상	14.8	27.2	18.3	16.0	23.7	2.96	
학력별	국 졸	19.3	25.7	18.7	13.9	22.4	3.07	응답자수 =1,214 Sig.=0.00
	중 졸	19.9	30.6	23.0	13.9	12.7	3.31	
	고 졸	23.0	20.9	26.7	13.5	15.9	3.21	
	전문대졸	33.3	40.0	26.7	-	-	4.07	
	대졸이상	11.8	17.6	5.9	52.9	11.8	2.65	
혼 인 여부별	미 혼	33.3	30.3	12.1	18.2	6.1	3.67	응답자수 =1,252 Sig.=0.00
	기혼(남편 유)	20.0	26.3	23.2	14.9	15.6	3.20	
	기혼(남편 부)	17.0	24.8	22.0	7.1	29.1	2.96	
응답자 신분별	가구주 본인	17.4	29.2	19.5	7.2	26.7	3.06	응답자수 =1,269 Sig.=0.00
	가구주 아내	20.2	26.0	23.0	15.7	15.2	3.20	
	가구주 어머니	29.4	23.5	23.5	23.5	-	3.59	
	가구주 며느리	19.6	24.5	27.5	9.8	18.6	3.17	
	가구주 딸	34.4	28.1	15.6	15.6	6.3	3.69	
농촌거주 기간별	5년 미만	25.0	23.1	25.0	11.5	15.4	3.31	응답자수 =1,270 Sig.=0.01
	5년~10년	29.7	24.2	17.6	9.9	18.7	3.32	
	10년~20년	17.3	25.8	26.6	13.2	17.3	3.12	
	20년~30년	19.2	33.8	20.6	15.7	10.8	3.35	
	30년 이상	20.6	23.4	21.1	14.7	20.2	3.10	
영 농 경력별	5년 미만	26.4	26.4	19.4	17.8	10.1	3.38	응답자수 =1,262 Sig.=0.02
	5년~10년	27.6	21.3	25.9	12.1	13.2	3.38	
	10년~20년	16.6	26.9	24.6	13.7	18.1	3.09	
	20년~30년	20.5	31.1	21.2	12.1	15.2	3.30	
	30년 이상	17.5	25.6	20.1	15.5	21.4	3.05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25.3	29.5	21.3	13.9	9.9	3.46	응답자수 =1,280 Sig.=0.00
	산간지역	15.2	25.0	21.1	17.5	21.1	2.95	
	중간지역	18.5	26.2	24.2	11.5	19.6	3.13	
	도시지역	43.2	13.6	27.3	13.6	2.3	3.82	
시군별	시소재지	21.5	27.8	23.0	14.2	13.6	3.29	응답자수 =1,280 Sig.=0.12
	군소재지	19.3	25.3	22.3	14.0	19.2	3.12	

나. 농업·농촌에 대한 장단점 판단

□ 농업·농촌에 대한 장점

- 농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여성농업인 자신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분야는 우선 '먹을 것을 자급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쾌적한 생활환경'이라는 점과 '가족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다음 순을 차지함. 연령별, 거주지역별 등 응답자 특성별로도 이러한 순위는 별 차이없음

▶ 여성농업인이 생각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장점(빈도수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응답자 전체 (빈도수)	먹을 것 자급자족 (915)	쾌적한 생활환경 (715)	가족이 같이 일을 함 (451)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농업·농촌에 대한 단점

- 응답자 전체로 볼 때 '노력의 대가가 미흡'하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됨. '많은 노동부담'과 '자녀교육여건이 불리하다'는 점이 그 다음 순을 각각 차지함.
- 단점으로 지적한 상위 3개 항목은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없으나 4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자녀교육여건이 불리하다는 점을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함. 이는 해당 계층의 자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어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임. 한편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상위 3개 항목에서 자녀교육여건 항목이 빠지는 대신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자녀교육과 무관한 대신 본인들 자신이 노령으로 거동하기 힘든 것과 상관이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여성농업인이 생각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단점(빈도수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응답자 전체(빈도수)		노력의 대가 미흡 (797)	많은 노동부담 (718)	자녀교육여건 불리 (650)
연령별	40세 미만	자녀교육여건 불리 (245)	노력의 대가 미흡 (234)	많은 노동부담 (202)
	40대	노력의 대가 미흡 (311)	자녀교육여건 불리 (277)	많은 노동부담 (272)
	50세 이상	노력의 대가 미흡 (244)	많은 노동부담 (239)	생활하기 불편 (135)

주 : 복수응답 결과임.

다. 정책적인 요구분야

□ 일반적인 정책개선 요구 분야

- 여성 농업전문인력 육성, 소득·재산에 대한 소유권 인정,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여성용 복지시설 확충, 교육 참여 확대, 임신·출산시의 일손 대책 등의 6개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바라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복지시설 확충'을 바라는 의견이 전체의 33.6%로 가장 많았고, '소득·재산에 대한 소유권 인정'이 19.4%로 2위를 차지함. '여성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희망은 각각 16.5%, 16.2%이며, '임신·출산시의 일손대책'을 꼽은 경우가 가장 낮았음.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성농업인들은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등의 비교적 추상적 개념의 정책보다는 복지시설 확충, 재산 소유같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전체응답빈도

구 분	여성농업 전문인력 육성	물질적 소유권 인정	사회적지 위 향상	여성용 복지시설 확충	교육참여 확대	임신·출 산시 일손대책	기타	계
사례수(명)	200	235	196	407	126	38	11	1,213
백분율(%)	16.5	19.4	16.2	33.6	10.4	3.1	0.9	100.0

- 응답자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계층에서 여성용 복지시설 확충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음. 그 다음 순위의 정책에 대해서는 특성별·계층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특별히 의미있는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음.

▶ 응답자 특성별 빈도(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여성농 업전문 인력 육성	여성의 물질적 소유권 인정	여성농 업인의 사회적 향상	여성용 복지시 설 확충	여성농 업인의 교육참 여 확대	임신· 출산시 일손대 책	기타	비 고
연 령 별	30세 미만	7.7	27.7	13.8	32.3	10.8	7.7	-	응답자수 =1,202 Sig.=0.00
	30~39세	20.8	18.5	15.6	32.1	9.1	3.2	0.6	
	40~49세	17.1	20.0	16.1	31.2	13.0	1.4	1.0	
	50~59세	14.9	12.9	16.5	40.2	11.3	4.1	-	
	60세 이상	11.9	23.8	17.2	37.7	2.6	4.0	2.6	
학 령 별	국 졸	11.6	22.8	12.9	38.6	10.0	2.9	1.3	응답자수 =1,157 Sig.=0.19
	중 졸	18.7	16.2	16.4	34.4	10.5	2.8	1.0	
	고 졸	15.6	19.1	19.7	29.9	11.6	3.2	0.8	
	전문대졸	20.0	40.0	20.0	20.0	-	-	-	
	대졸이상	17.6	23.5	23.5	29.4	5.9	-	-	
	기 타	30.2	18.9	13.2	28.3	5.7	3.8	-	
혼 여 부 별	미 혼	9.1	27.3	18.2	24.2	12.1	9.1	-	응답자수 =1,188 Sig.=0.32
	기혼(남편 유)	16.4	19.3	15.7	33.7	11.0	2.9	1.1	
	기혼(남편 무)	19.7	16.5	19.7	34.6	6.3	3.1	-	
응 답 자 신 분 별	가구주 본인	17.9	20.7	18.4	33.5	7.8	1.7	-	응답자수 =1,201 Sig.=0.02
	가구주 아내	16.6	17.3	15.8	34.5	11.9	2.9	0.9	
	가구주 어머니	38.5	15.4	15.4	23.1	7.7	-	-	
	가구주 며느리	14.0	31.0	17.0	28.0	3.0	4.0	3.0	
	가구주 딸	6.3	28.1	15.6	28.1	12.5	9.4	-	
농 촌 거 주 기 간 별	5년 미만	13.7	27.5	15.7	33.3	5.9	3.9	-	응답자수 =1,208 Sig.=0.36
	5년~10년	23.6	21.3	18.0	23.6	10.1	3.4	-	
	10년~20년	16.1	17.7	16.9	33.5	12.7	2.3	0.8	
	20년~30년	17.6	20.6	16.5	35.3	6.6	3.3	-	
	30년 이상	15.2	18.6	15.2	34.5	11.1	3.6	1.8	
영 경 력 별	5년 미만	8.7	24.6	19.8	31.0	8.7	5.6	1.6	응답자수 =1,200 Sig.=0.03
	5년~10년	18.7	21.6	14.0	31.0	11.7	2.3	0.6	
	10년~20년	18.8	17.2	16.4	33.8	12.1	1.3	0.5	
	20년~30년	20.9	20.2	15.8	30.8	8.3	4.0	-	
	30년 이상	12.3	18.4	15.9	37.2	9.7	4.3	2.2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16.7	21.2	19.4	30.4	10.4	1.5	0.3	응답자수 =1,213 Sig.=0.00
	산간지역	15.4	18.4	17.0	33.8	9.2	5.0	1.1	
	중간지역	16.9	19.0	13.4	36.1	11.5	2.5	0.6	
	도시지역	19.5	17.1	14.6	26.8	7.3	7.3	7.3	
시 군 별	시소재지	19.1	17.8	16.8	31.6	10.5	3.3	0.8	응답자수 =1,213 Sig.=0.38
	군소재지	14.6	20.5	15.7	35.0	10.3	3.0	1.0	

□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정책요구 분야

- 여성 농업전문인력이 되기 위해 갖춰져야 할 요건을 조사한 결과 상위 3개 항목으로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가사노동부담 해소', '여성 복지시설 확충으로 농사여건 개선', '여성용 농기계(농기구) 개발·보급'의 순으로 나타남. 4위에서 6위까지는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영농교육 참여기회 및 여건 조성', '유망작물 개발여건 구축(정보망 구축등)' 항목이 각각 차지하는데 상위 3개 항목에 비해서는 빈도수에 있어 큰 차이가 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교육이나 농업경영교육등의 전문화 정책에 우선해서 가사노동환경 개선이나 복지시설 확충 등의 기본적인 농사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전문화과정이 실현될 수 있겠다고 보여짐.
- ▶ 여성 농업전문인력 육성위한 요건(빈도수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응답자 전체 (빈도수)	가사부담해소 (생활환경 개선 으로 가사노동 부담 해소) (671)	복지시설확충 (복지시설 확충으로 농사여건 개선) (638)	여성용농기계 (여성용 농기계 개발·보급) (574)	지위향상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496)	교육기회 (영농교육 참여기회·여건 조성) (440)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응답자 특성별로 보아도 전체 응답 결과와 같이 '가사부담 해소'와 '복지시설 확충' 항목이 우선순위 1, 2위를 대부분 차지함. 다만, 전체 응답에서 4위인 '지위 향상'의 경우 30세 미만 및 60세 이상의 연령층, 전문대졸 이상, 기혼(남편 무)자, 가구주의 딸, 도시지역 등의 계층에서 상위 1위 또는 2위로 요구되는 항목으로 분류되며, 전체 응답에서 3위인 '여성용농기계'의 경우 50대 연령층, 국졸·중졸 계층, 가구주 본인, 평야지역·도시지역에서 각각 2순위를 차지함.
- ▶ 이같은 특성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는 '가사부담 해소'와 '복지시설 확충'을 주로 원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노년층에서는 '여성용농기계 개발·보급'을 많이 원하고, 젊고 학력이 높은 계층에서는 지위향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응답자 특성별 실태(빈도수,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④위	⑤위
연령별	30세 미만	가사부담해소	지위향상	복지시설확충	교육기회	여성용농기계
	30~39세	복지시설확충	가사부담해소	여성용농기계	교육기회	지위향상
	40~49세	복지시설확충	가사부담해소	여성용농기계	교육기회	지위향상
	50~59세	가사부담해소	여성용농기계	복지시설확충	지위향상	교육기회
	60세 이상	가사부담해소	지위향상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교육기회
학력별	국 졸	가사부담해소	여성용농기계	복지시설확충	지위향상	교육기회
	중 졸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가사부담해소	지위향상	교육기회
	고 졸	복지시설확충	가사부담해소	여성용농기계	지위향상	교육기회
	전문대졸이상	교육기회	지위향상	가사부담해소/복지시설확충		후계자·선도농 선정 확대
혼 인 여부별	미 혼	지위향상/가사부담해소		교육기회	여성법인체지원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기혼(남편 유)	복지시설확충/가사부담해소		여성용농기계	지위향상	교육기회
	기혼(남편 무)	가사부담해소	지위향상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교육기회
응답자 신분별	가구주 본인	가사부담해소	여성용농기계	복지시설확충	지위향상	교육기회
	가구주 아내	가사부담해소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지위향상	교육기회
	가구주 어머니	복지시설확충	가사부담해소	지위향상/여성용농기계		교육기회
	가구주 며느리	복지시설확충	가사부담해소	여성용농기계	지위향상	교육기회
	가구주 딸	가사부담해소/지위향상		교육기회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농촌거주 기간별	5년 미만	가사부담해소	지위향상	교육기회/여성용농기계		복지시설확충
	5년~10년	복지시설확충	지위향상	교육기회	가사부담해소	여성용농기계
	10년~20년	복지시설확충	가사부담해소	여성용농기계	지위향상	교육기회
	20년~30년	가사부담해소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지위향상	교육기회
	30년 이상	가사부담해소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지위향상	교육기회
영 농 경력별	5년 미만	가사부담해소	지위향상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교육기회
	5년~10년	복지시설확충	가사부담해소	여성용농기계	지위향상	교육기회
	10년~20년	복지시설확충	가사부담해소	여성용농기계	교육기회	지위향상
	20년~30년	가사부담해소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교육기회	지위향상
	30년 이상	가사부담해소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지위향상	교육기회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가사부담해소	여성용농기계	복지시설확충	지위향상	교육기회
	산간지역	가사부담해소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지위향상	교육기회
	중간지역	복지시설확충	가사부담해소	여성용농기계	교육기회	지위향상
	도시지역	지위향상	여성용농기계	복지시설확충	가사부담해소	교육기회
시군별	시소재지	가사부담해소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지위향상	교육기회
	군소재지	가사부담해소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지위향상	교육기회

주 : 복수응답 결과임.

라. 농업인후계자 제도에 대한 의견

□ 응답자의 농업인후계자 분포

- 응답자 본인이 농업인후계자인 경우는 응답자 전체의 5.8%임. 그러나 집안에 여성후계자가 있거나 남자후계자가 있는 등 농업인후계자와 관련된 응답자는 전체의 30%수준에 달함.

▶ 응답자의 농업인후계자 여부별 분포

구 분	본인이 후계자임	집안에 여성후계자 있음	집안에 남자후계자 있음	집안에 후계자 없음	계
사례수(명)	71	23	278	862	1,234
백분율(%)	5.8	1.9	22.5	69.9	100.0

□ 농업인후계자를 지원할 경우 희망하는 작목 및 희망 이유

● 희망하는 작목

- ▶ 전체 응답자중 후계자를 지원할 경우 희망하는 작목으로는 특용작물 15.2%, 복합영농 14.8%, 과수 12.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축산분야를 희망하는 경우가 약 15%에 달함(한우,젓소,양돈,양계 포함).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수도 작	채소	화훼	과수	특용 작물	복합 영농	한우	낙농	양돈	양계	희망 안함	기타	계
사례수(명)	86	95	111	149	176	171	115	27	21	9	173	22	1,155
백분율(%)	7.4	8.2	9.6	12.9	15.2	14.8	10.0	2.3	1.8	0.8	15.0	1.9	100.0

- ▶ 거주지 특성별로 보면 평야지역에서는 타지역보다 화훼를 지원하는 경향이 높고, 산간지역은 복합영농과 축산분야를 선호하며, 중간지역에서는 특용, 과수, 복합영농, 축산등 4개 작목을 비슷한 비율로 높게 지원, 도시지역은 특히 과수와 채소를 희망하는 비율이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시거주자가 화훼, 과수, 특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군거주자보다 높고, 군거주자는 축산을 희망하는 비율이 시거주자보다 월등히 높음.

▶ 거주지 특성별 빈도(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용작물	복합영농	한우	낙농	양돈	양계	희망안함	기타
거주지 특성별	평야지역	7.2	9.4	14.4	8.8	15.3	13.8	5.9	1.6	2.2	0.6	17.2	3.8
	산간지역	8.4	6.7	7.8	12.6	12.9	15.7	11.5	4.2	0.6	-	18.5	1.1
	중간지역	6.7	8.2	8.2	15.6	16.5	14.8	11.7	2.0	2.8	1.5	10.8	1.1
	도시지역	7.3	12.2	7.3	26.8	14.6	7.3	7.3	-	2.4	-	14.6	-
시군별	시소재지	8.4	8.6	11.6	14.3	15.7	13.5	7.5	1.8	2.5	0.6	13.3	2.2
	군소재지	6.6	7.9	8.4	12.4	14.5	15.2	11.8	3.0	1.5	0.9	16.3	1.5

● 희망작목 선정 이유

전체적으로 집에서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1%.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33.8%. 좋아하는 작목이기 때문에 16.7%의 순임. 따라서 현재 집에서 하는 작목을 그대로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수익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전문분야라서	수익이 좋을 것이라서	좋아하는 작목이기 때문	집에서 하기 때문	기타	계
사례수(명)	129	320	153	323	21	946
백분율(%)	13.6	33.8	16.2	34.1	2.2	100.0

□ 농업인후계자 제도의 필요성 및 필요 이유 판단

- 농업인후계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필요없다는 응답이 6.1%에 불과하여, 동 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보임.
- 농업인후계자 제도의 필요이유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자금지원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농촌발전에 기여 20.9%, 농촌유지 및 배울 것이 많다는 응답이 각각 약 10%의 순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농업인후계자제도에 의해 후계자로 선발되면 자금지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강함.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자금지원 혜택	농촌에 서중요 역할	농촌발 전에 기여	농촌유 지에 기여	배울것 이 많음	필요없 음	모름	기타	계
사례수(명)	404	112	248	121	122	72	97	12	1,188
백분율(%)	34.0	9.4	20.9	10.2	10.3	6.1	8.2	1.0	100.0

- 조사결과를 후계자 여부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음. 그 결과 응답자 본인이 후계자인 경우 농촌발전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다른 계층에서는 자금지원 혜택이 많다는 점을 가장 큰 필요이유로 들고 있어 후계자 본인들의 생각과 제3자의 생각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후계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는 후계자들이 받는 자금지원 혜택을 현실적으로 가장 큰 필요이유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후계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로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됨. 다만, 농촌발전에 기여하거나 농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후계자가 아닌 계층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후계자들이 농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임.

▶ 후계자여부별 의견(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자금지원 혜택	농촌에서 중요역할	농촌발전 에 기여	농촌유지 에 기여	배울것이 많음	필요없음	모름	기타
후계자 본인인 경우	22.7	13.6	28.8	6.1	22.7	-	6.1	-
집에 여성후계자 있는 경우	39.1	26.1	21.7	4.3	4.3	4.3	-	-
집에 남성후계자 있는 경우	34.0	11.2	26.5	10.4	9.7	2.6	5.6	-
아무도 후계자 없는 경우	35.0	8.0	18.8	10.7	9.0	7.5	9.5	1.4

□ 농업인후계자 제도에 대한 불만사항

- 농업인후계자 제도에 대한 불만은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은 없지만 남자후계자 위주로 선발된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음. '연령제한이 너무 낮다'와 '평가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빈도수에 큰 차이없이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외에 '여성에 대한 가점이 낮다(267건)', '1가구 2인이상 후계자 선정이 안된다(220건)'는 순으로 불만이 제기됨. 후계자 여부별로 조사한 결과도 역시 전체층에서 '남자위주로 선발된다'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음.
- 여기서 '평가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은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은 없지만 남자후계자 위주로 선발된다'는 항목과 평가기준에 대한 견해에서 상치되는 현상이 나타남. 본 연구진이 평가기준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없고 오히려 여성을 배려하는 기준이 별도로 설정(예:여성에 대한 가점 부여, 미혼여성은 별도의 낮은 연령제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평가기준 자체의 문제보다는 농업인후계자가 남자위주로 선발된다는 현실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으며, 여성에 대한 가점이나 연령제한, 1가구 2인이상 후계자 선정등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짐.

▶ 전체 응답빈도(빈도수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응답자 전체 (빈도수)	불리한 기준 없지만 남자위주로 선발 (604)	연령제한이 너무 낮음 (332)	평가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함 (317)

주 : 복수응답 결과임.

▶ 후계자여부별 의견(빈도수, 순위)

구 분	평가기준 불리	남자위주 선발	여성에게 대한 가점	낮은 연령제한	미혼여성 연령제한	1가구 2인 선정 불가
후계자 본인인 경우	20(4)	31(1)	21(2)	21(2)	16(5)	16(5)
집에 여성후계자 있는 경우	6(2)	17(1)	4(5)	6(2)	2(6)	6(2)
집에 남성후계자 있는 경우	74(4)	142(1)	69(5)	81(3)	32(6)	76(2)
아무도 후계자 없는 경우	200(3)	386(1)	164(4)	214(2)	96(6)	115(5)

주 : 복수응답 결과임. ()내는 해당 계층내에서의 빈도수 순위.

□ 농업인후계자 제도에 대한 요구사항

-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인후계자 제도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은 '영농활동 관리 철저'에 대한 응답이 20.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인당 지원금액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 전체응답빈도

구 분	1인당지원 금액확대	용자조건 완화	자금사용 용도완화	영농활동 관리철저	해외연수 기회확대	여성후계 자배려	모름	기타
사례수(명)	190	188	96	232	43	153	209	7
백분율(%)	17.0	16.8	8.6	20.8	3.8	13.7	18.7	0.6

- 전체 응답빈도와는 달리 후계자 여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집안에 아무도 후계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히 '1인당 지원금액 확대' 또는 '용자조건 완화'를 가장 많이 요구, 지원자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가장 많이 선택함. 여기서 '지원자금 확대'는 곧 농가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1가구에서 2인이상 (예: 부부를 독립적으로 후계자로 지정) 지원 가능토록 하는 제도도 고려해 볼 만함. 이 경우 해당자가 각각 독자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농사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 반면 집안에 아무도 후계자가 없는 계층에서는 '영농활동 관리 철저'를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지적하였는데, 본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집안에 후계자가 없는 계층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요구사항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이후에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지 파악하여 후계자에 대한 지원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감시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또한 영농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나 교육을 통해 후계자가 영농활동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 후계자여부별 요구사항 실태(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1인당지 원금액 확대	용자조건 완화	자금사용 용도완화	영농활동 관리철저	해외연수 기회확대	여성후계 자 배려	기 타	모름
후계자 본인인 경우	30.0	16.7	6.7	16.7	10.0	11.7	1.7	6.7
여성후계자 있는 경우	33.3	33.3	4.8	23.8	-	4.8	-	-
남성후계자 있는 경우	23.1	22.3	12.0	18.3	4.8	10.0	0.4	9.2
후계자 없는 경우	13.8	14.5	7.9	21.4	3.3	15.4	0.5	23.1

8. 기타 부문

가. 컴퓨터 활용실태

□ 응답자의 컴퓨터 보유 현황

- 전체 응답빈도

구 분	컴퓨터 있음	컴퓨터 없음	계
사례수(명)	609	611	1,220
백분율(%)	49.9	50.1	100.0

- ▶ 연령별로는 40대 계층의 보유비율이 64.5% 가장 높고, 50세 이상의 경우 보유비율이 낮게 나타남.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70%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보유비율이 낮아짐. 거주지별로는 도시지역, 평야지역, 중간지역, 산간지역의 순으로 보유비율이 높음.
- ▶ 주요 특성별 보유현황(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구 분	컴퓨터 있음	컴퓨터 없음	비 고
연 령 별	30세 미만	51.6	48.4	응답자수 =1,244
	30세 ~ 39세	52.4	47.6	
	40세 ~ 49세	64.5	35.5	
	50세 ~ 59세	31.6	68.4	
	60세 이상	25.5	74.5	
학 력 별	국졸	39.2	60.8	응답자수 =1,184
	중졸	52.2	47.8	
	고졸	57.8	42.2	
	전문대졸	71.4	28.6	
	대졸	82.4	17.6	
	기타	28.0	72.0	
거 주 지 특 성 별	평야지역	55.1	44.9	응답자수 =1,254
	산간지역	44.0	56.0	
	중간지역	50.9	49.1	
	도시지역	59.5	40.5	

□ 컴퓨터 활용 실태

● 컴퓨터의 일반적 활용분야

- ▶ 응답자중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비율이 약 70%에 달하여 여성농업인이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됨. 컴퓨터를 사용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료작성을 하는데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컴퓨터로 주로 하는 일(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PC통신	인터넷검색	자료작성/저장	사용못함	사용할줄 알지만 활용안함	기타	계
사례수(명)	41	15	94	622	94	25	891
백분율(%)	4.6	1.7	10.5	69.8	10.5	2.8	100.0

● 영농활동을 위한 컴퓨터 활용분야

- ▶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응답자가 70%에 육박하지만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응답자중에서는 유통정보 검색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영농기술 정보나 회계관리 소프트웨어 활용, 경영관리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컴퓨터 활용도가 낮아 조사결과의 유용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 영농활동을 위해 컴퓨터로 주로 하는 일(무응답은 제외/ 백분율, %)

구 분	유통 정보 검색	기술 정보 검색	기타 DB 검색	동호회 활동	회계 관리 소프트웨어 활용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활용	전반적 경영 관리 활용	컴퓨터 활용 못함	사용할 줄 알지만 활용 안함	기타	계
사례수(명)	66	21	1	11	13	3	10	563	114	20	822
백분율(%)	8.0	2.6	0.1	1.3	1.6	0.4	1.2	68.5	13.9	2.4	100.0

● 영농정보 수집경로 파악

- ▶ 영농정보 검색을 하는 응답자 중에서 그 수집경로 내지 접속하는 정보망을 질의한 결과 농수산물 정보망(AFFIS)에 접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영농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소수의 경우 동호회를 통해 정보수집을 하는 것으로도 조사됨.
- ▶ 농림부관련기관의 경우 농림부, 농업진흥청, 농촌생활연구원 등 크게 3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바 각 기관별로 정보의 다양성과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는 각종 영농활동을 위해 참고할 만한 정부의 시책에 대한 다양한 공지 및 해설자료, 각종 통계 등이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 농업진흥청(www.rda.go.kr)의 경우 각종 영농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영농활동시 필요한 기술정보를 확보하는 데 유용한 정보망임. 한편 농촌생활연구원(www.rlsi.go.kr)은 농촌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일반 가사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유용함.
- ▶ 영농정보 수집을 위해 접속하는 정보망

구 분	동호회	농수산물 정보망	농림부관련 기관 홈페이지 검색	농림부이외 기관 홈페이지 검색	기타	계
사례수(명)	8	78	18	17	14	135
백분율(%)	5.9	57.8	13.3	12.6	10.4	100.0

● 컴퓨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영농정보의 종류

- ▶ 컴퓨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영농 정보는 '농산물가격동향'이라는 응답이 53.2%로 과반수를 넘고, 이외에 '영농기술 정보', '농산물수급 전망'의 순으로 응답함. 전반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수급과 같은 유통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실정임.
- ▶ 컴퓨터로 얻고자 하는 영농정보 종류

구 분	영농기술	농산물 가격동향	농산물 수급전망	영농인들의 동태	해외정보	기타	계
사례수(명)	49	116	28	10	2	13	218
백분율(%)	22.5	53.2	12.8	4.6	0.9	6.0	100.0

나. 금융기관 및 농·축협에 대한 인식

□ 금융기관에서의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 금융기관의 남녀 차별여부
 - ▶ 차별한다 21.6%, 차별하지 않는다 78.4%로 금융기관에서 남녀 차별하는 경우는 일반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 금융기관의 남녀 차별여부 응답

구 분	차별함	차별안함	계
사례수(명)	270	978	1,248
백분율(%)	21.6	78.4	100.0

- 금융기관의 차별 종류
 - ▶ 금융기관에서 어떤 면에서 여성농업인을 차별하는 지 조사한 결과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고 '대출조건에 맞더라도 남자에 비해 대출을 안해주는 편'이라는 응답이 21.1%, '정부의 융자금지원제도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다'는 응답이 15.9%에 달함.
 - ▶ 전체응답빈도

구 분	대출조건 까다로움	남자보다 대출기회 제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출기회	정부융자금 지원제도 남녀 차별	불리한점 없음	계
사례수(명)	168	104	40	78	102	492
백분율(%)	34.1	21.1	8.1	15.9	20.7	100.0

□ 농·축협의 조합원/비조합원에 대한 인식

- 집안에 농·축협 여성조합원이 있는지의 유무

구 분	집에 여성조합원 있음	집에 여성조합원 없음	계
사례수(명)	467	810	1,277
백분율(%)	36.6	63.4	100.0

● 농·축협 조합원이 아닌 이유

- ▶ 농·축협 조합원은 한 집에서 2명까지 될 수 있는데(복수 가입 가능) 응답자 집에서 여성조합원이 한명도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함.
- ▶ 전체 응답자중 생각해 본적 없거나 여자가 조합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즉 조합원 가입여부에 대해 무관심한 응답자가 48.8%에 달하고, 나머지 51.2%의 응답자들은 그 중에서 '2명까지 되는 지 몰라서 가입 안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고, '출자금 등 비용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자와 '남자식구가 모두 차지해서 가입 못했다'는 응답자들의 순으로 조합원이 아닌 이유를 지적함.
- ▶ 농·축협 조합원이 아닌 이유

구 분	남자식구가 차지	몰라서 가입 안함	여자라서 가입안됨	출자금 등 비용부담	여자가 조합원일 필요없음	생각해본적없음	기타	계
사례수(명)	121	225	80	120	242	312	35	1,135
백분율(%)	10.7	19.8	7.0	10.6	21.3	27.5	3.1	100.0

● 비조합원이라서 불이익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야

- ▶ 농·축협의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갖는 불만은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단체행동시 제외된다', '영농교육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불만이 2,3순위를 차지함.
- ▶ 이같은 불만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당연히 조합원과 차별화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으로서의 소외감이 단순하게 표출한 결과로 해석됨. 이러한 불만은 여성농업인들이 비조합원으로 머물러 있기 보다는 농·축협에 조합원으로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농·축협에 대한 비조합원으로서 갖는 불만(빈도수 순위)

구 분	①위	②위	③위
응답자 전체 (빈도수)	대출이 어렵다 (390)	단체행동시 제외 (236)	영농교육참여 제외 (222)

주 : 복수응답 결과임.

9. 실태조사 결과의 부문별 시사점

가. 농촌생활 부문

□ 젊은 고학력층의 자발적인 농촌거주 경향

- 소수이기는 하지만 농촌생활이 좋아서 농촌에 거주하는 계층 존재
 - ▶ 농촌에 거주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항목에서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부모님이 농사를 짓거나 결혼한 남편이 농사를 짓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농촌에 거주하게 된 반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농촌생활이 좋아서’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연령층이 낮고 학력이 높은 계층이 다른 계층보다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 농촌환경 개선으로 여성들의 농촌거주 유도 희망
 - ▶ 현재 고령층인 옛 농촌여성들의 경우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결혼해 평생 살아가는 생활행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의 젊은 여성들은 농촌총각과 결혼하는 경향이 낮기는 하지만 농촌에 일단 거주하는 이유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만 있으면 젊은 연령층이나 도시거주 여성들의 농촌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음.

□ 농촌생활 불만의 가장 큰 이유는 소득문제

- 소득문제가 가장 큰 불만요인이지만 우리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함
 - ▶ 농촌생활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농촌의 소득문제는 여성농업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 전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에 맞춘 농사여건과 자녀교육여건의 개선이 중요
 - ▶ 본 실태조사의 목적이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직시하고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정책 개선방향을 수립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농촌의 소득문제는 차치하고 그 다음 불만요인인 “힘든 농사여건”과 “미흡한 자녀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여성농업인 노동부담의 실태

- 여전히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음.
 - ▶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일도 하면서 집안의 대소사까지 맡아서 처리하는 실정
 - ▶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을 포함해 농번기 13.4시간, 농한기 9.7시간

- 농번기에는 농가 가구주 (시)어머니, 연간 전체적으로는 농가 며느리나 아내의 노동부담이 가장 큼
 - ▶ 응답자의 집안에서의 신분별로 평균 노동시간을 산정해 본결과 농번기에 농가 가구주의 시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신분을 가진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이 가장 크고, 딸의 신분을 가진 응답자의 노동부담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농한기에는 가구주의 (시)어머니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가구주의 며느리나 아내의 신분을 가진 여성농업인이 가사노동을 주도하며, 농번기에도 가구주의 (시)어머니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연간 전체적으로 가구주의 며느리나 아내의 신분을 가진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주거환경(주거시설·용품등)의 문제

- 하수시설 개선 필요
 - ▶ 가옥형태, 식수, 목욕시설, 부엌시설 및 취사연료등의 면에서 대체로 개선이 많이 된 실정이나 응답자의 30%는 하수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에서 배출되는 물이 집밖으로 방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농촌환경 저해요인으로 작용.
- 컴퓨터에 대한 수요
 - ▶ 원하는 주거용품·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에어컨 다음으로 컴퓨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컴퓨터는 이제 생활용품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으며, 영농활동이나 일반 생활을 위해서도 컴퓨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농촌지역에 대한 컴퓨터 보급도 과제의 하나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 단, 보조사 응답자의 약 50%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결과는 농촌실태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경제생활 부문

□ 농가부채에 대한 부담

- 응답자에 국한할 때 저축액은 평균 1천572만원인 반면 부채는 평균 4천94만원
 - ▶ 응답자의 평균 자산액은 1억4천482만원 수준이며 그중 저축액이 1천572만원임. 반면 부채총계는 평균 4천94만원으로 자산총계는 넘지 않으나 저축규모를 훨씬 상회하며, 부채의 80%는 농협의 대출금인 것으로 조사됨.

□ 여성농업인 명의의 농지규모

- 자기 명의의 농지가 있는 경우 소유규모는 평균 2,371평으로 조사대상 농가의 평균 소유규모 4,235평의 56% 수준임.
- ▶ 대부분 가구주가 남자이고, 재산 소유주는 가구주인 일반적 관례상 여성농업인명의 농지규모는 식생활을 자급자족하는 형태의 소규모인 것으로 해석됨.
- ▶ 본인 명의로 농지를 갖고 있는 계층은 주로 노년층이면서 남편없는 기혼자인 경우임. 즉, 남편 사별 등의 이유로 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노년층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여성농업인의 예금

-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통장 소유
- ▶ 예금에 대한 응답자중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이 있는 경우가 91.7%에 달함.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통장 하나씩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 통장의 예금규모는 5백만원이하가 전체의 53.5%를 차지, 그 규모로 볼 때 저축 형태보다는 생활자금 용도로 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따라서 여성농업인 대다수가 통장을 소유하는 것이 집안에서의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 농업노동의 실태

□ 농업노동의 애로

- 생산비이하의 농산물 가격이 가장 큰 애로요인
- ▶ 이는 앞서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이유가 소득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난제임.
- ▶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정책과제를 선정한다면 농산물 가격 다음으로 중요한 애로요인으로 보고 있는 “힘든 농사여건”과 “가사일 병행하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라 여겨짐

□ 여성용 농기계(농기구)에 대한 수요

- 여성농업인의 69%가 여성용농기계 개발·보급을 원함
- ▶ 원하는 여성용 농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트랙터의 순으로 꼽고 있음.

- 여성용 농기계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본 설문에서 원하는 장비들은 모두 비교적 고가의 기계들이며, 이를 여성체형에 맞게 개조해서 생산·판매까지 이르려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고가의 농기계에 앞서 발작물등에 쓰이는 간단한 농기구에 대해서 여성용으로 개조하는 연구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용 농기계의 필요성을 응답자의 69%가 원하는 것과 달리 농기계 교육에 대한 수요는 다른 교육부문보다 순위가 처지는 실정임. 즉, 컴퓨터교육, 작물에 대한 교육, 비료·농약 사용교육을 농기계 교육에 앞서 보다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요에 대한 항목은 뒷부분에서 별도 분석함)

□ 이농에 대한 견해

-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이농을 생각
 - ▶ 해당 항목 응답자의 88.2%가 이농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건만 된다면 이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 이농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소득보장이 안된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자녀 교육여건”, “농사일이 힘들어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같은 결과는 앞서 제기된 농촌생활환경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불만사항이나 농업을 하는데 있어 애로요인으로 지적한 항목들과 모두 동일한 내용들임. 우리 농촌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결국 근본과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라. 보건·복지부문

□ 자주 찾는 진료기관과 희망하는 진료기관이 동일

- 두 가지 모두 병원이나 의원이 차지
 - ▶ 농촌지역에서 병원이나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일반 병의원이 대부분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것이고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성향을 충족시키기에는 정책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 ▶ 병의원 다음으로 접근처에 있기 원하는 진료기관이 보건소인데 현실은 있는 보건소조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여서 진료기관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운 난제임.

□ 보육시설에 대한 의견

- 상설 보육시설을 원함
 - ▶ 응답자중 절반 가량은 어린이가 없는 경우이고 어린이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있는 보육시설보다는 일년내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설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음.
 - ▶ 보육시설로는 유아용 어린이방, 놀이방, 유아원같은 유아용 보육시설이 농촌에 가장 먼저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됨.
- 보육시설은 교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 ▶ 보육시설에 대한 조건으로는 교사의 질, 거리, 비용의 세 가지 조건이 빈도수에 큰 차이없이 중요한 항목으로 꼽고 있음. 세 가지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보육시설을 세울 경우 보육교사만큼은 반드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마. 교육실태 및 요구부문

□ 교육참여 의사는 매우 적극적

- 바쁘지만 않으면 참석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
 - ▶ 바쁘지만 않으면 참석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며 오래 걸리는 교육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상위에 속함.
 - ▶ 결국 이러한 의견은 농촌생활이 바쁘기 때문인데 농한기에 몇시간씩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컴퓨터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함

- 영농교육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분야 모두 컴퓨터 교육을 가장 선호
 - ▶ 특히 40대이하 연령층에서 공히 다른 교육분야보다 컴퓨터 교육을 가장 원하고 있음. 이는 앞서 농촌생활부문에서 '주거시설·용품'중 가장 원하는 것중 컴퓨터가 에어컨 다음의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연관되는 사항임. 즉,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그 활용교육을 매우 열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컴퓨터 활용실태는 매우 저조
 - ▶ 컴퓨터 보급과 활용교육은 매우 원하는 것과 반대로 실제 컴퓨터 활용실태를 보면 영농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함.

- ▶ 컴퓨터 보유실태는 약 절반가량의 농가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결국 컴퓨터가 있더라도 사용할 줄 몰라서 못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농촌지역의 컴퓨터 관련 요구에 대한 대책은 컴퓨터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 활용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 컴퓨터교육 다음으로는 작물에 대한 교육과 보건교육 선호
 - ▶ 영농활동에 필요한 교육으로는 컴퓨터교육 다음으로 작물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으로는 보건교육을 컴퓨터교육 다음으로 원하고 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의 일단을 나타냄.
- 컴퓨터교육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 상기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종합해 볼 때 컴퓨터교육과 작물교육, 보건교육등을 패키지화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여성농업인들의 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므로 검토가 요망됨.

바. 지역사회활동 및 남녀평등의식부문

□ 지역사회활동의 가장 큰 애로는 시간 문제

- 지역활동을 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발적인 이유가 첫째임
 - ▶ 본인이 활동하는 것이 좋아서 한다는 경우가 70.5%에 달하여 절대 다수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사회활동의 가장 큰 애로는 개인의 바쁜 일정
 - ▶ 지역사회활동을 하려고 해도 개인이 바빠서, 또 관련단체 회원들이 바빠서 모임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지역사회활동을 하기는 시기적으로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으로 분석됨.

□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 60%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짐
 - ▶ 응답자 전체적으로 62.8%가 남자보다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남자보다 행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대한 소득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특히 남자에 비해 불이익받는다고 생각함.
- 여성용 농기계(농기구) 검토와 재산소유 구조에 대한 사회적 변화인식이 필요
 - ▶ 같은 농업인으로서 남자보다 불이익받는 분야는 농기계사용이 어렵다는 점과 재산소유가 남자위주로 된다는 점을 가장 강력히 지적하고 있음.

- ▶ 여성용 농기계나 농기구는 정책차원에서 검토되어 마련되어야 할 사안이며, 재산의 분배나 소유구조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사.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판단부문

□ 농촌의 미래에 대한 판단

-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
 - ▶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비율이 46.5%, 나쁘게 보는 비율이 30.9%로 대다수 농민들이 농촌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는 비교적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
 - ▶ 긍정적 견해의 배경은 농촌의 장점으로 지적하는 사항인 “먹을 것 자급자족”, “쾌적한 생활환경”, “가족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점”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젊은이나 도시인들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농업·농촌의 장점들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임.

□ 정책 요구분야

- “복지시설 확충”을 가장 중요한 정책개선 요구 과제로 생각
 - ▶ 여러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확충을 제일 우선적인 요구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음.
- 여성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농사여건 개선을 우선 요구
 - ▶ 여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갖춰져야 할 정책적인 요건을 조사한 결과 상위 1,2위는 생활환경 개선, 복지시설 확충이 차지함.
 - ▶ 이는 여성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교육이나 농업경영 교육 등의 전문화 정책에 우선해서 기본적인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농업인후계자 제도에 대한 의견

- 농업인후계자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
 - ▶ 대다수가 동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필요 이유로서는 자금지원 혜택을 가장 많이 꼽고 있어 현실에 바탕을 둔 필요성 인식이라 할 수 있음.
- 동 제도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남자위주로 선발된다는 사실

- ▶ 평가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선발되는 비율이 남자위주라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후계자로 선정후 사후관리 요망

- ▶ 농업인후계자 제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종류별로 보면 지원금액이나 용자조건에 대한 것이 많지만 단일 항목으로는 후계자 선정 후 영농활동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곧 후계자로 선정된 이후에 제대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해 달라는 요구이며, 실제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심사와 선발과정이후에 감독기관이나 지도기관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향후 농림부 산하 행정기관이나 지역의 자치단체들에 대한 이같은 지적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농·축협 조합원 가입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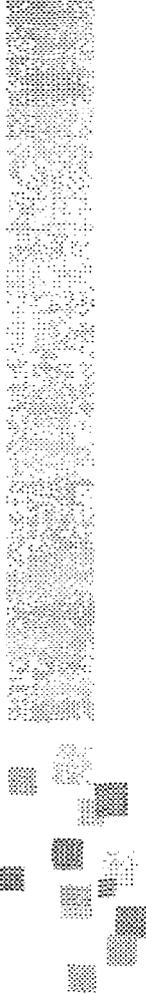
- 집안에 여성 조합원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음

- ▶ 그 이유는 평소에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생각해 보지도 않은 무관심의 이유가 가장 많으며, 여성농업인 자신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됨.

- 조합원이 아니어서 갖는 불만은 대출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 ▶ 이외에 조합원의 단체행동시 제외된다거나 영농교육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불만들이 지적되었음.
- ▶ 이같은 불만은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고 조합원이 되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책 당국에서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조합원으로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여 백



Ⅳ. 여성농업인 관련 기구 및 정책

- 1. 여성농업인 관련정책**
- 2.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
- 3.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의 검토**
- 4. 민간부문의 여성농업인 지원체계**
- 5. 농업·농촌 특용자제도**

여 백

IV. 여성농업인 관련 기구 및 정책

1. 여성농업인 관련정책

- 여성농업인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위상 및 지위정체 등에 의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여성정책에서도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정책의 주요대상에서 예외적인 부문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임.
 - ▶ 해방 이후 4H활동과 농사원 등을 통하여 농촌여성에 대한 지도사업이 실시되었고 1960년대 이후부터는 농촌진흥청과 농협을 중심으로 한 부녀교육, 현재에는 여성농민단체들을 통한 다각적인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 과거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은 주로 의식주 관련 사업이나 저축 촉진 등 주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결과 여성농업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왔음. 현재에는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각종 애로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중임.
 - ▶ 또한 WTO체제에 대응하여 농민에 대한 각종 정책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농가를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대표하는 농업경영주를 주요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비중에 비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심지어 각종 농업·농업인 관련 정책에서 여성은 농업노동력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들어 여성농업인에 대한 생산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몇가지 정책이 도입됨.
 - ▶ 1994년 12월 1가구 1조합원제를 규정하던 농협법을 개정하여 1가구 2조합원제를 시행함으로써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에서 그 가능성이 배제되던 여성농업인의 농협참여가 가능케 됨.
 - ▶ 1994년부터 농업인 후계자를 선발하는데 있어 여성에게는 총 700점중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은 예비후계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음. 또한 농업고등학교나 농과대를 졸업한 여성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도입했음. 이에 따라 1993년 농업인 후계자중 여성후계자가 3.0%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12.9%에 이르고 있음.
 - ▶ 1996년 농림부장관 직속 “농어촌여성정책자문기구”가 설치되었으며,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몇가지 제도적 보완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형편으로 여전히 대다수 여성농업인들의 생산자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임.

2.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

가. 농업·농촌기본법

□ 법 제정 개요

- 21세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정의 방향과 이념을 법제화하여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함.
- 농업·농촌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농업기본법의 선언적인 규정과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구체적·집행적 규칙을 동시에 포함하는 법령으로 특히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수립근거 및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됨.
- 농업·농촌기본법은 이미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1999. 1. 1일자로 제정되었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농업·농촌기본법의 여성농업인 관련 주요 내용

- 농업인의 기준을 1,000m²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또는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작물생산업·축산업·임업에 종사한 자로 규정함.
-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계획에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위한 제도마련·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 후계농업인 선정기준을 일정연령이하의 자로서 농업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 전업농업인 육성대상자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
- 농업·농촌의 발전계획의 수립절차와 중앙농정심의회와 시·도농정심의회, 시·군·구 농정심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나. 농업관련 행정망 및 여성농업인 관련 조직체계

□ 행정조직체계

- 농업·농촌 관련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농림부는 1실7국1과의 조직체계로 구성됨.
 -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밑에 9개의 담당관을 두고 있음(기획예산, 행정관리, 법무, 투자심사, 여성정책, 통계기획, 정보화진흥, 경영유통정보, 비상계획 등)
 - ▶ 총무과
 - ▶ 농업정책국 :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과, 농촌인력과, 협동조합과
 - ▶ 식량정책국 : 식량정책과, 식량관리과, 생산지원과
 - ▶ 국제농업국 : 국제협력과, 통상협력과, 무역진흥과
 - ▶ 농촌개발국 : 개발기획과, 농촌정비과, 농촌용수과, 시설관리과
 - ▶ 유통정책국 : 유통정책과, 유통관리과, 시장과, 가공산업과
 - ▶ 농산원예국 : 농산정책과, 환경농업과,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 ▶ 축산국 :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 축산위생과
- 농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소속기관
 - ▶ 국립농산물검사소 : 4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2부 1과, 국립식물검역소 : 6과
- 기타 농림부 산하 지원기관 : 농진청, 산림청 등

□ 조직체계의 개편현황

1) 중앙행정조직의 개편

- 최근 농림부의 직제개편(1999년 7월1일)
 - ▶ 농림부 일부 과의 소속전환에 의한 업무수행
 - 생산지원과는 식량국으로 환경농업과는 농산원예국으로 소속이 바뀜
 - 생산지원과는 농기계, 비료환경업무, 농약업무를 환경농업과는 기술업무를 담당하며 농산기술과는 농산정책과와 농산업무와 종자업무를 바꿔 수행함.
 - ▶ 도단위 농산물검사소(9개)와 농업통계사무소(11개)를 6개 지소로 통합하여 광역화하고 출장소도 80개 출장소로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함.
 - ▶ 국립동물검역소와 농진청산하의 수의과학연구소를 통합하여 동물검역축산물안전원으로 개편하여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2)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 광역(도)조직의 행정조직개편
 - ▶ 농업관련국은 1국체제로 축소하고 농촌진흥원은 2~3개 과를 축소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일부사업소는 지역에 따라 통폐합되어 농진원으로 흡수되거나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중임.
- 기초단체(군)조직의 행정조직개편
 - ▶ 시·군의 조직은 농정 1~2개 과의 축소와 산업 또는 농정과를 농촌지도소에 이관하여 농관련업무를 지도소가 전담토록 하거나 지역특산품의 육성을 위한 유통특작과 계단위 축소
 - ▶ 자치단체의 농정관련 부서의 축소는 지역농정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축소되고 있어 지역농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기능 재편
 - ▶ 농어촌발전심의회 기능을 종합자금제 시행과 연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시·군 농촌발전계획의 수립과 농림사업의 사후 평가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시·군 농촌발전계획이 중장기 농촌발전의 청사진으로 기능하도록 역할 부여
 - 종합자금제 대상사업은 대출기관의 책임하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원자격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수립
 - 농어촌발전심의회 농림사업 심사·평가의 정례화(연 1회 이상)
 - ▶ 농어촌발전심의회 인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인 참여확대를 유도하여 지역단위의 열린 농정을 실천하기 위해 실무급위원으로 구성

3) 농업관련 정부투자기관 조직체계의 개편

- 3개 조직기구의 통폐합에 의한 농업기반공사(가칭) 신설
 - ▶ 농림부는 생산기반의 정비업무에 관한 기능의 중복과 비효율, 농업인구 비례 관련단체의 과다, 수리체계의 분산에 의한 비효율, 수질관리의 미흡 등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조직체계를 통합하여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가칭)를 설립
 - ▶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은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본부·9개지사·83개지부,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 본부·8개지회, 농지개량조합(농조) 105개 조합을 통합하여 본부와 9개 도사무소, 80개 시·군지소로 체계화하는 것임.
 - ▶ 시·군지소는 현행 농조중심체제로 개편하고 사무소별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예산과 인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예정임.

- 농촌진흥청
 - ▶ 농업진흥청은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지도를 기본 기능으로 하고 있는 농림부 외청으로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차관급청 위상을 확보
 - ▶ 농업진흥청의 직제는 2국 3관 11과 10담당관에서 2국 2관 9과 7담당관으로 개편되었으며, 농업과학기술원과 작물시험장은 그대로 유지되었음.
 - ▶ 농촌진흥청의 업무는 기술연구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보급·지도와 생활개선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행정관리부서 위주의 개편으로 이러한 기능강화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임.
- 협동조합의 개혁
 - ▶ 중앙회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 / 농축협 통합 및 독립사업부제 강화
 - ▶ 신용사업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경제사업부문의 농산물 유통·판매기능 강화로 사업효율성 제고
 - ▶ 부실조합의 과감한 정리 및 조합의 합병 추진
 - ▶ 책임경영체제 확립
 - ▶ 여성복지업무 확대
- 농수산물유통공사
 - ▶ 유통공사는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4본부 15처·실 1원 2사업소의 조직을 3본부 10처·실 1원으로 축소하였고 10개의 지사는 5개 지역단위로 통폐합하였음.
 - ▶ 생산자단체와 중복되는 기능인 물류센터와 직판장, 화훼공판장은 폐지하여 생산자단체에게 매각하고 정부수매·자체비축·생산자조직 수매자금 지원·직거래사업·가격조사·공판 등은 축소 또는 이관토록 함.
 - ▶ 기초식량 비축공급·물류표준화·유통업체 컨설팅·수출지원 등은 유지 및 강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부문의 국가출연 연구기관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 및 올바른 정책판단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많은 정책을 입안·개발하고 있음.
 - ▶ 농경연은 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의 연구기관 개편안에 따라 주무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편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원에 소속됨.

□ 여성농업인 관련 행정조직체계

- 과거 여성농업인은 주로 남성농업인의 보조농업인으로 인식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극히 미약하였음.
- 그러나 농가의 청장년층이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에 의해 산업화가 요구하는 막대한 노동력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소득수준의 향상과 자녀들의 교육문제, 사회복지생활 충족 등을 위해 도시로 이농하게 됨에 따라 농가생활의 대부분이 고령화 여성의 몫으로 남게 되었음.
- 농업·농촌에 대하여 여성농업인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체계 및 이를 이용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응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여성농업인을 위한 총괄적인 담당은 농림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관장함. 또한 농촌여성관련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농촌여성정책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 장관직속 「농촌여성정책자문회의」 구성 : 1996년 4월
 - ▶ 농림부 「여성정책 담당관실」 설치 : 1998년 3월
 - ▶ 농림부소관 위원회 여성의 참여비율 확대
 - 1999년 6월 전체위원(위촉직) 237명중 여성위원 44명(18.6%)으로 여성참여 목표율(23%)에 미흡함.
 - 1998년 : 20% → 1999년 : 23% → 2002년 : 30%

□ 여성농업인 관련 행정조직체계에 있어 애로사항

- 현재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개편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한 경영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한 것으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행정조직체계는 중앙부서로서 농림부내 여성담당관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부이며, 지방조직체계에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상호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체계적인 정책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조직체계의 구성이 필요함. 즉 여성농업인과 지속적인 교류체계를 유지·존속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정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할 것임.

다.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제도

-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의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이 전체적인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여성중 약 1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전업적 농업취업자, 전문적 농업생산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조농업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농촌의 인력구조를 감안해 볼 때 향후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성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업활동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여성농업인 자신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활기찬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나아가 그 역할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육성·지원장치의 마련이 시급함.
- 우리 농업은 제한된 경지규모와 낮은 자본집약도라는 소농구조의 한계에 직면하여 시장경쟁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자로서 겪고 있는 변화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
-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장치로서 1994년 농협법 개정을 시작으로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지위를 인정하는 몇가지 제도가 도입되어 다소나마 실효를 거두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 여성농업인의 생산자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1999. 1월 제정되어 2000. 1월 발효되는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규정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노동력 가치인정,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시행 또는 추진중에 있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해 육성·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 1997년 이후 농업인 후계자 선발시 여성에게 가산점 부여 / 여성신청자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20% 범위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개선
 - ▶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농기계 및 전산교육·훈련

- ▶ 여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성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설치 시행
- ▶ 경상대, 제주대, 경북대에서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여성과정 운영
- ▶ 여성농업인 관련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
- ▶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의 개발·생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농기계 제조업체에 협조의뢰
- ▶ 농림부소관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 확대
- ▶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지역협의체에 여성의 참여 확대방안 강구

3.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의 검토

가.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수립

- 정부는 1998. 8월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함.

□ 계획수립의 배경

- 여성농업인은 농가인구와 농업노동력의 구조변화에 의해 농업생산활동에서 그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 ▶ 1970~1998년 사이에 총농가인구중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3%에서 51.6%로 증가
- 국민의 정부에서 가족농의 유지·발전이 농정의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족농 육성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와 같은 주류화에 부응한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의 재정립 및 권익증진의 필요성 증대
- 21세기 선진사회구현과 국제화에 적극 동참하고 한국여성정책 기조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정체성 확립 및 경쟁력의 강화가 요구됨.

□ 계획수립의 목적

-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활동과 가사활동에 대한 노동가치를 새롭게 평가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여성농업인의 정치·사회·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풍요로운 농촌사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함.

나. 여성농업인을 위한 추진사업 현황

- 여성농업인의 주체적 담당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 ▶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 ▶ 장관직속 농촌여성정책 자문회의 구성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 ▶ 여성농업인 후계자 육성·지원
 - ▶ 여성농업인의 영농·농기계 및 전산교육·훈련
-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행·재정 지원
- 여성농업인이 쉽게 작동할 수 있는 농기계의 개발·생산을 위한 관련부서와 농기계 제조업체와의 협조
- 주요 농업정책결정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유도

다. 여성농업인 정책부문의 기존 문제점

-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및 정보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미비
- 추진체계 미흡
 - ▶ 여성농업인정책의 자문회의 운영실적이 부족하고 부서간의 상호 협조체계 미흡
 - ▶ 여성농업인과의 지속적인 교류체계를 위한 타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교류채널이 확보되지 않음.
-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추진상의 애로
 - ▶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여성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이 소외되는 결과 초래
 - ▶ 여성농업인 교육에 있어서의 현실조건과의 불일치
- 여성농업인 복지혜택의 부족
 - ▶ 여성농업인에 있어 도시 및 타근로 여성들이 가지는 복지혜택의 부재로 출산 등의 모성보호 장치 결여
 - ▶ 농촌지역의 경우 성폭력 등과 같은 각종 폭력사고에 대한 무방비
 - ▶ 농촌지역의 유아 및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시설 등의 부족
-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 결여

라. 개선 정책방안

□ 기본방향

-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추진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여성농업인이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존의 정책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내실화와 새로운 정책 개발·추진
- 여성농업인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추진
- 여성농업인 역할증대에 맞는 사회적 위치 및 지위 보장체계 확립

□ 개선방안

-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지위보장, 전문인력화, 사회 보장혜택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중임.
 - ▶ 각종 농업관련 위원회에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의 보완·정비
-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및 보강
 - ▶ 여성농업인정책 자문회의 운영의 내실화
 - ▶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개최
 - ▶ 여성농업인정책의 종합적 조정을 위한 부내 여성정책협의회 설치·운영
 - ▶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
 -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시·도에 전담부서 지정 촉구
 - 여성농업인정책 집행에 관해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계 구축
 - ▶ 중앙정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 PC통신을 이용한 여성농업인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와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열린 광장”을 개설
- 전문여성 농업인력 육성
 - ▶ 여성농업인 후계인력의 육성 및 제도개선
 - 현황 및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후계자 선발기준 마련
 - ▶ 여성농업인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개발·보급
 - 여성농업인 기초조사를 토대로 농기계개발 보급현황과 농기계 수요 파악
 - 농기계 제조업체에 여성체형에 적합하고 조작이 간편한 농기계 개발 협조 의뢰

- ▶ 여성농업인대상 각종 교육의 내실화
 - 영농·농기계교육, 전산교육, 의식교육 및 여성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등 각 주체에 따른 교육실태 파악과 개발팀 구성
 -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의
- ▶ 특성화 대학에 여성농업인 대상 최고경영자과정 설치 유도
 - 대학별 운용실태조사 및 실효성 평가, 설치가능한 대학과의 협의
-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도·농 여성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 도·농간 사업적 교류를 통해 직거래 체계의 개발
 - 문화적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발전 도모
 - 도·농 연계를 통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 인식
 - 각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회원들에 의한 직거래 장터 도우미 활용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 ▶ 농가도우미 제도(Helper System)의 도입
 - 농촌지역의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여성실업자 고용확대와 은퇴농업경영인 등 고용 재창출
 - 지원대상 : 출산 여성농업인 / 지원기준 : 국고 50%, 자부담 50%
 - ▶ 농촌지역 보육시설 확충 및 질적 수준 향상
 - ▶ 여성농업인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확충
- 여성농업인 사회적 지위향상
 - ▶ 각종 위원회 여성농업인 참여율 제고
 - ▶ 농업관련 지역협의체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 ▶ 양성 평등을 위한 기초조사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사와 농업노동의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남녀간의 균형있는 농업인력 육성·지원
 - 기초조사를 토대로 양성 평등에 관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 농업인·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
 -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시행
 - ▶ 여성농업인 사기진작과 향후 농정홍보를 위한 여성농업인 대회 개최

마. 정책방안의 단계별 추진계획

- 개방농정체제하에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의 증대로 그 역할을 인정받고 농업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관련 각종 육성·지원시책을 앞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단기·중기·장기의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표 IV-1> 여성농업인 정책방안의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단 기 (1998~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적 장치 마련 • 여성농업인 기초조사 • 여성농업인정책 자문회의 발족 및 근거규정 마련 • 여성농업인 대화방 개설
중 기 (1998~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내 여성정책 협의회 설치 •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제도개선 및 연차별 육성계획 수립 •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개발·보급 • 여성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설치 유도 • 도·농 여성단체간 교류 활성화 • 대행서비스제도 도입 • 여성농업인 전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농림부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 농업관련 지역협의체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 양성평등을 위한 기초조사 • 농업인·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강화
장 기 (1999~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정책 자문회의 운영 • 부내 여성정책협의회 운영 • 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 여성농업인대상 각종 교육의 내실화 • 여성농업인 대회 개최 및 대화방 운영 • 농촌지역 보육시설 확충 및 질적수준 향상 • 여성농업인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바.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의 평가

- 향후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의 참여는 주체적인 생산자의 위치에서 전업적이며 전문적인 생산주체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여성농업인을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자 하는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임.
- 이 계획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최초의 정책체계라는 점에서 추진과정의 시행착오를 예견할 수 있는 바,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개선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제정·정비되어야 함.
 - ▶ 여성농업인을 위한 양성평등에 입각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은 여성농업인의 활용도가 높고 현재 변화를 주도하는 농가에서는 젊은 부부가 공동으로 농업에 참여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 ▶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의 개발·보급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농기계를 쉽게 조작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기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실제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농기계 교육의 참여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자적 지위확보를 기대하기 곤란함.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한 실제적인 농기계 접근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 농가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나 영농조합 등에서 제도적·관습적 차별에 의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생산극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영농조합 등에 대한 여성의 참여 보장과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모임을 생산에 연계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
 - ▶ 농촌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에 있어 관련시설 지원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성과는 저조하여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영농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전국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 1995년 1,230개소 → 1996년 1,048개소로 감소
 - 차량운영비 지급대상 농어촌시설 : 1996년 959개소 → 1997년 790개소로 감소

- ▶ 농촌복지정책에서 고령화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생활보장 및 각종 서비스와 여성농업인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건강상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적인 건강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결론적으로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여성농업인이 매우 다양하고 계층별로 상당히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경제활동·복지문제 등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상이한 만큼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실행가능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

4. 민간부문 여성농업인 지원체계

가. 여성농업인단체

□ 기본 개요

-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활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생산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남성과 차별되는 보조농업인으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농업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안정된 환경하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농업인단체의 필요성이 부각됨.
- 여성농업인단체들의 활동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환경개선, 복지시설 확충, 전문농업인력의 육성 등 여성농업인의 권익실현과 정책 등에 대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각계에 인식시키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짐.
- 본 연구에서는 과거 여성농업인 활동의 주축인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이 축소되고 쇠퇴해 가는 가운데 각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한층 부각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운동조직인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연합회의 활동현황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함.
- 이들 단체들은 서울에 총본부를 두고 각 도·시·군별 지부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체 자금조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여성농업인을 대변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들 단체들의 회원수는 적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에 이르는 회원을 가지고 회원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실현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한여농)

- 한여농은 1996년 8월 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동년 8월 24일에 사단법인 승인을 받아 설립된 조직체임.
- 한여농의 목적
 - ▶ 여성농업인후계자와 전국 농업인후계자 부인을 대상으로 조직된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합리화, 과학화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확보와 지위향상 도모, 농촌의 제반문제 해결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여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함.
- 한여농의 현황
 - ▶ 읍면단위를 기초로 한 읍·면연합회, 시·군연합회, 중앙연합회로 구성
 - ▶ 1998년 현재 제주도와 전남을 제외한 6개도 연합회, 64개 시·군연합회와 일부 읍·면연합회가 결성되어 전국 회원 약 3만명을 가진 조직체임.
 - ▶ 1998년 6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회원단체로 가입하여 일반여성단체와의 연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
- 한여농의 주요사업
 - ▶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 농업경영기술 보급과 교류 / 교육·의료·문화·생활개선
 - ▶ 여성농업인 관련 조사연구와 상담 / 여성농업인의 여론조사와 건전한 정책건의
 - ▶ 각종 자료출판과 회보 발행 / 교육 및 연구발표 / 국제교류와 해외연수
 - ▶ 각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연대 및 교류활동 /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 한국여성농민연구소

- 한국여성농민연구소는 1996년 3월 21일에 설립된 연구소로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조사·연구하여 농촌의 발전과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설립된 민간단체임.
- 한국여성농민연구소의 현황
 - ▶ 한국여성농민연구소의 조직체계는 이사 10명, 감사 2명을 갖고 있는 연구소로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이며, 상근 임직원은 5명임.
 - ▶ 한국여성농민연구소의 회원은 1999. 10월 현재 정회원 180명, 준회원 14명, 자료회원 14명을 갖고 있음.
 - ▶ 한국여성농민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농민·농업관련 종사자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자·법인·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 조사연구사업
 - 여성농업인을 전문농업인으로 만들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 농촌지역의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우리 농산물과 농업에 대한 소비자 의식함양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식량자급형 · 환경보전형 · 가격보전형 · 통일대비형 농업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 경제대안마련사업
 - 조사연구사업을 기반으로 여성농업인의 전문농업인화, 평등한 사회, 복지농촌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 ▶ 교육사업
 - 소비자, 소비자단체, 도시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한 농업문제 교육
 - 여성농업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지원
 - ▶ 지원사업
 -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 지원
 - 농산물 가공 유통지원
 - ▶ 기타사업
 - 상담운영 / 출판 및 홍보사업

□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 농협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위해 농협 내부조직체계인 부녀회의 농촌여성을 마을단위로 전국에 걸쳐 조직화함으로써 각종 농업관련 교육 및 생활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전달체계로 활용하고 있음.
- 최근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역할이 점차 커지면서 농협의 시책구현에 있어서도 여성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농협은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의 결성을 통하여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고 있음.
- ▶ 농협은 1971년부터 부녀회를 육성해 왔으며, 보건사회부와 농촌진흥청에서도 각각 농촌 부녀회조직을 육성해 왔음. 1977년 행정지시에 의해 이들 조직은 새마을부녀회로 통합되어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교양지도사업과 가족계획사업, 농촌진흥청은 생활개선사업, 농협은 저축 및 소득증대사업을 담당함.

- ▶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농촌인구 감소와 부녀회원의 노령화로 마을단위 부녀회는 한계에 직면함. 따라서 농협은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1994년 “젊은 농가주부모임”을 조직·육성하였음. 이 조직은 45세 미만의 농가주부를 중심으로 하였음. 1995년 11월에 젊은 농가주부모임의 확대발전을 위해 연령제한의 폭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고 조직명칭도 “농가주부모임”으로 변경하였음. 농가주부모임은 1998년 12월 현재 1,232개의 읍면단위에 37,192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음
- ▶ 농협은 이들에게 영농기술교육 및 농기계 조작훈련 등을 실시하여 농민으로서 자질을 키우도록 하는 한편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생활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여성의 농촌 정착의지를 높이고 있음.
- ▶ 당초 농가주부모임은 단위농협의 단위조직으로 출발하였으나,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여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기 위한 농협 여성조직이 필요하게 되어 연합회의 구성을 추진하였음.
- ▶ 또한 농협은 도시농협을 중심으로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졸업생을 중심으로 주부대학 동창회를 육성하여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우수농산물의 직거래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소비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
- ▶ 한편 기존 농촌 부녀회의 활동은 마을정비사업·생활물자 공동구매·기금마련·경로행사·선진지역 견학 등이 있으나 대부분 활동이 유명무실한 실정임.
- 농촌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의 참여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협은 농가주부모임 등을 내부조직으로 활용하여 생활물자사업이나 농촌 저축사업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또한 젊은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조합운영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조합원과 조합의 밀착된 사업전개가 가능해짐.
- 한편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이들 조직을 통해 소비생활의 합리화와 여가 활용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농협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발판으로 농협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농가경제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의 역할확대가 중요함. 농협과 여성농업인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상호 동반자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농촌지역의 현안문제와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표 IV-2> 농협의 부녀회 및 농가주부모임 주요사업 현황(1998년도)

구 분	부녀회	농가주부모임
조직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단계별 부녀회 육성 • 시범부녀회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위조합·지역본부 1개 이상 • 우수사례발굴시상 • 부녀회장 활동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로운동 참여(조합원 가입) • 모임의 정례화 / 소득사업개발 • 불우이웃·시설 자매결연 • 특기교육 / 품목별 협의회 운영 • 우수주부모임 시상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회장·회원교육 • 조직관리·사업개발교육 • 농가부업교육, 건강교육 • 취미·컴퓨터교육 / 가정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 여성지도자 교육 • 컴퓨터교육 • 생활·가정·영농교육 • 선진해외연수
지역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식문화 계승·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림솥씨, 전통가공식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련 지역단체 교육
소득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공상품화 • 특산품 생산·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농산물 생산·판매 • 전통음식 가공·판매 • 휴경지 재배

자료 : 농협중앙회 내부자료(1999)

□ 생활개선회

- 농촌진흥청은 생활개선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1994. 10월 기존 생활개선부를 재조직한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를 설립, 전국 조직체계하에 운영해 음
- 생활개선회의 목적
 - ▶ 농촌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회원간의 친목 도모
 - ▶ 농촌지역사회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밝은 지역사회 실현
 - ▶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향상
 - ▶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
- 생활개선회의 조직현황
 - ▶ 1998년 12월 현재 전국 시·도 16개 지회, 시·군 171개 지회, 69,305명 회원
- 1998년 생활개선회의 주요 활동과 사업실적
 - ▶ 교육, 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소득향상사업, 회의 및 행사개최, 친목도모 사업
 - ▶ 생활개선교육과 농촌여성 전문인력양성 교육 등의 교육사업
 - 생활개선 과제교육 5,777회(의식주교육, 전통놀이, 예절교육, 농산물가공교육 등)
 - 농촌여성 전문인력화 교육 1,136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 1985년 여성농민운동의 통일과 자주성 모색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어 1988년 3월 “전국여성활동 간담회”가 개최된 자리에서 전국여성농민조직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가 결성된 후, 1989년 12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출범함.
- 전여농의 목적
 - ▶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과 여성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기 위하여 마을·면·군·도 여성농민 대중의 당면투쟁을 지원하고 자주적 여성농민 조직 건설
- 전여농의 현황
 - ▶ 전여농은 마을분회, 면지회, 군여성농민회, 도여성농민회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으로 구성됨. / 1998년 12월 현재 64개 군지회에 7,221명의 회원 확보
- 전여농의 주요사업
 - ▶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민문제를 사회여론화
 - ▶ 여성농민의 의식제고와 여성농민문제의 사회적 관심의 타당성 선전
 - ▶ 여성농민을 위한 각종 정책 제안

□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공공지원

-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매우 미약한 수준임. 여성단체들의 운영은 대부분 가입회원의 회비와 농업생산품의 직거래 장터, 직판·공판 등에 의해 얻은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 (참조) 본 과업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작업에 관한 여성농업인 단체의 자문

- 본 과업에 대한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서를 여성농민단체들과 협의한 결과 문항수의 과다, 여성농업인의 바쁜 일정속에서의 설문에 대한 응답 기피,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낮은 학력 등을 이유로 조사서의 작성 및 회수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임을 지적함.
- 설문조사서의 중복항목을 배제하고 되도록 설문항목을 줄여서 조사토록 조언함.
- 조사과정의 애로에도 불구하고 본 과업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최초의 조사인 바, 정책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자 기준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본 과업이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그것이 정책에 수용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보임.

나. 교육기관 · 전문기관

□ 기본 개요

-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의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진전에 의해 젊고 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의 농가인구가 도시로 이농함에 따라 농촌여성의 영농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농업생산활동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여성농업인들이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구조변화로 농업생산활동에서 명실상부하게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주류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라는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 농산물생산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임.
- 이러한 시대적인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예인력의 확보가 불가피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예인력의 확보를 위한 전문여성 농업인력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유력한 인력양성의 기능을 갖는 기존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체계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함.

□ 기존 교육기관 · 전문기관의 현황

1) 교육기관

- 우리나라의 정규 농업인력 양성은 농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교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계 각급 교육기관을 통하여 많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나, 실제로 영농에 정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임.
 - ▶ 1990년 기준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고 신규로 영농에 정착하는 비율을 보면 농업계 고교졸업자의 31.9%, 취업자의 39.2%임.
- 1998년 기준 전체 고등교육기관(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졸업자의 취업 현황을 보면 전체 244,724명의 졸업자중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는 2,026명으로 0.8%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업관련 취업자는 매우 미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IV-3>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현황

(단위 : 명, %)

연 도	졸업자(A)	취업자(B)	전공취업자(C)	C/A	C/B
1970	13,834	5,052	2,865	20.7	56.7
1975	17,942	6,766	4,214	23.5	62.3
1980	21,764	7,166	4,428	20.3	61.8
1990	17,566	14,269	5,595	31.9	39.2
1998	6,274	-	-	-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8

<표 IV-4>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현황(1998)

(단위 : 명, %)

구 분	취업자수	구성비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2,026	0.8
광 업	652	0.3
제조업	36,817	15.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6,906	2.8
건설업	17,615	7.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478	3.9
운수창고 및 통신업	12,707	5.2
금융·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28,677	11.7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88,347	36.1
기 타	41,499	17.0
계	244,724	10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8

- 전체 졸업자의 직업별 취업현황을 보면, 사무직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농업 관련 업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정예인력의 확보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고등교육기관 졸업인력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는 특단의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IV-5>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직업별 취업현황(1998)

(단위 : 명, %)

구 분	취업자수	구성비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3,209	1.3
전문가	68,871	28.1
기술직 및 준전문가	51,528	21.1
사무직원	73,154	29.9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23,385	9.6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종사자	1,091	0.4
기능원 관련 기능 근로자	10,705	4.4
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4,301	1.8
단순노무직 근로자	1,764	0.7
군 인	6,716	2.7
계	244,724	10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8

<표 IV-6> 전문대학·대학교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현황(1998)

(단위 : 명, %)

구 분	취업자수	구성비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1,399	0.7
광 업	563	0.3
제조업	32,066	16.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575	2.8
건설업	14,063	7.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875	4.5
운수창고 및 통신업	11,237	5.6
금융·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25,490	12.8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1,905	34.0
기 타	32,667	16.3
계	199,840	10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8

<표 IV-7>

전문대학·대학교 졸업자의 직업별 취업현황(1998)

(단위 : 명, %)

구 분	취업자수	구성비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1,572	0.8
전문가	44,154	22.1
기술직 및 준전문가	45,041	22.5
사무직원	65,543	32.8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21,587	10.8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종사자	870	0.5
기능원 관련 기능 근로자	9,853	4.9
장치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	3,876	1.9
단순노무직 근로자	1,530	0.8
군 인	5,814	2.9
계	199,840	10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8

2) 전문기관

- 현재 기존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여러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체계 및 교육내용은 각 기관에 따라 상이함.
- 농촌지도사업
 - ▶ 농촌지도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기존 농업인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농촌진흥청-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연계됨.
 - ▶ 농촌진흥청의 지도사업
 -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사업과 함께 만성적인 식량부족하에서 쌀 증산에 매우 공헌하였음. 그러나 현재의 농촌지도사업의 내용 및 체계는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도 농민교육원
 - ▶ 도에서 농업인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훈련사업으로 1998년부터 대부분 농업기술원과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 ▶ 도 농민교육원의 연수분야는 전문분야와 기타분야로 구분됨. 전문분야는 영농기술과 농업기계교육이고, 기타분야는 농촌사회교육과 새마을 국민교육임.

- ▶ 도 농민교육원의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
 - 교육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활용
 - 영농정보를 우선적으로 보급
 - 현지출장지도
 - 교육이수후 서신 발송
 - 교육수료생 지원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교육원
 - ▶ 공공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 농업인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으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유통교육원이 실시하는 교육임.
 - ▶ 설립목적
 - 농수산물 유통능력제고와 공정거래질서 확립
 - 전문교육을 통한 유통인의 자질향상
 - 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제고
 - 유통지도요원의 양성과 유통시책의 홍보 등
 - ▶ 교육대상
 - 유통관련 공직자, 도매시장 및 산지유통 종사자, 유통조성 관계자, 농업인 등
- 농업협동조합의 각종 교육훈련
 - ▶ 농·수·축협 등 각종 생산자단체는 조합원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과정으로 농협의 교육훈련사업이 있음.
 - 농협의 농민교육은 중앙단위, 시·군지부단위, 회원조합단위에서 실시하고 있음.
 - 조합원에 대한 교육의 목표는 조합원의 주인의식고취와 수입개방에 대응한 우수 농산물 생산능력 제고 및 새로운 영농기술의 보급 등을 들 수 있음.
 - 농협의 농업경영관련 교육중 주요과정을 보면, 1983년에 안성에 농협지도자교육원이 개원되었으며 1984년에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도 연수원을 지도자교육원으로 개편하였고 1984년에는 농협대학에서 새농민기술대학을 신설하여 운영함. 농협지도자교육원에서는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농산물유통과 영농계획을 교육하고 있음.
 - 새농민기술대학은 희망조합원 및 그 가족, 영농후계자를 대상으로 원예·축산 등에 대한 성장작목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농협대학부설 영농교육원에서는 신규 개발작목을 중심으로 교육하며 도 연수원에서는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조합단위에서는 농과계교수,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연구관 및 독농가 등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의 희망작목에 대해 현지교육과 자문을 하고 있음.
- 단위조합에서는 농업경영 및 기술지도, 지역농업개발 및 유통지도 등 농업인 교육을 위한 영농지도원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음.
- 기타
 - ▶ 농업기술자협회의 교육실시와 방송매체에 의한 농업정보제공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VCR이 대량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음.

□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1)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우리나라 농업생산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절반을 여성농업인이 담당하고 있지만,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들은 영농기술수준이 낮고 농기계의 사용률이 낮아 생산성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들의 농업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농기계이용률을 제고시키며 경영능력을 갖춘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체계의 현실적응적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종 교육기관 및 농업관련 기관에서 기존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독자성 유지 및 협조체계의 미흡으로 농업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의 개발의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임.
 -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설치
 - 생산활동의 주체가 여성농업인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남성위주의 교육훈련방식에서 탈피하여 여성농업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이 개편되어 교육훈련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여성농업인의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가능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교육훈련내용에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파악, 이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이 개편되어야 할 것임.

- ▶ 영농 교육내용의 차별화·전문화
 - 제Ⅲ장의 실태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은 연령별·학력별로 매우 이질화되어 있는 실정임. 학력만 보더라도 50대 이상은 저학력 농가여성이며, 30~40대는 고학력 중심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차별화된 현장중심의 영농교육이 바람직하며, 영농교육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여성농업인의 기계화를 위한 농기계의 개발 및 교육 실시
- ▶ 여성농업 전문경영자 양성
- ▶ 여성농업인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 여성농업인의 우수인력양성을 위해 농과대나 농업전문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 여성농업인의 선진농업국에 대한 해외연수를 강화하여 영농의욕의 고취 및 농업기술의 향상을 도모, 우리의 농업을 보다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선진농업기술 및 지식의 습득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산물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
- ▶ 기존 농업인의 능력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및 지도사업의 제공과 관련 각종 공공 및 민간단체의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농업인이 정예농업인력으로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임.

2) 비농업부문 취업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향후 전문농업인 양성에 의해 여성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기계화와 시설자동화가 진전되면 적은 노동력에 의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잉여 농업노동력이 발생,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의로의 이농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여성농업인이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고 현실여건에 대한 적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노무직이나 소득수준이 낮고 취업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직종을 가질 확률이 높음.
-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비농업부문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합당한 교육훈련 실시, 취업정보 제공, 부업알선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5. 농업·농촌 투융자제도

가. 농업·농촌 투융자제도의 지원방향

□ 투융자제도의 필요성

- 투융자제도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됨. 1단계 42조원의 투융자 계획은 1998년말로 마무리되었으나, WTO의 협정이행이 완료되는 2004년까지 농업·농촌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하에서 새로운 농업·농촌의 투융자계획이 실행되고 있음.
- 그 동안 집중적인 농업투자로 생산기반정비, 유통개선, 구조조정촉진 등 농업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가 세워졌다는 평가임.
- 농업분야는 투자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선진국에 비해 투자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됨.
-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농정방향을 정립하고 실천적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농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농촌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였는 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투융자가 필요한 상황임.

□ 투융자사업의 문제점과 성과

- 투융자사업의 문제점
 - ▶ 투융자사업은 단기간에 다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융자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과 비효율성이 제기되었으며, 농업부문의 투자에 대해서도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시설과 장비위주의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능력·유통·환경·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부문은 미흡한 실정임
 - 일부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부적격자의 선정, 사업비 유용, 정책자금의 불법·부당 사용 등 비리·부조리 사례가 발생하였음.
 - 사업과 사업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못함.

- ▶ IMF 경제위기가 고조된 이후 증가된 금융비용과 농산물 소비위축으로 자본·시설 집약 농업부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환율상승에 의한 국민소득이 1990년대로 후퇴하면서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에 의한 수익성 악화, 경영비 상승 등으로 경영부담 가중
- 투융자사업의 성과
 - ▶ 대규모의 투융자지원으로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이 확충되고 영농의 규모화·전문화의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기반 구축
 - 중앙정부의 투융자액은 39조 7천억원이며, 농업인에 대한 직접투융자액은 19조 1천억원에 달함.
 - 쌀의 자급도를 안정적으로 유지
 - 시설현대화 및 저장시설의 확충으로 연중 생산·저장이 가능하여 신선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 농산물가격의 연례적인 등락현상이 없어져 전체 물가안정에 기여
 - ▶ 축사 및 재배시설의 현대화에 힘입어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돼지고기, 화훼 등의 농축산물의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
 - ▶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경제·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

<표 IV-8>

농축산물의 수출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93	1998
농산물 수출액	1,264	1,700
돼지고기 수출액	63	313
화훼 수출액	4	12

나. 농업·농촌 투융자제도의 개선방안

□ 보조·융자 지원체계의 개편 및 사후관리 강화

- 농업인, 생산자조직·단체에 대한 보조의 단계적 축소
 - ▶ 보조는 원칙적으로 생산·유통기반시설 등 농업 SOC성격의 공공사업과 환경농업 목적사업 등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국한하여 지원
 - ▶ 융자 지원조건은 사업성격에 맞도록 체계적인 정비

- 농업관련 기금의 정비
 - ▶ 현행 서로 다른 농업관련 기금의 체계적 정비
 - ▶ 정부차원의 기금통합방침과 조화되도록 탄력적으로 대응
-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으로 비리·부실발생 척결
 - ▶ 투융자사업중 일부가 경험 미숙, 업자농간,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비리와 부실 발생
 - ▶ 비리·부실척결을 위한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으로 단속 강화

□ 농업경영 종합자금제도 도입

- 과거 공급자 위주의 지원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적기적소에 종합지원하는 농업경영 종합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비리·부실발생의 방지

<표 IV-9> 자금지원방식의 비교분석

구 분	현행 사업별 지원제도	종합자금지원제도
주체	공급자 위주	수요자 중심
지원대상	신청자의 개별사업	경영체의 종합사업계획서
대상자선정	시장·군수	대출취급기관
선정·지원시기	년 1회 일괄 선정	수시 선정·지원
사후관리	채권관리 중심	경영·기술컨설팅 중심

자료 : 농림부 내부자료

다. 농업·농촌 투융자 규모(1999 ~ 2004) 및 지원항목

□ 투융자 규모

- 투융자 계획기간 :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 투융자규모 : 총규모는 45조원, 중앙정부 투융자규모는 37조8천억원

<표 IV-10> 재원별 투융자 소요 예상액

재원별	투융자 소요액	구성비(%)
중앙정부투융자 지방비 등	37조 8,384억원 7조 2,142억원	84.0 16.0
총투융자규모	45조 526억원	100.0

자료 : 농림부 내부자료

□ 지원항목별 투융자 규모

- 지원부문 및 지원규모
 - ▶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 15조55억원
 - ▶ 농업경영체 육성 : 7조4천822억원
 - ▶ 농림업의 부가가치 제고 : 2조4천38억원
 - ▶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 9조3천750억원
 - ▶ 지역개발과 복지확충 : 7조7천912억원
 - ▶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 2조9천949억원

<표 IV-11>

지원항목별 투융자 규모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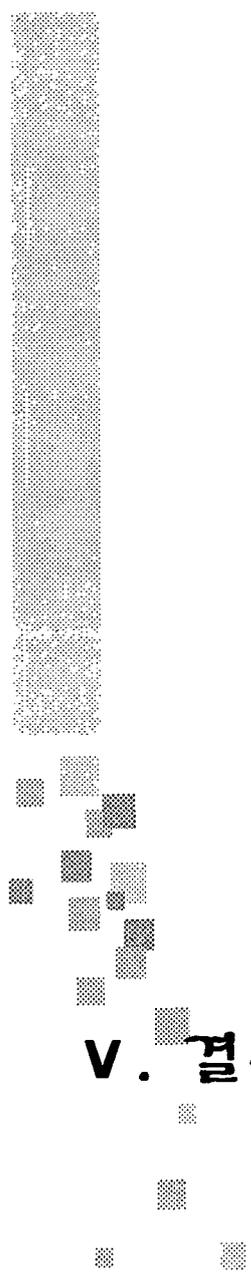
구	분	총투융자	중앙정부	지방비 등
1.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확충		150,055	131,776	18,279
	▶ 배수개선·용수개발			
	▶ 친환경농업육성			
	▶ 산림자원 확충 등			
2. 농업경영체 육성		74,822	62,633	12,189
	▶ 교육 및 훈련			
	▶ 경영체 지원 등			
3. 농림업의 부가가치 제고		24,038	21,059	2,979
	▶ 기술개발 및 정보화			
	▶ 농림업 관련 산업육성			
	▶ 품목관련 일반 지원 등			
4.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93,750	77,276	16,474
	▶ 농림산물 유통개혁			
	▶ 수출농림업 육성			
5. 지역개발과 복지확충		77,912	55,691	22,221
	▶ 복합산업 공간화			
	▶ 농촌생활 환경개선			
	▶ 농촌복지 확충 등			
6.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29,949	29,949	
	▶ 자금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 농업인 부담 경감 등			
합	계	450,526	378,384	72,142

자료 : 농림부 내부자료

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농촌 투융자제도의 지원방향

- 21세기 여성농업인의 농업 및 농촌에서의 역할은 보조적인 역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현재까지의 투·융자제도의 지원상황을 볼 때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구조개선에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향후 농업이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에 있어 절반 이상의 노동력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농업·농촌의 투융자제도는 농업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의 주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방향
 - ▶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융자
 - ▶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
 - ▶ 여성농업인의 기계화작업을 위한 농기계 개발 및 연구 지원
 - ▶ 차별화된 영농교육에 대한 지원
 - ▶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수 기회 확대
 - ▶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활환경 및 복지확충에 대한 지원
 - ▶ 기타 여성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및 부담 경감

여 백



V. 결론 및 건의

여 백

V. 결론 및 건의

1. 요약 및 결론

□ 본 조사연구 과업의 목적

- 전국 대상 여성농업인의 의식·행태 및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서비스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각 조사자료의 상호보완을 통한 정책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21세기 농업·농촌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농업·농촌의 현실과 미래

-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위상변화
 - ▶ 농업부문의 비중 감소
 - 국내총생산에서 농업비중은 1970년 23.3%에서 1998년 4.4%로 급격하게 감소
 - ▶ 농촌인구의 감소 /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여성인구비 증가
 - ▶ 도·농간 불균형성장
 - ▶ 농업부문의 경쟁력 약화에 의한 농촌의 빈곤화

□ 농업·농촌의 21세기적 의미

- 21세기 농업·농촌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기간산업으로서,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산업으로서, 그리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먹거리산업으로서 다면적인 역할을 국민경제로부터 요구받게 될 것임.
- 21세기 농업·농촌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
 - ▶ 농업의 산업화·규모화
 - ▶ 여성농업인의 위상정립 및 육성
 - ▶ 농업인력의 육성 및 농민의 전문경영자화
 - ▶ 농촌의 인간정주의 생활공간화

□ 농업·농촌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역할

- 여성농업인은 변화되는 농업환경하에서 실제 노동역할이 부각되고 창조적인 경영의사가 반영되어야 농업발전과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임.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인 역할증대와 위상정립에 따라 농업생산에 있어서도 여성농업인이 육성되어야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보호,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1세기 여성농업인의 역할
 -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참여 · 역할 증대
 - 지역발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 지역사회 정화를 위한 각종 여성단체참여
 - ▶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활동에서의 부각
 -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에 있어 주류화
 -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비중 증대
 - 여성농업인의 경제작물 생산 및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
 - ▶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및 정책참여에 대한 역할 증대
 - 농업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치적 참여 증대
 - 여성의 의회 참여
 - 각종 위원회 여성농업인 참여
- 21세기 여성농업인은 사회적인 역할증대와 위상정립에 따라 농업의 생산량 증대,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및 농기계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등 우리농업과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 농촌생활
 - ▶ 대부분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농촌지역 거주가 시작됐으나 일부 젊은 층에서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농촌 거주경향을 보임으로써 농업·농촌이 적정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차세대에 대한 유인력을 가질 가능성 제시
 - ▶ 자신의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득이 낮다는 것과 자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에는 민감한 문제의식을 지님.
 - ▶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상 농업인으로서나 주부로서의 현재 역할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닌 만큼 그 의사가 자발적 의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생활환경·생활조건 개선 필요
 - ▶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모두에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어 근본 대책 요망

- ▶ 주택 내부조건은 상대적으로 많은 개선·개량이 있는 반면 하수처리 등 환경관련 기반시설은 여전히 취약
- ▶ 에어컨과 컴퓨터가 가장 장만하고 싶은 가전용품으로 등장
- 경제생활
 - ▶ 소득과 부채 모두 급속 증가
 - ▶ 가정내의 경제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
 - ▶ 배우자가 사망한 고령의 여성농업인이 상속 등에 의해 자신명의의 농지를 보유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 농업노동
 - ▶ 농촌생활의 가장 큰 애로는 생산비 이하의 농산물 가격이며 그 다음이 힘든 농사여건과 가사일 병행으로 모두 노동력과 관련되어 있음. 즉 노동의 절대투하량이 크다는 것과 그것이 경제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큰 고통으로 요약됨.
 - ▶ 농업노동에서 여성주류화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용 농기계(농기구)의 개발·보급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
 - ▶ 선택할 수 있다면 대부분 이농의사를 갖고 있는 바, 그 1차적 요인은 소득보장이 안된다는 것으로 농업·농촌의 근원적 문제 내지 여성농업인 후계자 양성의 핵심요건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줌.
- 생활복지
 - ▶ 의료환경의 낙후성에 불안해 하고 의원·병원시설 확충 요망
 - ▶ 상설 보육시설 설치로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을 구조적으로 분담 필요
 - ▶ 농사일이나 자신의 계발 모두를 위해 교육을 받기를 원하며 특히 컴퓨터교육에 대해 강한 의욕을 보임. 그러나 컴퓨터 보급상황에 비해 대부분 사용능력은 없어 활용교육과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활동 / 남녀평등
 - ▶ 자발적인 지역사회 활동의욕을 갖고 있음.
 - ▶ 여자로서 남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의식이 일반적이며 특히 노동대가, 재산소유, 농기계 사용 등에 있어 불평등 의식이 강함.
- 농업정책에 대한 판단
 - ▶ 농촌의 미래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이며 농업의 장점에 대해서도 인식함.
 - ▶ 생활자체로서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서나 복지정책 확충을 가장 크게 요구

- ▶ 자금지원을 이유로 농업인 후계자를 선호하는 반면 여전한 남성위주 선발과 사후관리 미흡에 불만을 갖고 있음.

□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

- 현재 여성농업인을 위한 총괄적인 담당은 농림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관장함.
 - ▶ 농림부 「여성정책 담당관실」 설치 : 1998년 3월
 - ▶ 장관직속 「농촌여성정책자문회의」 구성 : 1996년 4월
 - ▶ 농림부소관 위원회 여성의 참여비율 확대
- 여성농업인에 대한 생산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정책 도입
 - ▶ 1994년 12월 1가구 1조합원제를 규정하던 농협법을 개정하여 1가구 2조합원제를 시행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농협참여가 확대 가능케 됨.
 - ▶ 1994년부터 농업인 후계자를 선발에 있어 여성농업인 가산점 부여
 - ▶ 1996년 농림부장관 직속 “농어촌여성정책자문기구”가 설치되었으며,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아직 제도적 보완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형편으로 여전히 대다수 여성농업인들의 생산자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임.
- 여성농업인 지원제도
 - ▶ 여성농업인 후계자 육성·지원
 - ▶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농기계 및 전산교육·훈련
 - ▶ 여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성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설치 시행
 - ▶ 여성농업인 관련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
 - ▶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의 개발·생산을 위한 관련부서와 농기계 제조업체에 협조 의뢰
 - ▶ 농림부소관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 확대,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지역협의체에 여성의 참여 확대방안 강구

□ 향후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위상

- 변화되는 농업환경하에서 농촌의 절대적 노동력 부족을 농촌여성으로 대체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활동의 참여가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의 주체인력으로 대두되고 사회·경제·정치적 참여가 활발함에 비추어 그 위상과 지위는 매우 낮게 평가됨.
-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위상정립 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체계의 구축·강화로 농업생산에 있어서도 전문 여성농업인이 육성되어야 우리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보호,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정책건의

□ 농사여건/자녀교육여건에 대한 불만요인 해소가 정책수립의 핵심임을 인식

- 농촌생활, 노동실태, 정책요구사항 등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불만요인은 “낮은 소득(생산비이하의 농산물 가격)/ 힘든 농사여건/ 취약한 자녀교육여건” 등 세 가지가 지적되고 있음
 - ▶ 농촌의 소득문제는 여성농업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 전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정책개선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힘든 농사여건과 ”취약한 자녀교육여건“ 개선에 1차적인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여성용 농기계(농기구) 수요에 대한 현실적 대응

- 여성용 농기계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본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원하는 장비들은 모두 비교적 고가의 기계로, 이를 여성체형에 맞게 개조해서 생산·판매까지 이르려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고가의 농기계 개량에 앞서 밭 작물등에 쓰이는 간단한 농기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성용으로 개조하는 연구가 선행될 것이 요구됨.

□ 보건 의료시설에 대한 현실적 대응

- 가장 선호하는 병원이나 의원의 경우, 일반 병·의원이 대부분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의료시설이라는 점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성향을 충족시키기에는 정책적으로도 한계가 있어 보다 현실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
 - ▶ 병·의원 다음으로 접근처에 있기 원하는 진료기관이 보건소인데 현재는 있는 보건소조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여서 진료기관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운 난제로 판단됨.

□ 여성농업인에 대한 컴퓨터교육의 확대·강화

- 컴퓨터교육에 대한 열망에 부응할 필요
- 기존 교육프로그램에 컴퓨터교육을 포함하는 교육프로그램개발 필요성 제기
- 아울러 농사·생활에 컴퓨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강화

□ 여성지위 향상관련 사회인식 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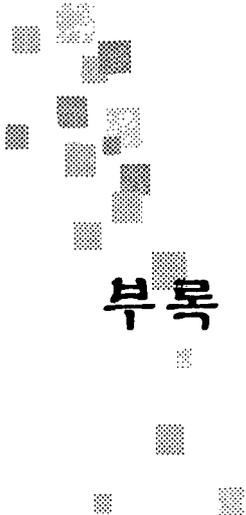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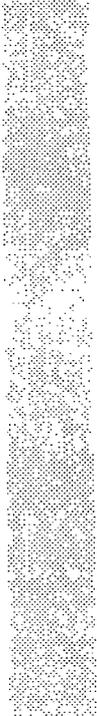
- 같은 농업인으로서 남자보다 가장 불이익받는다 고 지적된 “농기계사용이 어렵다”는 점과 “재산소유가 남자위주로 된다는 점”의 해결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여성용 농기계나 농기구는 정책차원에서 검토되어 마련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재산의 분배나 소유구조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인 제도보완과 공동노력 경주

□ 여성들의 농촌거주 및 유입 촉진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 농촌에 대한 미래 전망에 있어 여성농업인 스스로 희망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향후 농촌의 생활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만 있으면 자발적인 농촌거주 성향을 가진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농촌 유입이 촉진될 전망.

□ 기타 제반 정책요구사항

- 농촌 기간시설(생활환경, 복지시설 등) 개선이 제반 정책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
- 농업인후계자 제도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실제로 선발되는 비율이 남자위주라는 점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하지만, 여성이사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급의 진출은 조합출자금에 비례하므로 실제로 참여의 기회가 많지 않음. 따라서 협동조합에 여성의 적극 참여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조직이나 부서에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모색되어야 함.



부록 : 실태조사 설문지

여 백

여성농업인의 의식 및 생활 · 근로환경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얼경제사업연구원은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의뢰로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전국에 걸쳐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오늘날 여성농업인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21세기 여성농업인의 비중에 걸맞는 권리신장과 복지혜택 부여를 위해 1998년 8월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농촌의 여성농업인들이 어떤 생활환경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에 어려움을 느끼며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는 각종 사연들이 소상하게 파악되어야 하는 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설문지가 바로 그러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노력 중 하나인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하루에 설문응답이 피곤하시리라 염려됩니다만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현재와 미래의 여성농업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기쁨지게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고 적극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컴퓨터로 처리되어 개인신상은 전혀 드러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응답한 설문지는 바로 작성하여 설문지를 나눠준 분께 도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댁내 모든 식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순조롭게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99. 7.

주 관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전화 : 02-503-7294)

조사기관 : 한 얼 경 제 사 업 연 구 원
문의전화 : (02) 525 - 2961~5

- 이 설문지에 대해 응답하시는 분은 300평이상의 농지를 경작하시거나, 또는 1년에 90일이상 직접 농사 일을 하시는 여성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설문지 작성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도 상관없으나 응답자 본인의 생각과 처지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 질문에 대한 답은 해당번호에 ○표, 별도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지시문대로, 기타에 응답하시는 경우에는 ()안에 구체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6. 향후 귀하가 희망하는 본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가사일에만 충실한 가정주부(전업주부)
 ② 가사일도 하면서 농사 일에 협력하는 여성농업인
 ③ 전문적인 여성농업 경영인
 ④ 따로 직장에 다니는 직장여성
 ⑤ 따로 자기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또는 사업가
 ⑥ 기타()

7. 귀하는 농사 일을 제외한 가사 일을 하루에 몇시간 정도 하십니까?

1) 농번기 : 하루에 _____ 시간 2) 농한기 : 하루에 _____ 시간

8. 귀댁의 가사일을 100으로 볼 때 누가 어느 정도 분담하십니까 ?

구 분	(시)부모	자녀	남편	(시)누이	나(본인)	기타	합 계
농번기							100
농한기							100

※ 기타는 누구입니까? ()

9. 귀댁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해당번호에 ○표 하십시오)

가옥형태	① 한옥 기와집 ② 함석 및 스투트집 ③ 양옥(슬라브집) ④ 아파트 ⑤ 연립주택 ⑥ 기타()
식 수	① 상수도 ② 자가 수도 ③ 우물·샘 ④ 기타()
하수시설	① 집밖의 하수관과 연결됨 ② 집밖에 하수관 없음
목 욕 실	① 있음(화장실내에 있는 것도 포함) ② 없음
취 사	① 연탄 ② 장작 ③ 기름 ④ 가스 ⑤ 전기 ⑥ 기타()
부 역	① 재래식 ② 현대식(입식)
난 방	① 연탄 ② 장작 ③ 기름 ④ 가스 ⑤ 전기 ⑥ 기타()

10. 아래 항목에서 귀댁에 없는 것을 골라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 ① TV ② 오디오(전축) ③ 세탁기 ④ 냉장고 ⑤ 컴퓨터 ⑥ 전화
 ⑦ 자가용차 ⑧ 상수도 ⑨ 신문 ⑩ 가스시설 ⑪ 에어컨 ⑫ 선풍기
 ⑬ 전자렌지 ⑭ 휴대폰 ⑮ 전기밥솥 ⑯ 기타()

16. 귀댁에서는 아래의 일을 주로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구 분	남편	본인 (부인)	부부가 공동 결정	남편주도, 나와 상의 하여 결정	내가주도, 남편과 상의 하여 결정	기 타
농사일정 짜기						
품종 선택						
영농자재 구입						
외부인력 고용						
농산물 판매						
농지구입·매각						
영농자금 관리						
생활자금 관리						
저축 가입						
영농자금 차입 (대규모)						
생활자금 차입 (소규모)						

※ 기타의 경우는 누구입니까? ()

III. 농업노동 / 취업기회

17. 귀하는 일년에 며칠정도 농사일을 하십니까?

구 분	연 간	하루 평균
농 번 기	_____ 일	_____ 시간
농 한 기	_____ 일	_____ 시간

18. 귀댁의 농사일을 100으로 볼 때 누가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습니까?

구 분	본인	남편	(시)부모	자녀	그 밖의 식구들	외부노동력
농번기(%)						
농한기(%)						

※ 그 밖의 식구들은 누구입니까? ()

35-3. 컴퓨터를 이용한 농업관련 정보수집은 주로 무엇을 통해 하십니까?

- ① 동호회 ② 농수산물정보망(AFFIS) ③ 농림부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검색
 ④ 농림부 이외 관련기관(대학등)의 홈페이지 검색 ⑤ 컴퓨터 이용 안함
 ⑥ 기타()

35-4. 컴퓨터를 통해 얻는 정보중 가장 필요로 하는 영농관련 정보는?

- ① 영농기술 ② 농산물 가격동향 ③ 농산물 수급전망 ④ 영농인들의 동태
 ⑤ 해외 정보 ⑥ 컴퓨터 이용 안함 ⑦ 기타 ()

V.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여성지위 향상

36. 귀하는 현재 마을 부녀회나 여성단체 간부등의 직위를 갖고 싶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6-1. 위의 항목에서 ①번(예)에 답하셨다면 그 가장 큰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활동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② 직위가 없는 사람에 비해 물질적으로 혜택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③ 직위가 없는 사람에 비해 이웃의 도움을 받기 수월하기 때문에
 ④ 직위가 없는 사람에 비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기 수월하기 때문에
 ⑤ 직위가 없는 사람에 비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⑥ 직위를 갖는 것이 좋아서
 ⑦ 기타()

37. 지역사회 활동(부녀회활동, 기타 여성단체 조직으로서의 활동등)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요인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 ① 집안에서 비협조적이다
 ② 시간을 많이 빼앗겨 집안 영농활동에 지장을 준다
 ③ 관련기관(농·축협과 정부 행정기관)에서 비협조적이다
 ④ 시간이나 거리관계상 모이기가 쉽지 않다
 ⑤ 내 스스로 모임이나 활동을 싫어한다 ⑥ 기타()

38. 귀하가 현재 회원으로 가입하고 계신 여성단체는 무엇입니까?

- ① 생활개선회(생개회) ② 농가주부모임 ③ 한국여성농업인회(한여농)
 ④ 전국여성농민회(전여농) ⑤ 가입 안함 ⑥ 기타()

39. 귀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3. 귀댁의 소득이나 재산이 귀하 명의로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고 싶어서 ② 살림살이하는데 정당한 주도권 행사
 ③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 ④ 노후보장을 위해 필요
 ⑤ 여성차별의식 해소 ⑥ 누구의 명의이든 상관없음
 ⑦ 나하고는 관계없음(소득과 재산이 현재 내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⑧ 기타이유()

VI. 농업·농업정책에 대한 판단

44. 향후 농촌이 도시에 비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촌이 훨씬 살기 좋을 것이다 ② 농촌이 약간 살기 좋을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도시가 약간 살기 좋을 것이다
 ⑤ 도시가 훨씬 살기 좋을 것이다

45. 농업인으로서 귀하가 느끼는 농업·농촌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① 먹을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③ 인간관계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④ 일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⑤ 일할때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⑥ 노력한만큼 대가를 받는다
 ⑦ 가족과 함께 일할 수 있다 ⑧ 노후 걱정을 안해도 된다
 ⑨ 자본이 많이 들지 않는다 ⑩ 기타()

46. 농업·농촌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① 생활하기에 불편하다 ②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③ 일이 많다 ④ 농약에 노출되는등 인체에 해로운 환경에 있다
 ⑤ 노력한 대가가 미흡하다 ⑥ 자녀교육이 어려운 여건에 있다
 ⑦ 자녀들이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다 ⑧ 노후 대책이 없다
 ⑨ 자본이 많이 든다 ⑩ 기타()

47. 아래 항목중 여성농업인으로서 귀하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① 여성 농업전문인력 육성 ② 농가소득·재산에 대한 여성의 소유권 인정
 ③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④ 여성용 복지시설 확충
 ⑤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 ⑥ 임신·출산시의 일손 대책
 ⑦ 기타()

52. '농업인후계자'제도에 대해 여성으로서 갖는 불만은 무엇입니까? 있는대로 해당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
- ① 평가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②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은 없지만, 남자후계자 위주로 선발된다
 ③ 여성에 대한 가점이 낮다 ④ 연령제한(40세미만)이 너무 낮다
 ⑤ 미혼여성의 연령제한(30세미만)이 너무 낮다
 ⑥ 한 집에서 2인이상 또는 부부가 각각 후계자로 선정되기는 불가능하다
 ⑦ 모르겠다 ⑧ 기타()
53. 평소에 '농업인후계자' 지원내용에 대해 가장 바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1인당 지원금액 확대 ② 용자조건 완화 ③ 자금 사용용도 완화
 ④ 영농상담·기술교육 철저 ⑤ 해외연수기회 확대 ⑥ 여성후계자 배려
 ⑦ 모르겠다 ⑧ 기타()
54. 귀하를 포함한 귀댁의 여자식구중 현재 농협이나 축협 조합원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55. 농·축협의 조합원은 한 집에서 2명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귀댁의 여자중 농·축협의 조합원이 되고 싶지만 아직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남자식구가 모두 가입함 ② 2명까지 되는 줄 몰랐음
 ③ 여자는 가입을 안 시켜 줌 ④ 출자금등 비용부담 때문
 ⑤ 여자가 꼭 조합원일 필요는 없음 ⑥ 생각해 본적 없음
 ⑦ 기타()
56. 귀하가 농·축협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아래 항목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 () - () - ()
- ① 농·축협에서 대출받기가 어렵다 ② 농산물 계통출하시 불이익을 당한다
 ③ 영농법인체 설립이 안된다 ④ 영농교육 참여대상에서 제외될 때가 있다
 ⑤ 조합원 단체행동시 제외된다 ⑥ 집안에 조합원이 있어 불편한 점이 없다
 ⑦ 집안에 조합원이 아무도 없지만 불편한 점이 없다
 ⑧ 기타()

※ 아래 항목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답자 일반사항

주 소	도 시 구 군 읍 면	성 명 :	
		전화번호 : () -	
나 이	현재 나이: 만 _____ 세,	혼인여부	①미혼 ②기혼(남편있음)
	결혼 나이: 만 _____ 세에 결혼		③기혼(남편없음-사별등)
학 력	① 국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졸 ⑤ 대졸이상 ⑥기타()		
가족관계	같이 사는 가구원 : 남자 _____ 명, 여자 _____ 명		
	외지에 나가 있는 가구원 : 남자 _____ 명, 여자 _____ 명		
응답자 신분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아내 ③ 가구주의 (시)어머니 ④ 가구주의 며느리 ⑤ 가구주의 딸 ⑥기타()		
거주지 특성	① 평야지역 ② 산간지역 ③ 평야와 산간의 중간지역 ④ 도시지역		

이상의 질문과 응답 이외에 평소 주장하고 싶거나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써 주십시오.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긴 설문에 응답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